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 I )

##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이윤진·최윤경·김영민

연구보고 2023-20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 I )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저 자

김동훈, 이윤진, 최윤경, 김영민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영 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20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Ⅰ)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 2269-991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68-8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그동안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보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2018-2021) 등, 국정과제 이행 분석을 위한 육아정책 전반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제를 다년도 연구로 수행해 왔다. 2023년은 유보통합이라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의 큰 정책적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양육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확대 속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핵심 과제와 주요 어젠더를 고려하여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성과 미래대응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은 영유아기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하여, 육아 및 교육·돌봄 정책에 관한 국가 핵심과제를 담는 중요한 부분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험/재난 및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생애초기 유아교육·보육의 주요 어젠더는 전환기적 변화의 과정에 있다. 초저출생의 추세와 인구 구조의 가파른 변화가 진행 중으로,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책 수행의 실질적 효과와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수행된 본 연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수행하는 연속과제로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분야의 설계와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첫 번째 결실이다. 현 정부의 ECEC 관련 국정과제 수행과 이행의 단계별로 핵심과제 도출 및 성과와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1년차로 정책 이행의 종합 및 부문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 목차

<b>요약</b>	<b>1</b>
<b>I. 서론</b>	<b>9</b>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3
4. 선행연구	18
<b>II. 유아교육·보육 정책 및 추진현황</b>	<b>31</b>
1. 유아교육·보육 정책 현황	33
2. 그간의 부처별 정책 추진 실적	43
<b>III. 유아교육·보육 정책 범주 및 분석 틀</b>	<b>49</b>
1. 성과 개념	51
2. 성과분석 범주	52
3. 성과분석의 틀	53
<b>IV. 2023년 유아교육·보육 정책 성과 분석</b>	<b>55</b>
1. 육아정책 이용경험 및 만족도: 수요자 조사 분석	57
2.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우선순위	97
3.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주요성과	115
4. 소결	136
<b>V. 정책 제언</b>	<b>141</b>
1. 현금지원 정책	143
2. 서비스 지원 정책	144
3. 시간지원 정책	145

---

<b>참고문헌</b>	<b>151</b>
<b>Abstract</b>	<b>155</b>
<b>부록</b>	<b>157</b>
부록 1. 부모 조사 질문지 .....	157
부록 2. 전문가 조사 질문지 .....	177
부록 3. 육아정책 관련 부모 면담지 .....	190
부록 4.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정과제 ..	192
부록 5.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표 .....	198

---



## 표 목차

〈표 I-3-1〉 부모면담 .....	14
〈표 I-3-2〉 유아교육·보육 성과 관련 부모 조사 대상 .....	16
〈표 I-3-3〉 전문가 응답 현황 .....	17
〈표 I-4-1〉 ‘2010-2015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	19
〈표 I-4-2〉 ‘2010-2015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	20
〈표 I-4-3〉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구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 목록(1) .....	22
〈표 I-4-4〉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구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 목록(2) .....	26
〈표 II-1-1〉 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정과제 및 부처 업무계획 .....	33
〈표 II-1-2〉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목표치 .....	37
〈표 II-1-3〉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 목표치 .....	41
〈표 II-2-1〉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	43
〈표 II-2-2〉 2021년 교육부 성과 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	46
〈표 II-2-3〉 2021년 여성가족부 성과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	47
〈표 III-1-1〉 성과지표 유형 .....	52
〈표 IV-1-1〉 육아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	57
〈표 IV-1-2〉 육아지원 서비스(어린이집) 만족도 .....	58
〈표 IV-1-3〉 육아지원 서비스(유치원) 만족도 .....	59
〈표 IV-1-4〉 육아지원 서비스(공공아이돌보미) 만족도 .....	59
〈표 IV-1-5〉 육아지원 서비스(민간육아도우미) 만족도 .....	60
〈표 IV-1-6〉 육아지원 서비스(시간제보육) 만족도 .....	61
〈표 IV-1-7〉 육아지원 서비스 불만족 이유(전체) .....	62
〈표 IV-1-8〉 육아지원 서비스(어린이집) 불만족 이유 .....	62
〈표 IV-1-9〉 육아지원 서비스(유치원) 불만족 이유 .....	63
〈표 IV-1-10〉 육아지원 서비스(공공아이돌보미) 불만족 이유 .....	64
〈표 IV-1-11〉 육아지원 서비스(민간육아도우미) 불만족 이유 .....	65
〈표 IV-1-12〉 육아지원 서비스(시간제보육) 불만족 이유 .....	66
〈표 IV-1-13〉 연장보육 이용 경험 .....	67

---

〈표 IV-1-14〉 어린이집 보육시간 운영방식(기본보육 시간+연장보육 시간) 만족도 .....	68
〈표 IV-1-15〉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경험 .....	68
〈표 IV-1-16〉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 만족 .....	69
〈표 IV-1-17〉 초등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	70
〈표 IV-1-18〉 초등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 만족도 .....	70
〈표 IV-1-19〉 초등돌봄 서비스(초등학교 방과후과정) 만족도 .....	71
〈표 IV-1-20〉 초등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만족도 .....	72
〈표 IV-1-21〉 초등돌봄 서비스(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 .....	73
〈표 IV-1-22〉 초등돌봄 서비스(육아/마을공동체 돌봄) 만족도 .....	74
〈표 IV-1-23〉 초등돌봄 서비스(늘봄학교) 만족도 .....	74
〈표 IV-1-24〉 초등돌봄 서비스 불만족 이유(전체) .....	75
〈표 IV-1-2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	76
〈표 IV-1-2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만족도1 .....	78
〈표 IV-1-27〉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만족도2 .....	79
〈표 IV-1-28〉 현금지원 제도 불만족 이유 .....	81
〈표 IV-1-29〉 현금지원 제도(의료비 및 건강 지원 제도) 불만족 이유 .....	81
〈표 IV-1-3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	82
〈표 IV-1-3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만족도 .....	83
〈표 IV-1-3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불만족 이유(전체) .....	85
〈표 IV-1-33〉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 .....	91
〈표 IV-1-34〉 취약계층 가구 및 아동 지원 확대 필요성 .....	92
〈표 IV-1-35〉 취약계층 가구 및 아동 지원을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	92
〈표 IV-1-36〉 자녀 양육 실태 .....	93
〈표 IV-1-37〉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및 지원 수준 비교 .....	94
〈표 IV-1-38〉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용 .....	95
〈표 IV-1-39〉 초등학교 1-3학년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	96
〈표 IV-1-40〉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	97
〈표 IV-2-1〉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	97
〈표 IV-2-2〉 2022-2023 국정과제 추진현황 .....	99
〈표 IV-2-3〉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	102
〈표 IV-2-4〉 육아 관련 국정과제 정책과제 중요도 .....	102
〈표 IV-2-5〉 지난 1년간 육아 관련 국정과제 수행 정도 .....	104

---

---

〈표 IV-2-6〉 육아 관련 국정과제 정책과제 수행도 .....	105
〈표 IV-2-7〉 국정과제의 육아 관련 사회적 문제, 수요자 요구 등 반영 정도 (부모) .....	107
〈표 IV-2-8〉 국정과제의 육아 관련 사회적 문제, 수요자 요구 등 반영 정도 (전문가) .....	107
〈표 IV-2-9〉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지원대상 우선순위(부모) .....	108
〈표 IV-2-10〉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지원대상 우선순위(전문가) .....	109
〈표 IV-2-11〉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택 사유(전문가) .....	110
〈표 IV-2-12〉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정책방향 우선순위(부모) .....	112
〈표 IV-2-13〉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정책방향 우선순위(전문가) .....	113
〈표 IV-2-14〉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정책방향 우선순위 선택 사유(전문가) .....	114
〈표 IV-3-1〉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육아정책의 전반적인 성과 .....	115
〈표 IV-3-2〉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부모급여 .....	117
〈표 IV-3-3〉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	120
〈표 IV-3-4〉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122
〈표 IV-3-5〉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124
〈표 IV-3-6〉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126
〈표 IV-3-7〉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발달장애인 지원 .....	127
〈표 IV-3-8〉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128
〈표 IV-3-9〉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130
〈표 IV-3-10〉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아동 진료체계 개선 .....	131
〈표 IV-3-11〉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식생활 건강권 강화 .....	132
〈표 IV-3-12〉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교통안전 .....	133
〈표 IV-3-13〉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	134
〈표 IV-3-14〉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	135

---



## 그림 목차

[그림 Ⅰ-4-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도별 연구 내용 ..	22
[그림 Ⅱ-1-1]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비전 및 과제 ..	36
[그림 Ⅱ-1-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 비전 및 과제 .....	41
[그림 Ⅲ-3-1] 유아교육·보육 정책 성과분석 틀 .....	53

---



##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3-1〉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정과제	192
〈부록 표 3-2〉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195
〈부록 표 4-1〉 초등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 불만족 이유	198
〈부록 표 4-2〉 초등돌봄 서비스(초등학교 방과후과정) 불만족 이유	199
〈부록 표 4-3〉 초등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불만족 이유	200
〈부록 표 4-4〉 초등돌봄 서비스(다함께돌봄센터) 불만족 이유	201
〈부록 표 4-5〉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2순위)	202
〈부록 표 4-6〉 다른 가구 대비 정부 혜택 및 지원(인식 수준: 자녀 본인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03
〈부록 표 4-7〉 다른 가구 대비 정부 혜택 및 지원(인식 수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204
〈부록 표 4-8〉 다른 가구 대비 정부 혜택 및 지원(인식 수준: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자녀가 아프거나, 혼자 있어야만 할 때 등) 돌봐 줄 사람이 없다.	205
〈부록 표 4-9〉 다른 가구 대비 정부 혜택 및 지원(인식 수준: 현재 어린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적다고 생각한다	206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의 육아정책 중,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핵심분야에 대한 국정과제 성과를 분석함.
- 이를 통해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의 수립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설계와 계획, 이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유의한 성과와 함께 계획 대비 미비한 부분 및 미이행 지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함.

### 나. 연구내용

-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수준 진단을 위해 5개년 연구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범주와 성과평가의 방법 및 틀을 구성함.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범주에 기초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성과를 분석함.
  -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정책 설계와 계획의 수립, 정책의 방향성 등 1년 동안의 정책 수행의 잘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분석함.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미비한 부분 및 미이행 지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함.

###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부모면담
  - 영유아 부모 6명, 초등 저학년 부모 2명

- 부모 및 전문가 설문조사
  - 부모 2,000명, 전문가 98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정책공모전 및 간담회 개최

## 라. 선행연구

-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보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2018-2022) 등, 국정과제 이행 분석을 위한 육아정책 전반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제를 다년도 연구로 수행함.

## 2. 유아교육보육 정책 및 추진현황

- 국정과제는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으로는 크게 (1) 현금지원 중심의 정부지원 확대와 양육부담 경감, (2) 서비스의 질 제고와 (가정양육지원 등) 서비스 내용/유형 다변화, 아이돌봄정책에서 (3)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및 돌봄인력의 국가자격 도입, 유아교육정책에서 (4) 유보통합의 추진과 이행, (5)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들 수 있음.
-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함.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에서는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먼저 부모급여를 도입, 어린이집 반당 교사 비율 개선 및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 구성 등 보육환경 개선안 마련,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음.

## 3. 유아교육보육 정책 범주 및 분석 틀

- 본 연구에서 성과분석 범부로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초점을 두되, 돌봄정

책이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국정과제를 일부 포함하여 성과를 분석함.

- 성과분석을 위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도출하고,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기라는 점에서 1년차라는 점에서 정성적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성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이외 면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하여 제시함.

## 4. 2023년 유아교육·보육 정책 성과 분석

### 가. 육아정책 이용경험 및 만족도: 수요자 조사 분석

-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육아지원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어린이집은 5점 중 4.06점, 유치원은 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음. 이외 시간제보육이 3.69점, 공공아이돌보미가 3.58점, 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는 가장 낮은 3.44점이었음.
-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방과후학교가 3.99점, 초등 돌봄교실이 3.95점으로 대체로 만족하였음.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로써 아동수당, 부모급여, 의료비지원, 건강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자체 지원금 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중 각각 3.55점, 3.68점, 3.66점, 3.63점, 3.88점, 3.48점으로 첫만남 이용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외 ‘취약계층 가구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7점 중 5.4점, 취약계층이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7점 중 4.72점으로 나타남.

### 나.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우선순위

- 부모와 전문가 모두 안전한 양육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등 어린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 전문가 모두 국정과제 중요도는 7점 중 5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 중요도가 7점 중 6점 이상으로 나타나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수행정도는 7점 중 3점대 수준을 보였고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7점 중 3.38점을 보여 아직 성과도 부족하다고 인식함.

-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아직 수행정도나 가시적 성과가 높지 않았으나, 국정과제가 5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과 성과 홍보를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인식 확대가 가능할 것임.

□ 부모들은 국정과제가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52.0%인데 반해, 전문가들은 51.5%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함.

- 정책개발-평가 등에 관여도가 높은 전문가들에 비해, 일반 정책수요자점 수혜자인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더 낮아 국정과제에 대한 이슈와 추진현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보임.

□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 '부모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실질적 자녀양육의 책임이 큰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다음으로 '서비스 공급자 지원'은 교육, 보육, 돌봄의 기관 이용의 증가와 함께, 국가 등 공적 책임 커져간다는 점에서, '아동 지원'은 방향성 차원에서 핵심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두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함.

□ 정책방향성으로는 부모는 부모 현금지원을, 전문가는 서비스 질 제고를 최우선으로 보았음

- 부모는 '부모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가 26.6%,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가 19.7%,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가 12.9%,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가 4.2% 순이었음

- 전문가는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가 34.7%로 가장 많았고,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가 32.7%,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가 25.5%,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 강화'가 5.1%,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가 1.0% 순으로 나타나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임.

## 다.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주요성과

- 부모들은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였고, 전문가들은 부모급여의 상향지원과 가정양육 어린이집의 선택권 부여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현금지원 방식의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남.
  - 현금지급에 따른 남·오용이나, 부모급여와 자녀양육비 지출과의 연계성 부족, 사교육 조장 우려, 부모급여 수혜 연령이 0,1세로 제한, 가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지원의 한계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구경제상황을 고려한 차등 추가지원이나, 지급연령 확대, 부모교육과의 연계 등을 제안함.
-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이외 유치원 교사대 유아비율의 조정, 부모교육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상충성과 상보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함.
  -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의 축소 관련 시범사업 추진,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추진,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한 모델수립과 시범사업, 유보통합을 통한 격차 해소 추진 등을 잘한 점으로 보았음
  - 이에 반해, 아직 실제 교사대 아동비율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시설 기준이나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 변화가 부족하다는 점,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고, 보육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미흡하다고 보았음.
- 아동돌봄체제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들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마을돌봄 확대 등을 잘한 점으로, 돌봄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 민간돌봄서비스 자격관리제도나 등록제 도입으로 오히려 공공의 책임성 약화 우려, 늘봄학교-마을돌봄 간 연계나 불분명성 존재, 돌봄기관의 질 격차 등이 미흡한 점으로 보았음.
- 산모·아동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양한 임신·출산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비용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우려,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 부족, 장애여성 등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산모 및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부족,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실효성 등에 우려를 나타냄.
  - 특히 산부인과 등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소아전문의 감소 문제의 해결, 비대면 및 야간 공휴일 진료 확대, 난민아동, 불법체류자녀 등 건강

관리 사각지대 아동 지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봄.

□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들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배치 통해 부모 노동환경, 경제환경 등 관찰 및 지원, 아동학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교육과 확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 서비스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봄.

- 최근 미출생 등록 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잘한 점으로 보았고, 중앙단위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미흡하다고 보았음.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연속성있고 일관성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점과 2023년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종합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잘하였다고 보았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 부모지원 강화 실질적 내용 부족,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언어지원과 학습지원 부족, 다문화 지원 관련 예산 감소 등이 미흡하다고 보았음.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급여수준의 인상 및 복귀 프로그램 필요, 이중노동시장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실행력 강화, 남성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지원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유연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 육아휴직 이외의 육아친화제도 강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채용 지원금 도입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강화,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양육지원체계의 정책목표 확립과 재구조화, 우수 기업 사례 발굴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함.

-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육아휴직 등 정책 확대와 수용적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 육아휴직 급여를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 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확대 등을 잘한 점으로 봄.

- 이와 달리, 성별근로공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관련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다는 점, 고용보험 중심으로 소상공인, 영세사업장 근무자는 육아휴직, 난임휴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 종사자들이 주로 수혜받고,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낮다는 점 등이 미흡하다고 봄.

□ 유보통합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했다는 점, 유보통합 관리부처 교육부로 일원화,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등을 잘한 점으로 보았고, 2025년에 실질적 유보통합이 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해관련 집단과의 지

속적인 소통이나 정보 공유 등 부족, 법제화가 없다는 점, 교사 처우 개선 등 가시적 성과 부족,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을 미흡한 점으로 보았음.

## 5. 정책제언

### 가. 기본방향

- 균형잡힌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 필요
- 유아교육·보육 정책 및 서비스간 중복성 제거 및 통합
- 영유아 안전에 최우선

### 나. 정책제언

- 현금지원정책
  -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지원 정책 마련
  -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 수혜 연령 연장 및 추가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 정책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제고
  -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프로그램 제공 검토
  - 돌봄, 아동학대 관련종사자, 가족지원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진료비 수가 조정
- 시간 지원 정책
  - 출산 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이용 촉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홍보 강화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
  -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홍보 필요



# I

## 서론

-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선행연구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은 영유아기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하여, 육아 및 교육·돌봄 정책에 관한 국가 핵심과제를 담는 중요한 부분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험/재난 및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생애초기 유아교육·보육의 주요 어젠더는 전환기적 변화의 과정에 있다. 초저출생의 추세와 인구구조의 가파른 변화가 진행 중으로,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책 수행의 실질적 효과와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서 부모급여의 신설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유보통합 추진,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의 마련과 이이돌봄서비스 관련 지원확대와 국가자격의 도입 등 주요정책 이행, 그리고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와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서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초등전일제 학교(늘봄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그리고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교육 사각지대 해소가 있다.

한편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를 통해 교원 SW·AI 역량 제고와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서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과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지원)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이 추진되는 현 시점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계획과 연도별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인구동향조사 결과,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24만 9천명(통계청 보도자료, 2023. 2. 22.)으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그간 투입한 260조원의 예산과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의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타당한 방법은 투입한 예산 대비 목표로 설정한 수치와 정책수행을 달성하였느냐이다. 성과평가가 최종 결과산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나, 여기에는 정책의 계획과 투입, 실행과 이로 인한 결과의 전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정책의 결과도 정책 산출(output)에서부터 단중기 성과(outcome)와 최종 영향(impac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며, 해당 결과를 산출하는 정책의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분석과 평가는 다르게 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5개년 연구로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이어, 그간 확장된 육아정책의 내용과 범주를 체계화하여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를 각 5차년도에 걸쳐 수행하여왔다. 후자의 육아정책의 성과와 분석 과제는 육아지원의 확대를 고려하여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포함하고 저출산정책과 돌봄 및 아동 정책까지 포괄하였으며, 변화하는 양육지원체제 전반을 고려하여 서비스-비용-시간지원의 틀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육아정책 전반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여기에는 기존의 유아교육·보육 성과와 과제에서 없었던 수요자 부모 및 현장의 교직원과 전문가 의견 조사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성과평가의 주요 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는 육아정책의 구성과 설계가 확대되는 육아지원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과정이었으나, 광범위한 내용과 지표를 다루는 데에서 오는 육아정책 성과평가의 최종 산출의 개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새로운 5개년의 정책 성과분석과 과제를 시작하면서, 육아정책의 핵심 분야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으로 주요 과제를 담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육아정책 중,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핵심분야에 대한 국정과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의 수립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설계와 계획, 이행과

성과 성과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유의한 성과와 함께 계획 대비 미비한 부분 및 미이행 지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 2. 연구내용

첫째,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수준 진단을 위해 5개년 연구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범주와 성과평가의 방법 및 틀을 구성하였다. 매년 이루어지는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주요 분야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과 성과분석과 함께, 각 연도의 중점분석 과제를 도출하여 개별정책의 이행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범주에 기초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성과를 분석한다.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정책 설계와 계획의 수립, 정책의 방향성 등 1년 동안의 정책 수행의 잘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미비한 부분 및 미이행 지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분석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관한 평가와 성과분석을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정책 성과분석에 필요한 정책의 범위와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유아교육·보육 정책 분야 정부발간자료(5개년 국정과제, 각 부처 업무계획, 보도자료 등)를 통한 정책 계획과 성과목표를 파악하고, 가용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2018~2022 육아정책과 분석과 과제(2018-2022)」 등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정책분석과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 나. 부모면담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과 현장 중심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집단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정책 수행 과정의 경험, 내용 및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개선점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이행 과정의 전달력과 체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수요 및 미진한 부분을 파악한다. 면담조사의 정책수혜의 핵심주체인 부모를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부모 대상 면담조사는 총 8명을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6명,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1-3-1〉 부모면담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부모: 6명 - 9.25., 9.26., 9.27., 10.4., 10.5.</li> <li>초등 저학년 부모: 2명 - 9.25.</li> </ul>
영유아 부모 면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양육 형태(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등)에 따른 어려운 점 및 만족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관에 자녀를 보낼 때(또는 가정양육)의 장단점,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에 대한 의견</li> <li>자녀양육 형태(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등)에 따른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이용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등 -(유치원 이용시) 방과후 과정 운영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 등 정부지원정책</li> <li>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용경험, 실효성 등)</li> <li>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산후지원도우미 등 개별돌봄지원 서비스를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자녀에게 학원 등 사교육은 어떤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li> <li>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정책이 육아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li> <li>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li> <li>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li> <li>영유아의 육아와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li> <li>정부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정책/지원 수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li> </ul>
초등학생 부모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입학 전에 주된 자녀 양육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등)</li> <li>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또는 가정양육)와 비교하여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만족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li> </ul>

구분	내용
내용	<p>말씀해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합니까? 이용한다면 자녀가 이용하는 방과후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및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li> <li>• 초등자녀 돌봄 시 어려운 점 및 만족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li> <li>• 다음의 돌봄정책을 알거나 귀하 자녀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부모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포함)</li> <li>- 다함께돌봄센터(자자체 돌봄 포함)</li> <li>- 늘봄학교 등</li> </ul> </li> <li>•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용경험, 실효성 등)</li> <li>• 자녀에게 학원 등 사교육은 어떤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li> <li>• 방학 중 초등자녀 돌봄은 어떻게 하십니까?</li> <li>• 초등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체감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li> <li>•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li> <li>• 초등 자녀의 돌봄을 위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ul>

## 다. 부모 및 전문가 설문조사

### 1) 부모 조사

정책성과 분석을 위해 수요자 부모(0세~초등저학년 자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설계와 방향성 및 이행수준, 정부정책 지원 효과에 대한 수요자 관점의 체감과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2018-2022년에 실시한 평가지표와 문항을 참조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돌봄의 주요 정책 중심으로 문항으로 간소화 재구성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요자인 부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56.5%, 여성이 43.5%였고,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중 배우자 있는 경우는 97.6%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는 51.4%, 외벌이는 48.6%였다. 가구소득은 350만원 이하가 19.1%, 351~500만원이 27.1%, 501~600만원이 18.1%, 601~750만원이 16.4%, 751만원 이상이 19.4%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9.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33.3%, 중소도시가 38.0%, 읍면지역은 9.8%로 나타났다.

〈표 I-3-2〉 유아교육·보육 성과 관련 부모 조사 대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계	(2,000)	100.0			
성별			응답자 학력		
남성	(1,130)	56.5	고졸 이하	(201)	10.1
여성	(870)	43.5	대졸 이상	(1,799)	90.0
연령			지역규모		
20대	(61)	3.1	서울특별시	(381)	19.1
30대	(935)	46.8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665)	33.3
40대	(975)	48.8	중소도시	(759)	38.0
50대 이상	(29)	1.5	읍면지역	(195)	9.8
배우자 유무			영유아 자녀 유무		
배우자 있음	(1,952)	97.6	있음	(1,818)	90.9
배우자 없음	(48)	2.4	없음	(182)	9.1
맞벌이 여부			총 자녀 수		
맞벌이	(1,004)	51.4	1명	(889)	44.5
외벌이	(948)	48.6	2명	(939)	47.0
가구소득			3명 이상	(172)	8.6
350만원 이하	(381)	19.1	영유아 자녀 기관이용여부		
351~500만원	(542)	27.1	가정양육(영유아)	(386)	21.2
501~600만원	(362)	18.1	영유아 기관 이용	(1,568)	86.2
601~750만원	(327)	16.4			
751만원 이상	(388)	19.4			

## 2) 전문가 조사

유아교육·보육·돌봄 관련 국정과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98명으로, 현행 주요 국정과제 정책의 중요도와 수행정도, 수요자의 요구 반영정도, 국정과제별 잘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중 대학 교수 등 종사자가 74.5%, 연구기관 종사자가 25.5%였고, 전문 분야는 아동(보육)이 20.4%, 유아교육 17.3%, 사회복지 19.4%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3-3〉 전문가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계	98	100.0			
소속			전문분야		
대학	73	74.5	아동(보육)	20	20.4
연구기관	25	25.5	유아교육	17	17.3
해당분야 경력			사회복지	19	19.4
5년 미만	1	1.0	가족	9	9.2
5~10년 미만	7	7.1	여성	5	5.1
10~15년 미만	24	24.5	교육	5	5.1
15~20년 미만	15	15.3	정책/행정	12	12.2
20년 이상	51	52.0	경제	9	9.2
			기타	2	2.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임.

##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 성과평가의 방식과 틀, 지표 대비 5개년(2023-2027) 정책 성과분석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설문조사 및 문항 구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에 기초한 달성-미흡 및 우선정책 제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함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마. 정책공모전 및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공모전을 실시(7.19-8.31.)하였다. 공모전은 육아정책연구소의 3개 연구과제에서 저출생 대응, 남성 자녀돌봄, 육아정책 일반을 주제로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본 연구는 육아정책 일반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정책공모전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공모전 수상자들과의 간담회(11.7.)를 개최하였다.

## 4. 선행연구

초저출생의 위기 속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은 확대와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으나, 주요 정책의 설계와 현안과제에서 큰 틀의 변화보다는 우선순위를 두는 핵심 과제에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다부처에 걸친 유아교육과 보육, 아이돌봄사업의 주요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주요 정책방안의 수립과 조정 및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 절에서는 그 간 성과분석 연구수행의 주요 내용 고찰을 통해 금번 유아교육·보육 정책 성과분석의 범위와 평가체계의 구성에 참조하고자 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보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2018-2022) 등, 국정과제 이행 분석을 위한 육아정책 전반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제를 다년도 연구로 수행해왔다. 첫째, 유아교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연구는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이후 2013년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과제와 2012-13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 발전한 유아교육 기반과 지원규모에 관한 분석을 실시, 유아교육의 양질의 토대 구축과 확대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보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성장기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요지표(서비스 접근성, 비용부담, 서비스의 질 제고, 부모 선택권 보장, 맞춤형 지원체계 등)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으며,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제고에 기여하였다.

셋째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2018~2022) 연구는 유아교육-보육으로 분절되어있는 분석의 틀을 육아정책의 관점에서 저출산-유아교육·보육-아동 정책 및 서비스-현금·의료비-시간 지원으로 재구조화하여, 유보정책을 포함하여 양육지원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이행의 성과와 사각지대 및 격차에 관한 구체적 제언과 육아정책의 통합적 관점을 제공하였다.

2023년 시점, 초저출생의 사회적 위기와 재난/위험 상황의 가중, 그리고 글로벌 ECEC 동향과 양육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확대로 그 중요성과 역할 범위가 확장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핵심과제를 고려하여,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2010년~2015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평가한 연구로 2010년에서 2015년 까지 수행한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가 있다.

2010~2014년에 수행한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보육비용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재정, 공급 및 이용률, 시간연장보육, 평가인증, 교사 근무환경을 평가 영역으로 활용했다. 2015년에는 평가영역을 재편하였는데, 서비스 접근성, 양육비용 부담 완화, 서비스 질 제고, 부모 선택권 보장을 지표로(유해미·강은진·조아라, 2015) 활용하였다.

〈표 I-4-1〉 ‘2010-2015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수행연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2010 ~2014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전체 보육료 지원 아동,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가정양육수당 지원액	
	보육재정	GDP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유아교육재정 비율, 아동 1인당 보육예산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공급률, 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평가인증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지율	
	교사 근무환경	월 수당액(농어촌), 수당 지급 교사비율, 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근무환경개선비(0-4세), 누리과정 수당(5세)	
2015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 아동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재정 투입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아동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정 투입, 공급·이용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양육비용 부담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부모 양육비 부담 인식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자녀 양육시	

수행연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도움 정도
	서비스 질 제고	평가인증제도	평가인증 통과 시설 비율, 평가인증 유지율
		부모모니터링단	제도 도입 및 추진 현황, 부모 인지도/도움 정도
		정보공시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열린어린이집	
		교직원 양성 관리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증 발급 건수, 보육 교사 배치 현황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대비 대체인력 비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준		
부모 선택권 보장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율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실시 기관수, 부모인지도/도움 정도	
	장애아 보육지원	장애아 보육 기관수/아동수	
	다문화가족 보육지원	다문화 영유아 기관수/아동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기타	가정양육수당의 선택권 보장 수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자료: 이윤진·양미선·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p. 58-59  
 재인용 문헌: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60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72.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03.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61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69-70.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2010년에는 유아교육 학비지원, 유아교육 재정, 유치원 이용률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였고, 2011년에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을 활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 유아 학비 지원, 교사 근무환경,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지원 체계를 평가지표로 적용하였다.

〈표 Ⅰ-4-2〉 ‘2010-2015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수행연도	평가지표	
2010	유아교육 학비지원	5세 무상교육비지원 유아비율, 학비지원 유아비율
	유아교육 재정	총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재정 비율, 유아1인당 유아교육예산
	유치원 이용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종일제 이용률
2011	유치원 설치와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수, 국공립 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

수행연도	평가지표	
	이용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치원 학비 정부 분담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규모
	교육비 지원	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 비율
	종일제 운영	종일제 운영 유치원 비율, 종일제 교육 유아 비율,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비율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 참여 비율
	교사 근무환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 교사 처우 개선 수당 지급 교사 비율
	기타 인프라	유아교육 진흥원 수,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비율,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참여 유치원 비율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수, 학급 수, 유치원 이용률(만3, 4, 5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 수
2012~2015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
	유아 학비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율, 3, 4세 유아학비 지원율
	교사 근무환경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교사 급여(공립,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교사 처우 개선수당 지급 교사 비율
	방과후 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방과후 과정 이용률
	유치원 평가	유치원평가 참여 비율
	유아교육지원 체계	유아교육 진흥원 수, 체험교육원 수,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참여 유치원 비율

자료: 이윤진·양미선·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 육아정책연구소, p. 57

재인용 문헌: 1)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42.

2)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0.

3)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47.

4)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7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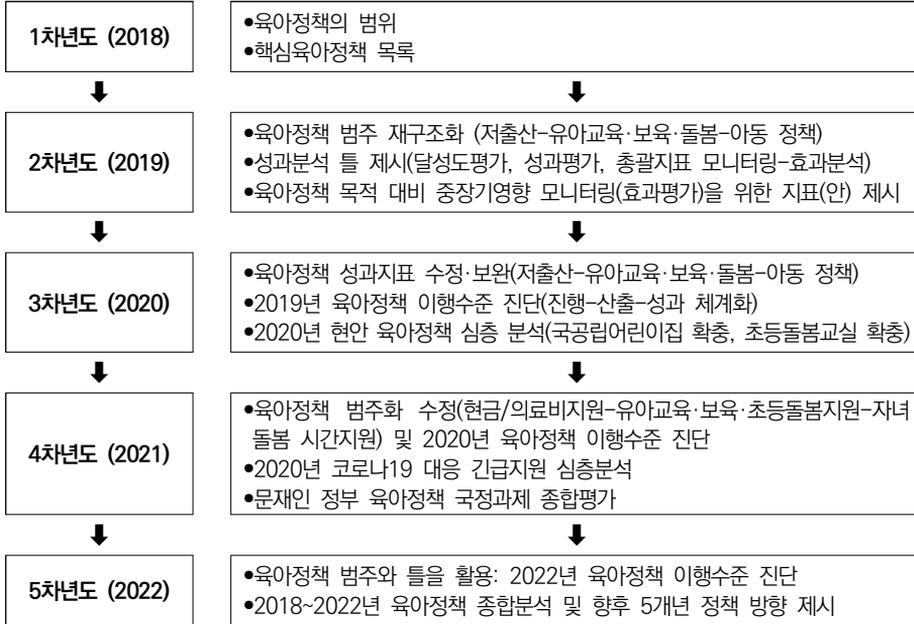
5)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73-74.

6)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57-58.

## 나. 2018-2022 육아정책 성과와 분석 과제(2018년~2022년)

2018~2022년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초기 육아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 돌봄 및 저출생정책과 아동정책을 포괄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그림과 같이 연도별 연구내용 하에서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성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Ⅰ-4-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도별 연구 내용



자료: 김나영·최윤경·김희수(202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 15 그림 <Ⅰ-2-1> 수정 보완함.

<표 Ⅰ-4-3>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구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 목록(1)

구분	분야		핵심 육아정책 범주
1차 (2018년)	복합·혁신 10대 과제	저출산 정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4.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7.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8.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9.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10.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유아교육· 보육정책 5대 과제	유아교육 보육정책
2차 (2019년)	저출산정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구분	분야	핵심 육아정책 범주
		4.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5. 출산·양육 세제 개선 6. 의료비 제로화 7. 기타지원: 난임, 다자녀지원 등 8. 포용적 가족: 한부모양육지원, 출생등록제등 9. 초등교육 혁신 10. 양육지원체계 개편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1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13.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강화 14.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15. 보육교사 전문성강화(자격) 및 처우개선 16.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7.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서비스 18.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제 도입
	아동정책	19.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0.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21. 아동권리보장(4영역:보호, 참여, 건강, 놀이)
3차 (2020년)	저출산정책	1.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3.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 4.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8.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12.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3. 보육서비스 질 제고 14.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5.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16.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서비스 17.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8. 아이돌봄미 지원사업 확대
	아동정책	19.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0.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21.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4차 (2021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구분	분야	핵심 육아정책 범주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8.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 지원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1.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3. 가족돌봄휴가
5차 (2022년)	1~5차년도 정책평가에 대한 종합분석	1. 5차년도 설문조사 실시 및 2021-2022년 육아정책 부문별 정책달성도(전문가) 및 만족도(수요자) 조사 결과 기반 성과분석 - 4차년도 성과지표 활용 3. 정책성과 분석-이용만족도, 이용경험 유무, 이용경험 정책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아동정책 성과분석(복지부, 여가부 관련 정책)

자료: 1)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p.89.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65.  
3)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p.45, 47.  
4)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p.64, 65.  
5) 김나영 외(202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p.80-82.

연도별 연구를 살펴보면, 2018년 1차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아정책을 중심으로 연속 및 심층 분석 정책을 선정하였으며, 육아정책의 범위를 유아교육과 보육 위주에서 확대하여 일·가정양립의 저출산정책을 위주로 포괄하여 분석하였다(이윤진·양미선·김문정, 2018). 2019년 2차 연구는 보다 광의의 육아 정책에 대한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평가의 틀과 지표를 제시하였고, 부처별로 제시한 육아정책 관련 계획과 연도별 목표 대비 달성도인 협의의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달성한 정책의 목표와 계획의 이행이 육아 수요자인 부모와 아동, 현장의 교직원에게는 어떻게 체감되고 육아의 과정과 환경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최윤경·김나영·이혜민, 2019). 2020년 3차 연구는 2차년도 과제와 연속하

여 육아정책의 범주를 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돌봄(초등돌봄 포함), 아동정책을 포괄하였으며, 부처별 성과평가와 부모, 현장 교직원,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책과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김근진·박창현·김희수, 2020). 2021년 4차 연구 또한 3차년도의 연속선 상에서 육아정책의 범주를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을 포괄하였으며, 일부 지표를 수정, 보완하였다(김근진·유해미·조혜주, 2021). 특히 아동수당,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등 주요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김근진·유해미·조혜주, 2021). 2022년 마지막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육아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육아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김나영·최윤경·김희수, 2022).

2018~2022년 연구에서 다른 육아정책 분야와 범주를 재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4-4〉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구에서 선정된 핵심육아정책 목록(2)

범주	1차 (2018년)	2차 (2019년)	3차 (2020년)	4차 (2021년)	5차 (2022년)
저출산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일기정 입법제도 제원 확보방안 마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 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 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 휴가·난임휴가 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구)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	-	-	유연근무제(재택근로, 시차출 퇴근)	(구)유연근무제
	민1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아동수당	(구)아동수당
	출산·양육 진화적 세제 개선	출산·양육 세제 개선	-	-	-
	-	의료비 제로화	의료비 지원 강화: 영유아의료 비 지원, 임신출산의료비 경감 등	의료비 지원	(구)의료비 지원
	-	-	-	-	(신)0~1세 부모급여 신설 (신)산모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기타 지원: 난임, 다자녀 지원	기타 지원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건강지원	(구)건강지원(남임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등)
	-	양육지원체계 개편	-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포용적 가족: 한부모 양육지 원, 출생등록제 등	포용적 가족정책: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	-

범주	1차 (2018년)	2차 (2019년)	3차 (2020년)	4차 (2021년)	5차 (2022년)
	-	초등교육 혁신	-	-	-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	-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국공립 유치원 확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제고(40% 목표)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제고(40% 목표)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제고(40% 목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	-	-	-
	-	-	국공립 유치원 질 강화	-	-
	간접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을 강화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예유 파인 도입 등	-
	-	-	-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유아교육·보육	-	-	-	-	(신)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확대
	-	-	-	-	(신)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	-	-	-	(신)미디어교육
	-	-	-	-	(신)유보통합
	-	-	-	-	(신)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	-	-	-	(신)유치원-초등교육과정 연계선 강화 추진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	-	-	-	-

범주	1차 (2018년)	2차 (2019년)	3차 (2020년)	4차 (2021년)	5차 (2022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보육지원체계 개편	-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	-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40% 목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40% 목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40% 목표
	-	-	국공립 어린이집 질 강화	-	-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신,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	-	-	-
	-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 체계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 체계	-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자격)	-	-	-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	-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초등돌봄 확대	(구)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구)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신,구)아이돌봄서비스
	-	-	-	-	(신)충촌한 아동돌봄체계
	-	-	-	-	(신)돌봄인력 보수체계
	-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	(신,구)사회적 약자 보호/아동학대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아동정책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범주	1차 (2018년)	2차 (2019년)	3차 (2020년)	4차 (2021년)	5차 (2022년)
	-	이동권리보장: 보호, 참여, 건강, 놀이	이동권리보장: 보호, 참여, 건강, 놀이	-	-
	-	-	-	-	(신)시생활 건강권
	-	-	-	-	(신)가정방문 건강권리사업/장애조기발견체계 및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	-	-	(신)아동진료체계

주: 2022년 5차년도 연구의 경우 '(구)'는 4차년도에 제시한 육아정책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고, '(신)'은 새로운 유석열 정부 육아정책 항목을 토대로 작성함.

자료: 1)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p.89.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65.

3)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p.45, 47.

4)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p.64, 65.

5) 김나영 외(202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358.



# II

## 유아교육·보육 정책 및 추진현황

01 유아교육·보육 정책 현황

02 그간의 부처별 정책 추진 실적



## II. 유아교육·보육 정책 및 추진현황

### 1. 유아교육·보육 정책 현황

#### 가. 국정과제 및 부처 업무계획

2022년 7월 공표된 120대 국정과제와 2023년 부처별 업무계획에서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의 대상과 목표,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서 부처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시된 국정과제와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가지의 키워드 (또는 내용범주)로 구분 가능하다. 우선 보육정책에서 (1) 현금지원 중심의 정부지원 확대와 양육부담 경감, (2) 서비스의 질 제고와 (가정양육지원 등) 서비스 내용/유형 다변화, 아이돌봄정책에서 (3)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및 돌봄인력의 국가자격 도입, 유아교육정책에서 (4) 유보통합의 추진과 이행, (5)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유초교육과정 연계, 유초돌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그리고 교육정책 일반으로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교육력 제고, 지역중심 교육선도를 들 수 있다. 이를 유아교육·보육의 주요 정책으로 하여 성과평가의 틀을 구성하고, 관련 정책의 범주와 내용이 국정과제의 목표와 설계에 맞게 제시되도록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표 II-1-1〉 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정과제 및 부처 업무계획

국정과제		주요내용
(국정목표3) 46.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부모급여	• 0,1세 현금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교사대아동비율 • 시설면적기준 상향 • 보육교사 처우개선 • 가정양육지원 강화 • 유보통합 추진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관리 추진 착수

국정과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양육지원 확대</li> <li>• 시간제보육 확대 등 돌봄 보장</li> </ul>
	충충한 아동돌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li> <li>•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통합관리</li> <li>• 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li> <li>•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li> <li>• 서비스다양화</li> <li>• 아이돌봄플랫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li> </ul>
	유보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li> <li>• 유치원방과후과정 확대</li> </ul>
(국정목표4)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유아교육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li> <li>• 유초교육과정 연계 강화</li> </ul>
	(유초교육정책-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돌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li> <li>•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및 교육력제고</li> <li>•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li> </ul>

주: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3년 유관부처(보건복지부(1.9), 교육부(1.5), 여성가족부(1.9; 2.16) 업무계획 중 일부내용을 정리함.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22. 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 9.). 미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복지국가, 보건복지부가 국민과 동행하겠습니다.

3) 교육부 보도자료(2023. 1. 5.).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3. 1. 9.).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 2023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3. 2. 16.).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

## 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sup>1)</sup>

교육부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모든 유아에게 더욱 충충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2024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2022년 12월 기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24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유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1) 교육부 보도자료(2023. 4. 10.).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

둘째,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한다. 3~5세 유아 수는 2027년에는 2022년(12월 기준 108만 9천 명)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 9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전국 2,000여 개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임시 휴원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예시: 3개원을 1개원으로 통합)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하여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추가인력 활용 가능)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하여 특색 있는 교육(예시: 숲·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발도르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II-1-1]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비전 및 과제

<b>비전</b>	<b>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분야 국가책임 강화</b>
<b>정책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유아에게 격차 없는 출발선을 보장</li> <li>▪ 자율성 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li> <li>▪ 지능형 나이스 안착을 통한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li> </ul>

핵심과제		추진과제
I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li> <li>②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모델 다양화</li> <li>③ 유아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li> <li>④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li> <li>⑤ 유·보통합 추진</li> </ol>
II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아교육지원체제 개편 및 자율성 강화</li> <li>②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보·초 연계 지원</li> <li>③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li> <li>④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li> </ol>
III	교원 역량강화 및 권익 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li> <li>② 다양한 지원 확대 및 자격제도 활성화</li> <li>③ 교권의 보호와 권익 증진</li> <li>④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li> </ol>
IV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능형 나이스 안착</li> <li>②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li> <li>③ 미래형 교육인프라 조성</li> <li>④ 누리포털 고도화 및 거버넌스 확대</li> </ol>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3. 4. 10.),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 p. 8. (2023. 6. 12. 인출)

〈표 II-1-2〉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목표치

전략	핵심 성과지표	'22년	⇒	'27년
1. 양질의 유아교육기회 확대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학부모부담금 20만원		3~5세 교육비 대폭 경감
	교육운영모델 다양화	-		10개소 이상 ※시범운영 후 조정
	소규모병설 지원	-		20% ※시범운영 후 조정
	※공동교육과정, 통합 등	-		모든 기관
	디지털 치유지원	-		+유공·보훈, 다문화 +특성화, 방과후
	취약 유아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비		모든 유치원
	다문화교육 지원	-		17개 시도
	외국인유아 지원	7개 시도		1,837개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1,437개			
2.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맞춤교육” 운영 협력유치원	-		20% ※시범운영 후 조정
	유초연계유치원 확대	24개소		모든 기관
	방과후 과정 확대	9개 시도 '희망유아'		모든 시도 '희망유아'
	부모교육 참여 인원	-		10만명
	유치원안심환경조성	1,053개소		모든 기관
3. 교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미래교육역량연수 교원참여수	-		총원 50%
	사립교원 처우 개선	74만원		단계적 인상
	사립교원 역량연수	-		총원 50%
4.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유치원 나이스	-		모든 유치원
	실내·외공간혁신	-		모든 기능
	보건·영양교사 등	-		1,000개소
	누리포털 이용횟수	299만회		모든 기관 1,000만회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3. 4. 10.).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매우기 총력. (2023. 6. 12. 인출)

#### 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sup>2)</sup>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에 따르면 2023년부터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 비전은 보육과 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2. 13.).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지난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5년 동안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어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12. 13.).

4차 기본계획은 크게 4대 전략과제와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과제로는 첫째,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둘째,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셋째, 보육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넷째,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먼저 부모급여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다.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확대하여,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 중 5% 내외의 이용률을 2027년까지 10%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여, 2022년 7만 5,000가구, 840시간에서 2023년 8만 5,000가구, 960시간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외에 130개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육지원 서비스 간의 관계기관 연계도 보다 강화해 나가고, 부모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양육정보와 교육을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 역량을 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개선과 보건소의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발달 문제에 대한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

이다.

둘째로,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그간 영유아 발달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적정 공간 규모 구성 등 보육환경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개편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수동적이고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교직원 참여하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보육과정 위주의 평가로 2024년부터 전환하고, 평가 후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하여 현장을 이끄는 자율적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하여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놀이 중심 철학이 보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학과제 방식은 보육 교과목 운영 등 지표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하고,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에게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이를 위해 고충 또는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한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함과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넷째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한편,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하여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22년 기준 37%),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한편,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시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그림 II-1-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 비전 및 과제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b>비전</b>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b>목표</b>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동등한 출발선 보장
<b>전략</b>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b>추진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li> <li>● 종합적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li> <li>●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li> <li>●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li> <li>●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li> <li>●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권리존중 확산</li> <li>●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li> <li>●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li> <li>●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li> <li>●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li> </ul>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li> <li>●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li> <li>●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 사각지대 예방</li> <li>●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li> </ul>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2. 13.),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p. 2. (2023. 6. 12. 인출.)

〈표 II-1-3〉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 목표치

전략	핵심 성과지표	2022년	2027년
1.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지급 · 시간제보육 이용률 · 지역거점 양육지원 어린이집 육성 · 부모교육 실시 인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영아수당 만0세 30만원 5% 내외 시범사업 17만명 130개소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10% 200개소 25만명 지속 확대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교사 대 아동비율 · 표준보육과정 내실화 ·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 장애아 보육인프라 강화	1:3(0세반) 1:15(3세반) 관 주도 평가 A-D 등급제 1,561개소	교사:아동비율 개선 전문컨설턴트 양성 질 중심 지표 부모,교직원 참여 알권리 제고 지속 확대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 보육교사 양성체계 · 보수교육/자격기준 개편	학점제 대면 중심 집합교육(3년)	개편안 마련 교과목 개편, 관리 효율화(수시 이수)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략	핵심 성과지표	2022년	2027년
및 역량 강화	·연장, 보조, 대체교사 지원	주기) 6.6만명 지원	지속 확대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민간,가정/ 국공립 비용지원 상이	시설 간 격차 완화
4.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 구축	· 공공보육 이용 확대	36.8%(‘22.10 월)	50% 이상
	· 표준보육비용 고도화	조사년도 기준 표준보육비용 (3년 주기 산출)	고도화된 연도별 표준보 육비용 (매년 보정)
	· 보육취약지역 지원	농어촌 기준 준용, 사업별 지원	보육취약지역 선정 및 통합적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2. 13.),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  
겠습니다. (2023. 6. 12. 인출.)

## 2. 그간의 부처별 정책 추진 실적

### 가. 보건복지부(2018~2021)

〈표 II-2-1〉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단위)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정량화	성격	2018	2019	2020	2021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홍보캠페인 효과성(%)	목표치 = 전년도 실적치 대비 3%* 증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2% 감산	45.7	정성	결과	-	-	-	47.2
		①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민족률=민족도 평가점수/민족도 총점(20점)×100	92	정성	결과	신규	91	91	94
	② 임신·출산 건강 지원	② 미숙아 NICU 퇴원 후 생존율(%)	KNN 2020년 연차보고서상 생존율	85.4	정량	결과	-	-	-	85.4
		③ 상·피임 교육 전·후 인지 변화율	교육 후 인지변화율-교육 전 인지 변화율×100%	26.8	정성	결과	23.5	29.8	26.8	27.4
③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	④ 임신·출산 종합 상담 전화 이용자 만족도(산규)	민족도 설문조사(5점 척도)문항별 평균점수/문항수	83.5	정성	결과	-	-	-	86.1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민족도 점수)	70	정량	결과	-	-	-	91.6
④ 아동수당 지급	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동 민족도(5점 척도)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92.5	정성	결과	90.6	90.0	92.9	91.8
			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여부(22년 예산 반영)	22년 아동수당 예산증액	-	정성	결과	-	-
		② 아동수당 지원 민족도(점)	민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민족도 점수	73	정성	결과	71.4	71.5	74.6	7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실적				
						지표 종류 정량화 성격	2018	2019	2020	2021
2. 아동이 행복하고 응답하는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증진	③ 아동수당 지급률(%)	③ 아동수당 지급률(%)	아동수당 지원이동수/ 주민등록인구통계 상 0~6세 아동수 (연도말 기준)×100	97.2	-	-	97.1	97.6	
			① 양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점)	① 양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 조 사결과 점수의 합/실문조사 대상자 수	90.9	92	90.4	90.6	91.4	
				②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라 아동권리인식도 측정(실문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87.5	-	-	86.8	89.6
				③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횟수(회)	지자체별 위원회 개최 횟수의 총합/229(시군구수)	3.0	-	-	-	6.5
②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지원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④ 아동보호전문요원 배치율(점)	④ 아동보호전문요원 배치율(점)	연말 기준 배치완료된 아동보호전문요원 수 / 국비 지원 아동보호전문요원 수	92.8	-	-	89.8	93.7		
		①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①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K-CBCL 정상범위 아동수/ 시업참여자수*100	41.5	신규	44.1	41.4	42.6	
			② 보호대상 아동자립률(%)	(퇴소 아동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수)/ 당해 연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100	82	79.6	80.6	81.1	81.7	
③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③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 향상 기여도(점)	③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 향상 기여도(점)	드림스타트 수혜대상자의 가족기능(가족 응집력, 적응성 등 14문항)점수	74.2	72.3	74.8	75.6	75.7		
		① 아동학대 발견율 (%)	① 아동학대 발견율 (%)	(아동학대사례/추계아동인구)*1,000(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나이를 만0세-만17세로 정의)	4.00	2.98	3.81	3.61	4.53 (점정)	
			②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 대상자: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아동 현황(18세 미만 아동) - 측정산식: 가족인계자 수/실종아동 발생자 수×100	99.6	99.5	99.6	99.5	99.5	
4. 영유아가 즐겁고	①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① 보육료 서비스 만족도(점)	③ 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 만족도(%)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만족도	96.0	94.0	96.3	95.8	96.2	
			① 보육료 서비스 만족도(점)	6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82.0%	80.9	81.8	74.1	81.6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실적			
				추정범범(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정량화	성격	2018	2019	2020	2021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② 민고 말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②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비율	보육교사 호봉충합/전체 인건비 지원 보육 교사 수	7.7점	정량	결과	신규	신규	신규	8.1	
		③ 시간제보육 제공 지자체 수	측정산식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시·군·구 수	169	정량	결과	신규	신규	신규	177	
		④ 영아수당 제도 도입 추진	법령 개정 여부	완료	정성	산출	신규	신규	신규		
		① 어린이집 평가등급 A·B 등급 비율	어린이집 평가 A·B등급 어린이집 비율 (평가결과 A·B등급 어린이집 수/평가일시 어린이집 수)	91.4%	정량	결과	신규	신규	신규	89.6	90.4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선정 개소수	565개 소	정량	결과	신규	신규	신규	581	515 개소
		②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비중	측정산식=(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전체 어린이집 개소수)×100 (조사기: 12월 말)	15.5%	정량	산출	신규	신규	신규	14.0	16.3 %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③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공공형어린이집 인원/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100	7.7%	정량	결과	-	7.9	7.7	8.8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정성	결과	90	90	90	86.8
			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측정산식=(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 수	77.3점	정성	결과	76.5	76.5	76.7	79.4
			⑥ 보조교사 배치율	측정산식 = 보조교사 수 / 영아반 담임 교사 수	24.5%	정량	산출	-	23.1	24.1	26.4

주: 공식적인 실적자료가 없는 경우 음영 표시함.  
 자료: 김나영·최윤경·김희수(202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pp.66-68. 재인용.

나. 교육부(2018~2021)

〈표 II-2-2〉 2021년 교육부 성과 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21 목표지	지표종류		실적			
						정량화	성격	2018	2019	2020	2021
I. 고학력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①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① 관한 이양 정비과제 이행 개수	① 관한 이양 발골과제 중 이행 완료된 과제 수(누적)	125	정량	신출	96	103	122	131개 과제중 6개 과제 미완료
III.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①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②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③ 사회적 총괄·조정 효과성을 제고한다.	①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②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③ 사회적 총괄·조정 효과성을 제고한다.	부처별초등돌봄시설확충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학생 수증정원 현황 조사	45.9	정량	신출	36	39.7	42.1	44.3
IV.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③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한 운영 제고	③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④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내년도 예비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온라인 수요 조사에 응답한 비율 법정부 은종일돌봄 수요 조사 항목 중 '은종일돌봄 서비스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여 응답결과 활용	40%	정량	신출	-	38.3	39.0	-
V.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③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한 운영 제고	③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④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내년도 예비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온라인 수요 조사에 응답한 비율 법정부 은종일돌봄 수요 조사 항목 중 '은종일돌봄 서비스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여 응답결과 활용	88점	정량	신출	-	-	-	85.8
VI.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③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한 운영 제고	③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④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내년도 예비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온라인 수요 조사에 응답한 비율 법정부 은종일돌봄 수요 조사 항목 중 '은종일돌봄 서비스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여 응답결과 활용	1건	정량	신출	1	1	1	-
VII.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③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한 운영 제고	③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④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내년도 예비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온라인 수요 조사에 응답한 비율 법정부 은종일돌봄 수요 조사 항목 중 '은종일돌봄 서비스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여 응답결과 활용	500 회급	정량	신출	25.5	28.5	29.8	31.0% ('21. 12.)
VIII.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③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한 운영 제고	③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④ 초·중·고등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내년도 예비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온라인 수요 조사에 응답한 비율 법정부 은종일돌봄 수요 조사 항목 중 '은종일돌봄 서비스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여 응답결과 활용	501	정량	신출	501	966	885	-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21	지표종류		2018	2019	2020	2021
				목표치	정량화	성격	2018	2019	2020	2021
한다.	④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	①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단위: 만명)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조사 (21.5.)	27	정량	신출	26.1	29.0	25.6	
	2. 모두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⑥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 관리 강화	② 유초중학교 확진 상황 확인비율(%) 진자	90	정량	신출	신규	신규	신규	90.

주: 공식적인 실적자료가 없는 경우 음영 표시함.  
 자료: 김나영·최윤경·김희수(2022), 2018~2022 유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년 유아정책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pp.70~71. 재인용.

## 다. 여성가족부(2018~2021)

〈표 II-2-3〉 2021년 여성가족부 성과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2021년도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							실적			
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21년	지표종류		2018	2019	2020	2021
				목표치	정량화	성격	2018	2019	2020	2021
III.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가족정책 기반 구축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가족기능향상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수)	87.5	정성	결과	신규	87.4	88.3	88.3
				4,833	정량	신출	3,328	3,833	4,340	4,918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아이돌봄서비스 실적용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실적 활용하는 아이돌보미 수	72,500	정량	신출	64,591	70,485	59,663
29,500					정량	신출	23,675	24,677	24,469	25,917
III-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응답지(이용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 합	90.4	정성	결과	89.9	90.2	90.6	91.4

목표	2021년도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				실적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2018	2019	2020	2021
및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통합적 가족서비스 만족도	통합가족 서비스를 이용한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91.0	정량 결과	신규	89.1	90.1	90.8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 이행 받고 있는 가구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원가구×100	36.3	정량 결과	32.3	35.6	36.1	38.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80.6	정성 결과	74.6	79.4	80.5	80.6
		한부모가족 지원 (기금)	한부모가족지원 비용	75.7	정량 신출	신규	신규	신규	102.7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인소자 만족도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인소자 만족도 조사	85.7	정성 결과	83.9	85.4	85.6	86.4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88.0	정성 결과		86.6	87.8	88.45
		가족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 실적	178,904	정량 신출	132,115	155,641	161,466	194,802
		가족지원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 사업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85.0	정성 결과	신규	신규	신규	90.7
		가족지원환경 조성	가족센터 공정을	37	정량 과정	-	3.9	11.7	44.2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21). 2021년도 성과계획서(변경)(여성가족부). pp.216-217.  
 2) 대한민국정부(2022).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pp.415-416.

# III

## 유아교육·보육 정책 범주 및 분석 틀

- 01 성과 개념
- 02 성과분석 범주
- 03 성과분석의 틀



### III. 유아교육·보육 정책 범주 및 분석 틀

#### 1. 성과 개념

일반적으로 성과는 투입-과정-산출-결과라는 프로세스로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성과는 관련 업무 및 이를 집행하는 역량, 집행 이후 결과, 그리고 결과의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기도 한다(황혜신·이도석·윤태원·황덕연·김준현, 2021:12). 결국 유아교육·보육 등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는 이윤추구라는 민간부문의 성과와 달리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산출을 넘어 결과나 영향력까지를 고려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개념을 확장하여 성과관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성과관리는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관리적 차원에서 등장한 대안 중 하나로 1980년대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자체를 법령 등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이광희·윤수재, 2012, 황혜신 외, 2021: 13 재인용). 일반적으로 성과관리는 조직 목표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며, 또한 성과관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공유, 성과 달성도에 대한 측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하기도 한다(윤수재, 2017; 황혜신 외, 2021:13 재인용).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당초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는 성과지표라는 수단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성과를 들여다본다는 관점에서 성과측정은 '미리 설정된 성과목표에 대비하여 성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달성되었는지를 성과(측정)지표를 통해 확인·점검 및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9; 황혜신 외, 2021:14 재인용).

성과지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로 성과목표 달성도의 측정방법 등을 알려주고 성과목표 달성방

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는 정부 정책 또는 부처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측정 도구로서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까지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황혜신 외, 2021:14-15).

성과지표는 크게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량지표는 증감률, 건수, 금액 달성률 등 계량화나 수치화되어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의 주관이 개입할 수 없고, 여러 번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정성지표는 결과의 계량화나 수치화가 불가능하고,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여러 번 측정하면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각종 만족도나 인지도 조사 등은 이러한 정성지표에는 수치나 숫자로 표시되더라도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성지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과지표는 성과 프로세스 단계별로 나눌 수 있어,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I-1-1〉 성과지표 유형

구분	정량지표	정성지표
정의	• 결과가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가능	• 결과가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
특성	•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할 수 없고, 여러 번 측정 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	•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여러 번 측정하면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사례	• 해외건설 수주액 • 증감률, 건수, 금액, 달성률 등	•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 국정과제 만족도 등

자료: 황혜신 외(2021). 2021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Ⅲ: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p.15.

## 2. 성과분석 범주

본 연구에서의 정책 성과의 분석대상은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안에 저출생, 일·가정 양립 등 고용지원, 임신·출산, 초등돌봄 정책 등 어디까지를 포함해야 하는가에 따라 영유아 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가정, 직장까지로의 확대, 영유아에서 초등이상 아동으로 확대, 영유아 부모에서 청년세대까지로의 확대 등 상당히 연구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여기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초점을 두되, 돌봄정책이 이와 밀접하게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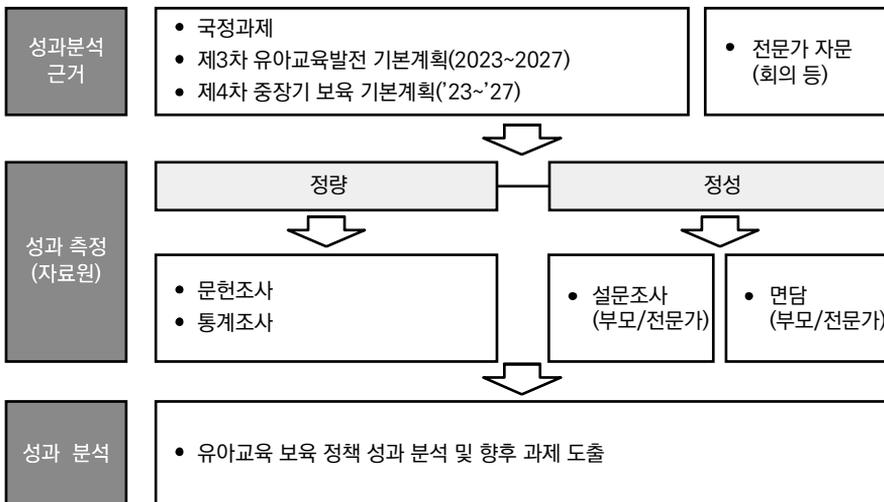
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국정과제를 일부 포함하여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정과제 및 관련 중장기 계획은 앞서 제시한 II장에서 제시하였다.

### 3. 성과분석의 틀

본 연구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과분석을 위한 핵심내용이 되는 성과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도출한다. 성과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산출하며, 가급적 정책과제별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기라는 점에서 1년차라는 점에서 정성적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량지표는 부처 공표자료, 각종 문헌, 통계자료 등을 통해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정성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이외 면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그림 III-3-1] 유아교육·보육 정책 성과분석 틀





# IV

## 2023년 유아교육·보육 정책 성과 분석

- 01 육아정책 이용경험 및 만족도: 수요자 조사 분석
- 02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우선순위
- 03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주요성과
- 04 소결



## IV. 2023년 유아교육·보육 정책 성과 분석

### 1. 육아정책 이용경험 및 만족도: 수요자 조사 분석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영유아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5가지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경험은 전체의 89.2%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은 절반가량인 53.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평균은 어린이집 4.06점, 유치원 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서비스는 민간육아도우미(83%)였으며, 공공아이돌보미(79.5%)와 시간제보육(78.8%) 순이었다. 3개 서비스의 인지도가 80% 내외인데 반해 이용경험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시간제보육 이용률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공공아이돌보미가 24.8%, 민간육아도우미가 25.2%의 이용률은 보였다. 만족도는 민간육아도우미가 가장 낮은 3.44점이었고, 공공아이돌보미가 3.58점, 시간제보육이 3.69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육아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인지 여부		계(수)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수)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평균	표준 편차	
			1. 공공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79.5			

구분	인지 여부		계(수)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수)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평균	표준 편차	
2. 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83.0	17.0	100.0 (2000)	25.2	74.8	100.0 (1660)	3.44	0.85	(418)
3. 어린이집	-	-	-	89.2	10.9	100.0 (2000)	4.06	0.80	(1783)
4. 유치원	-	-	-	53.6	46.4	100.0 (2000)	4.00	0.81	(1072)
5. 시간제보육	78.8	21.2	100.0 (2000)	21.9	78.1	100.0 (1576)	3.69	0.98	(345)

주: 만족도는 5점 척도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세부 육아지원 서비스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만족도가 4점이 넘었으나 대체로 대도시에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2〉 육아지원 서비스(어린이집)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8	2.0	18.2	48.0	31.0	100.0 (1,783)	4.06	.8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6	3.2	17.6	46.5	32.1	100.0 (340)	4.06	.82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8	2.0	21.2	47.7	28.3	100.0 (604)	4.01	.81
중소도시	0.6	1.8	17.1	49.2	31.2	100.0 (666)	4.09	.78
읍면지역	1.7	.6	13.3	46.8	37.6	100.0 (173)	4.18	.81
$\chi^2(df) / F$			17.015(12)					2.4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	2.0	16.2	48.4	32.4	100.0 (928)	4.09	.80
외벌이	0.4	2.1	20.6	48.2	28.7	100.0 (811)	4.03	.78
$\chi^2(df) / t$			8.855(4)					1.68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6	1.8	16.6	49.5	31.4	100.0 (325)	4.09	.78
351~500만원	0.4	2.1	19.7	44.3	33.5	100.0 (472)	4.08	.81
501~600만원	1.2	1.8	17.7	48.2	31.1	100.0 (328)	4.06	.82
601~750만원	1.3	2.6	16.9	47.9	31.3	100.0 (307)	4.05	.84
751만원 이상	0.6	1.7	19.4	51.3	27.1	100.0 (351)	4.03	.76
$\chi^2(df) / F$			10.403(16)					.385

주: 5점 척도임.

유치원의 만족도의 경우, 어린이집과 반대로 읍면지역보다는 대도시로 갈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큰 차이는 없으나 맞벌이 가구(3.98점)보다는

외별이 가구(4.01점)의 만족도 수준이 다소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유의미한 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육아지원 서비스(유치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7	3.1	19.5	49.2	27.6	100.0 (1,072)	4.00	.81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0	5.0	17.1	48.1	29.8	100.0 (181)	4.03	.82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5	3.4	17.3	52.4	26.4	100.0 (382)	4.01	.79
중소도시	1.0	1.9	22.1	47.6	27.4	100.0 (412)	3.99	.81
읍면지역	1.0	3.1	21.6	45.4	28.9	100.0 (97)	3.98	.85
$\chi^2(df) / F$			11.142(12)					.1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	4.2	17.9	48.6	28.2	100.0 (525)	3.98	.86
외벌이	0.2	2.1	21.2	49.7	26.8	100.0 (523)	4.01	.76
$\chi^2(df) / t$			8.915(4)					-.45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2.2	20.4	49.2	28.2	100.0 (181)	4.03	.76
351~500만원	0.7	3.1	21.6	45.3	29.3	100.0 (287)	3.99	.84
501~600만원	1.5	3.5	16.7	49.0	29.3	100.0 (198)	4.01	.86
601~750만원	1.0	3.6	19.8	46.9	28.6	100.0 (192)	3.98	.85
751만원 이상	0.0	2.8	18.2	56.5	22.4	100.0 (214)	3.99	.72
$\chi^2(df) / F$			13.969(16)					.123

주: 5점 척도임.

공공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맞벌이 여부로 구분하면, 맞벌이 가구 만족도가 3.63점으로 나타나 외벌이 가구의 만족도(3.49점)보다 높았다. 지역규모로 보면,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와 읍면지역 거주 가구 만족도가 3.62점으로 서울(3.52점)과 중소도시(3.57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351~500만원 구간 가구(3.67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보다는 고소득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1-4〉 육아지원 서비스(공공아이돌보미)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	4.3	36.3	43.1	12.9	100.0 (394)	3.58	.89
지역규모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서울특별시	4.7	7.0	33.7	40.7	14.0	100.0 (86)	3.52	.98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5	5.0	36.4	40.5	15.7	100.0 (121)	3.62	.90
중소도시	3.4	3.4	35.9	46.9	10.3	100.0 (145)	3.57	.86
읍면지역	2.4	0.0	42.9	42.9	11.9	100.0 (42)	3.62	.79
$\chi^2(df) / F$								.227
7.457(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	3.9	33.5	43.9	15.2	100.0 (230)	3.63	.91
외벌이	2.6	4.5	42.2	42.2	8.4	100.0 (154)	3.49	.82
$\chi^2(df) / t$								1.552
5.668(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6	7.0	36.6	39.4	11.3	100.0 (71)	3.44	.98
351~500만원	1.2	4.7	37.6	38.8	17.6	100.0 (85)	3.67	.86
501~600만원	2.9	5.9	39.7	38.2	13.2	100.0 (68)	3.53	.91
601~750만원	4.9	3.7	30.9	49.4	11.1	100.0 (81)	3.58	.92
751만원 이상	2.2	1.1	37.1	48.3	11.2	100.0 (89)	3.65	.78
$\chi^2(df) / F$								.883
12.344(16)								

주: 5점 척도임.

민간육아도우미의 만족도는 맞벌이 가구(3.49점)가 외벌이 가구(3.36점)보다 높았다. 지역규모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대도시(서울,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보다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에 따른 만족도 경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표 IV-1-5〉 육아지원 서비스(민간육아도우미)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	9.6	37.8	42.6	7.9	100.0 (418)	3.44	.85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0	15.2	33.3	43.8	6.7	100.0 (105)	3.40	.86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3.6	10.0	41.4	38.6	6.4	100.0 (140)	3.34	.88
중소도시	2.1	5.0	37.9	44.3	10.7	100.0 (140)	3.56	.83
읍면지역	0.0	9.1	36.4	48.5	6.1	100.0 (33)	3.52	.76
$\chi^2(df) / F$								1.764
13.461(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	10.4	32.6	45.7	9.1	100.0 (230)	3.49	.88
외벌이	2.2	8.9	45.8	36.9	6.1	100.0 (179)	3.36	.82
$\chi^2(df) / t$								1.572
7.805(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0	13.4	41.8	35.8	6.0	100.0 (67)	3.28	.88
351~500만원	2.1	5.3	42.1	41.1	9.5	100.0 (95)	3.51	.82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501~600만원	3.5	8.2	34.1	45.9	8.2	100.0 (85)	3.47	.89
601~750만원	1.4	14.5	29.0	46.4	8.7	100.0 (69)	3.46	.90
751만원 이상	1.0	8.8	40.2	43.1	6.9	100.0 (102)	3.46	.79
$\chi^2(df) / F$								.753
			11.302(16)					

주: 5점 척도임.

시간제보육의 경우, 다른 서비스와 달리 맞벌이 가구(3.68점)와 외벌이 가구(3.69점) 간 만족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지역규모와 가구소득에 따른 만족도 경향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표 IV-1-6〉 육아지원 서비스(시간제보육)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	4.9	31.9	38.3	21.4	100.0 (345)	3.69	.98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4	10.7	32.1	32.1	22.6	100.0 (84)	3.62	1.03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4.4	.9	29.8	41.2	23.7	100.0 (114)	3.79	.96
중소도시	3.7	5.5	36.7	41.3	12.8	100.0 (109)	3.54	.92
읍면지역	2.6	2.6	23.7	34.2	36.8	100.0 (38)	4.00	.99
$\chi^2(df) / F$								2.705*
			22.169(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	5.6	29.9	35.0	24.4	100.0 (197)	3.68	1.06
외벌이	1.4	4.3	35.5	41.8	17.0	100.0 (141)	3.69	.85
$\chi^2(df) / t$								-.074
			7.249(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7.7	35.4	32.3	24.6	100.0 (65)	3.74	.92
351~500만원	2.8	1.4	33.3	33.3	29.2	100.0 (72)	3.85	.96
501~600만원	6.6	3.3	29.5	41.0	19.7	100.0 (61)	3.64	1.05
601~750만원	4.8	7.9	30.2	42.9	14.3	100.0 (63)	3.54	1.00
751만원 이상	3.6	4.8	31.0	41.7	19.0	100.0 (84)	3.68	.96
$\chi^2(df) / F$								.924
			15.055(16)					

\*  $p < .05$

5가지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5개 서비스 모두 ‘낮은 서비스 질’이 가장 불만족 하는 원인으로 손꼽혔다. 어린이집의 경우, 낮은 서비스 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0%였고, 유치원은 낮은 서비스 질(25.0%)과 비용 부담(25.0%)이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아이돌보미의 경우 전체의 30.0%, 민간육아도우미는 40.8%가 서

비스 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시간제보육은 낮은 서비스 질(20.7%)과 원하는 시간/시기에 사용하기 어려움(20.7%)에 대해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V-1-7〉 육아지원 서비스 불만족 이유(전체)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1. 공공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30.0	13.3	10.0	3.3	3.3	16.7	16.7	6.7	100.0 (30)
2. 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40.8	4.1	8.2	2.0	34.7	4.1	4.1	2.0	100.0 (49)
3. 어린이집	44.0	0.0	6.0	6.0	12.0	20.0	10.0	2.0	100.0 (50)
4. 유치원	25.0	7.5	10.0	7.5	25.0	5.0	20.0	0.0	100.0 (40)
5. 시간제보육	20.7	10.3	13.8	6.9	6.9	17.2	20.7	3.4	100.0 (29)

어린이집 불만족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질이 낮음'(44.0%) 다음으로 '오래 대기해야함'(20.0%)이 전체 응답의 2/3를 차지했다. 그 외에 이유로는 '비용 부담'(12.0%),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10.0%), '까다로운 이용 자격'(6.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과 읍면지역의 경우 서비스 질보다는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더 두드러져 읍면지역은 50.0%, 서울은 38.5%가 긴 대기시간이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외벌이의 경우,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이 60.0%인데 반해 맞벌이의 경우, 서비스 질(32.1%) 외에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족(32.1%)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육아지원 서비스(어린이집)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전체	44.0	0.0	6.0	6.0	12.0	20.0	10.0	2.0	100.0 (5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3.1	0.0	15.4	0.0	23.1	38.5	0.0	0.0	100.0 (13)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광역시/특별자치시	58.8	0.0	0.0	5.9	0.0	17.6	11.8	5.9	100.0 (17)
중소도시	50.0	0.0	6.3	12.5	12.5	0.0	18.8	0.0	100.0 (16)
읍면지역	25.0	0.0	0.0	0.0	25.0	50.0	0.0	0.0	100.0 (4)
$\chi^2(df)$				24.036(1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1	0.0	3.6	7.1	10.7	32.1	14.3	0.0	100.0 (28)
외벌이	60.0	0.0	10.0	5.0	15.0	5.0	5.0	0.0	100.0 (20)
$\chi^2(df)$				8.189(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62.5	0.0	12.5	0.0	12.5	0.0	0.0	12.5	100.0 (8)
351~500만원	41.7	0.0	8.3	8.3	16.7	16.7	8.3	0.0	100.0 (12)
501~600만원	50.0	0.0	0.0	10.0	0.0	20.0	20.0	0.0	100.0 (10)
601~750만원	33.3	0.0	0.0	8.3	16.7	33.3	8.3	0.0	100.0 (12)
751만원 이상	37.5	0.0	12.5	0.0	12.5	25.0	12.5	0.0	100.0 (8)
$\chi^2(df)$				16.745(24)					

유치원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서비스 질이 낮음’(25.0%)과 ‘비용 부담’(25.0%),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20.0%)이 전체 응답의 70.0%를 차지했다. 읍면지역 가구의 경우, 서비스 질과 비용보다도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50.0%)과 ‘이용자격이 까다로운 점’(25.0%)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벌이 가구는 ‘이용자격이 까다로운 점’(25.0%)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맞벌이 가구 응답(3.6%)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V-1-9〉 육아지원 서비스(유치원)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전체	25.0	7.5	10.0	7.5	25.0	5.0	20.0	0.0	100.0 (4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2.2	0.0	11.1	0.0	33.3	11.1	22.2	0.0	100.0 (9)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광역시/특별자치시	20.0	13.3	6.7	13.3	20.0	6.7	20.0	0.0	100.0 (15)
중소도시	33.3	8.3	8.3	8.3	33.3	0.0	8.3	0.0	100.0 (12)
읍면지역	25.0	0.0	25.0	0.0	0.0	0.0	50.0	0.0	100.0 (4)
$\chi^2(df)$				10.883(1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6	10.7	3.6	3.6	28.6	3.6	21.4	0.0	100.0 (28)
외벌이	16.7	0.0	25.0	16.7	16.7	8.3	16.7	0.0	100.0 (12)
$\chi^2(df)$				8.492(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5.0	0.0	50.0	0.0	0.0	0.0	25.0	0.0	100.0 (4)
351~500만원	27.3	0.0	9.1	18.2	18.2	9.1	18.2	0.0	100.0 (11)
501~600만원	30.0	20.0	10.0	0.0	10.0	0.0	30.0	0.0	100.0 (10)
601~750만원	22.2	11.1	0.0	11.1	33.3	0.0	22.2	0.0	100.0 (9)
751만원 이상	16.7	0.0	0.0	0.0	66.7	16.7	0.0	0.0	100.0 (6)
$\chi^2(df)$				26.834(24)					

공공아이돌보미의 경우, 낮은 서비스 질(30.0%)이 가장 큰 불만족 요인으로 드러났고 이 외에도 ‘긴 대기시간’(16.7%),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16.7%),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13.3%), ‘까다로운 이용자격’(10.0%) 등의 이유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는 낮은 서비스 질(45.5%)과 긴 대기시간(36.4%)이 주요 불만족 원인인데 반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은 서비스 질(23.5%), 이용방법/절차의 복잡함(23.5%),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 어려움(23.5%)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표 IV-1-10〉 육아지원 서비스(공공아이돌보미)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전체	30.0	13.3	10.0	3.3	3.3	16.7	16.7	6.7	100.0 (30)
지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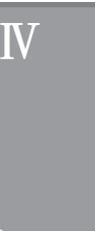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서울특별시	50.0	30.0	10.0	0.0	0.0	0.0	10.0	0.0	100.0 (10)
광역시/특별자치시	22.2	11.1	22.2	11.1	11.1	0.0	11.1	11.1	100.0 (9)
중소도시	20.0	0.0	0.0	0.0	0.0	40.0	30.0	10.0	100.0 (10)
읍면지역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
$\chi^2(df)$				26.276(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5	23.5	11.8	5.9	5.9	5.9	23.5	0.0	100.0 (17)
외벌이	45.5	0.0	9.1	0.0	0.0	36.4	9.1	0.0	100.0 (11)
$\chi^2(df)$				9.180(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4.4	0.0	11.1	0.0	0.0	22.2	0.0	22.2	100.0 (9)
351~500만원	40.0	0.0	0.0	0.0	0.0	40.0	20.0	0.0	100.0 (5)
501~600만원	33.3	16.7	16.7	0.0	0.0	16.7	16.7	0.0	100.0 (6)
601~750만원	0.0	14.3	14.3	14.3	14.3	0.0	42.9	0.0	100.0 (7)
751만원 이상	33.3	66.7	0.0	0.0	0.0	0.0	0.0	0.0	100.0 (3)
$\chi^2(df)$				32.073(28)					

민간육아도우미도 공공아이돌보미와 같이 낮은 서비스 질(40.8%)이 가장 큰 불만족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비용 부담’이 34.7%로 나타나 대부분 서비스 질과 비용으로 인한 불만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45.0%인 반면 맞벌이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51.7%로 나타나 불만족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가구 뿐만 아니라 601~750만원, 751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V-1-11〉 육아지원 서비스(민간육아도우미)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전체	40.8	4.1	8.2	2.0	34.7	4.1	4.1	2.0	100.0 (49)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41.2	11.8	5.9	0.0	35.3	5.9	0.0	0.0	100.0 (17)
광역시/특별자치시	47.4	0.0	0.0	5.3	36.8	0.0	10.5	0.0	100.0 (19)
중소도시	40.0	0.0	10.0	0.0	30.0	10.0	0.0	10.0	100.0 (10)
읍면지역	0.0	0.0	66.7	0.0	33.3	0.0	0.0	0.0	100.0 (3)
$\chi^2(df)$				30.090(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7	6.9	3.4	0.0	27.6	3.4	6.9	0.0	100.0 (29)
외벌이	25.0	0.0	15.0	5.0	45.0	5.0	0.0	5.0	100.0 (20)
$\chi^2(df)$				10.769(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5.5	0.0	9.1	0.0	45.5	0.0	0.0	0.0	100.0 (11)
351~500만원	57.1	0.0	14.3	14.3	14.3	0.0	0.0	0.0	100.0 (7)
501~600만원	50.0	10.0	0.0	0.0	20.0	10.0	0.0	10.0	100.0 (10)
601~750만원	18.2	0.0	18.2	0.0	45.5	9.1	9.1	0.0	100.0 (11)
751만원 이상	40.0	10.0	0.0	0.0	40.0	0.0	10.0	0.0	100.0 (10)
$\chi^2(df)$				25.855(28)					

시간제보육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서비스 질이 낮음’(20.7%) 외에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20.7%), ‘오래 대기해야함’(17.2%)와 같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없는 측면이 전체의 불만족 이유의 37.9%를 차지했다. 또한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13.8%),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10.3%)과 문제도 지적되었다.

〈표 IV-1-12〉 육아지원 서비스(시간제보육)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전체	20.7	10.3	13.8	6.9	6.9	17.2	20.7	3.4	100.0 (29)
지역규모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서울특별시	18.2	9.1	36.4	9.1	0.0	9.1	18.2	0.0	100.0 (11)
광역시/특별자치시	33.3	0.0	0.0	16.7	0.0	16.7	33.3	0.0	100.0 (6)
중소도시	20.0	20.0	0.0	0.0	20.0	10.0	20.0	10.0	100.0 (10)
읍면지역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2)
$\chi^2(df)$				26.226(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8	4.8	14.3	4.8	9.5	19.0	23.8	0.0	100.0 (21)
외벌이	12.5	25.0	12.5	12.5	0.0	12.5	12.5	12.5	100.0 (8)
$\chi^2(df)$				7.057(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0.0	20.0	20.0	0.0	0.0	20.0	20.0	0.0	100.0 (5)
351~500만원	0.0	33.3	0.0	0.0	0.0	33.3	33.3	0.0	100.0 (3)
501~600만원	50.0	0.0	0.0	0.0	16.7	16.7	0.0	16.7	100.0 (6)
601~750만원	12.5	0.0	37.5	0.0	12.5	12.5	25.0	0.0	100.0 (8)
751만원 이상	14.3	14.3	0.0	28.6	0.0	14.3	28.6	0.0	100.0 (7)
$\chi^2(df)$				27.37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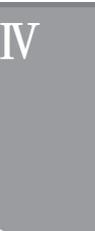
연장보육은 어린이집 이용 경험자 1,064명 중 절반가량인 51.3%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IV-1-13〉 연장보육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이용 경험		계
	있음	없음	
전체	51.3	48.7	100.0 (1,064)

어린이집 보육시간 운영방식(기본보육 시간+연장보육 시간)의 만족도는 평균 4.15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여, 평균 만족도가 4.38점으로 타지역보다 더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4.17점)이 외벌이 가구(4.12점)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14〉 어린이집 보육시간 운영방식(기본보육 시간+연장보육 시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7	2.6	10.8	52.6	33.3	100.0 (546)	4.15	.77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0	3.8	14.5	50.4	31.3	100.0 (131)	4.09	.78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0	1.7	7.4	57.7	33.1	100.0 (175)	4.22	.65
중소도시	2.1	3.2	11.1	53.2	30.5	100.0 (190)	4.07	.85
읍면지역	0.0	0.0	12.0	38.0	50.0	100.0 (50)	4.38	.70
$\chi^2(df) / F$			21.727(12)*					3.029*
맞벌이 여부								
맞벌이	0.8	2.3	10.7	51.5	34.6	100.0 (355)	4.17	.77
외벌이	0.5	2.7	10.8	55.7	30.3	100.0 (185)	4.12	.75
$\chi^2(df) / t$			1.350(4)					.64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1.4	12.7	56.3	29.6	100.0 (71)	4.14	.68
351~500만원	1.5	3.1	11.5	48.9	35.1	100.0 (131)	4.13	.84
501~600만원	1.0	4.8	11.4	49.5	33.3	100.0 (105)	4.10	.85
601~750만원	0.9	0.9	10.7	55.4	32.1	100.0 (112)	4.17	.72
751만원 이상	0.0	2.4	8.7	54.3	34.6	100.0 (127)	4.21	.70
$\chi^2(df) / F$			8.756(16)					.387

\*  $p < .05$

주: 5점 척도임.

유치원을 이용 경험자 591명을 대상으로 방과후과정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77.0%의 가구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5〉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이용 경험		계
	있음	없음	
전체	77.0	23.0	100.0 (591)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의 만족도는 평균 4.08점 연장보육보다는 다소 낮으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4.13점) 보다 외벌이 가구(4.02점)의 전체 만족도 점수는 높으나,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맞벌이 가구(4.1%)가 외벌이 가구(0.5%)보다 많았다. 지역규모 별로 살펴보면, 연장보육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 가구가 4.2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

고 있다.

〈표 IV-1-16〉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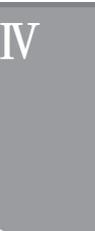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2.2	17.1	50.3	30.1	100.0 (455)	4.08	.7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2	3.5	8.1	54.7	32.6	100.0 (86)	4.14	.8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0	3.1	22.4	46.6	28.0	100.0 (161)	3.99	.79
중소도시	0.0	1.1	16.1	53.9	28.9	100.0 (180)	4.11	.70
읍면지역	0.0	0.0	21.4	35.7	42.9	100.0 (28)	4.21	.79
$\chi^2(df) / F$			18.594(12)					1.2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0.4	3.7	12.7	48.8	34.4	100.0 (244)	4.13	.80
외벌이	0.0	0.5	21.8	52.5	25.2	100.0 (202)	4.02	.70
$\chi^2(df) / t$			14.646(4)**					1.49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1.7	19.0	51.7	27.6	100.0 (58)	4.05	.74
351~500만원	0.0	0.0	25.8	46.2	28.0	100.0 (132)	4.02	.74
501~600만원	0.0	4.4	11.0	51.6	33.0	100.0 (91)	4.13	.78
601~750만원	1.2	4.8	10.7	50.0	33.3	100.0 (84)	4.10	.86
751만원 이상	0.0	1.1	15.6	54.4	28.9	100.0 (90)	4.11	.69
$\chi^2(df) / F$			24.064(16)					.359

\*\*  $p < .01$   
 주: 5점 척도임.

#### 나. 초등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6가지 초등돌봄 서비스 관련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초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인지도가 각각 98.6%, 94.8%로 다른 서비스보다 높은 편이었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86.1%가 이용경험이 있었고, 초등돌봄교실은 절반에 가까운 52.2%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족도는 방과후학교가 3.99점, 초등돌봄교실이 3.95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돌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만 68.0%의 인지도를 보였고 나머지 서비스(다함께돌봄센터,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늘봄학교)는 전체의 30% 내외만이 서비스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용 경험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마



을공동체 돌봄, 늘봄학교 모두 저조하여 10%대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육아/마을공동체 돌봄이 3.84점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다소 낮았고, 대체로 3.9~4.0 점대를 보였다.

〈표 IV-1-17〉 초등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인지 여부		계(수)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수)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평균	표준 편차	
1. 초등돌봄교실	94.8	5.2	100.0 (578)	52.2	47.8	100.0 (548)	3.95	.83	(286)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98.6	1.4	100.0 (578)	86.1	13.9	100.0 (570)	3.99	.76	(491)
3. 지역아동센터	68.0	32.0	100.0 (578)	17.8	82.2	100.0 (393)	3.94	.93	(70)
4.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 돌봄포함)	38.6	61.4	100.0 (578)	17.0	83.0	100.0 (223)	3.97	.91	(38)
5.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32.4	67.6	100.0 (578)	13.4	86.6	100.0 (187)	3.84	.62	(25)
6. 늘봄학교	30.6	69.4	100.0 (578)	11.3	88.7	100.0 (177)	4.00	.73	(20)

주: 만족도는 5점 척도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초등돌봄교실의 만족도를 지역규모별로 보면,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3.8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두드러진 만족도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 가구(3.92점)보다는 외벌이 가구(3.99점)가 근소하게 만족도가 높았고, 501~600만원 소득 가구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저소득 가구일 수록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8〉 초등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	3.5	20.3	49.3	25.9	100.0 (286)	3.95	.83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3	0.0	20.9	48.8	27.9	100.0 (43)	4.00	.85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0	4.2	22.5	59.2	14.1	100.0 (71)	3.83	.72	
중소도시	0.0	3.8	16.0	54.7	25.5	100.0 (106)	4.02	.76	
읍면지역	3.0	4.5	24.2	30.3	37.9	100.0 (66)	3.95	1.04	
$\chi^2(df) / F$			22.904(12)*					.77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	3.1	22.7	46.9	25.8	100.0 (194)	3.92	.86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외별이	0.0	4.9	15.9	54.9	24.4	100.0 (82)	3.99	.78
$\chi^2(df) / t$	3.862(4)							-.58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5.4	16.2	40.5	37.8	100.0 (37)	4.11	.88
351~500만원	0.0	4.5	19.7	40.9	34.8	100.0 (66)	4.06	.86
501~600만원	4.0	2.0	20.0	56.0	18.0	100.0 (50)	3.82	.90
601~750만원	0.0	3.3	21.3	55.7	19.7	100.0 (61)	3.92	.74
751만원 이상	1.4	2.8	22.2	51.4	22.2	100.0 (72)	3.90	.82
$\chi^2(df) / F$	16.587(16)							1.004

\*  $p < .05$   
 주: 5점 척도임.

초등학교 방과후과정 만족도를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 가구가 4.12점의 만족도를 보여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로 갈수록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3.97점)보다는 외벌이 가구(4.02점)이 다소 높았으며, 가구 소득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없으나 751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의 만족도가 3.88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1-19〉 초등돌봄 서비스(초등학교 방과후과정)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6	2.2	18.9	53.6	24.6	100.0 (491)	3.99	.7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4	1.4	21.4	52.9	22.9	100.0 (70)	3.94	.8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6	1.9	18.9	57.9	20.8	100.0 (159)	3.96	.73
중소도시	0.0	3.3	18.5	54.3	23.9	100.0 (184)	3.99	.75
읍면지역	1.3	1.3	17.9	43.6	35.9	100.0 (78)	4.12	.84
$\chi^2(df) / F$	11.365(12)							.857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	0.8	21.3	52.9	23.8	100.0 (240)	3.97	.77
외벌이	0.0	3.0	17.7	54.0	25.3	100.0 (237)	4.02	.74
$\chi^2(df) / t$	6.711(4)							-.66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2.3	14.8	47.7	35.2	100.0 (88)	4.16	.76
351~500만원	0.0	3.7	20.7	49.6	25.9	100.0 (135)	3.98	.79
501~600만원	1.0	1.0	17.5	56.7	23.7	100.0 (97)	4.01	.74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601~750만원	0.0	3.7	18.5	56.8	21.0	100.0 (81)	3.95 .74
751만원 이상	2.2	0.0	22.2	58.9	16.7	100.0 (90)	3.88 .76
$\chi^2(df) / F$	20.985(16)						1.654

주: 5점 척도임.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가구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76.7%였으나 외벌이 가구는 그보다 낮은 60.0%로, 만족도 점수는 맞벌이가 4.07점, 외벌이가 3.7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3.8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두드러진 만족도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IV-1-20〉 초등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	5.7	20.0	42.9	30.0	100.0 (70)	3.94 .93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0	5.3	21.1	36.8	36.8	100.0 (19)	4.05 .9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0	15.0	20.0	35.0	30.0	100.0 (20)	3.80 1.06
중소도시	5.9	0.0	5.9	58.8	29.4	100.0 (17)	4.06 .97
읍면지역	0.0	0.0	35.7	42.9	21.4	100.0 (14)	3.86 .77
$\chi^2(df) / F$	13.448(12)						.3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7.0	16.3	39.5	37.2	100.0 (43)	4.07 .91
외벌이	0.0	5.0	35.0	45.0	15.0	100.0 (20)	3.70 .80
$\chi^2(df) / t$	4.568(3)						1.55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6.7	0.0	33.3	40.0	20.0	100.0 (15)	3.67 1.05
351~500만원	0.0	6.3	12.5	50.0	31.3	100.0 (16)	4.06 .85
501~600만원	0.0	7.7	15.4	46.2	30.8	100.0 (13)	4.00 .91
601~750만원	0.0	9.1	27.3	45.5	18.2	100.0 (11)	3.73 .90
751만원 이상	0.0	6.7	13.3	33.3	46.7	100.0 (15)	4.20 .94
$\chi^2(df) / F$	10.409(16)						.834

주: 5점 척도임.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를 가구소득으로 구분해보면, 가장 적게 버는 350만원 이하 가구의 만족도가 3.2점으로 제일 낮았으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버는 751만원 가구 3.75점의 만족도를 보였고, 중간 소득층인 501~600만원 가구 4.40점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4.08점)가 외벌이 가구(3.64점)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지역규모별로 봤을 때는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인 3.75점으로 드러났는데, 지역규모에 따른 두드러진 만족도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21〉 초등돌봄 서비스(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0	10.5	10.5	50.0	28.9	100.0 (38)	3.97	.91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0	16.7	0.0	50.0	33.3	100.0 (12)	4.00	1.04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0	0.0	25.0	75.0	0.0	100.0 (4)	3.75	.50
중소도시	0.0	8.3	8.3	50.0	33.3	100.0 (12)	4.08	.90
읍면지역	0.0	10.0	20.0	40.0	30.0	100.0 (10)	3.90	.99
$\chi^2(df) / F$			5.896(9)					.151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8.0	12.0	44.0	36.0	100.0 (25)	4.08	.91
외벌이	0.0	18.2	9.1	63.6	9.1	100.0 (11)	3.64	.92
$\chi^2(df) / t$			3.351(3)					1.34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40.0	0.0	60.0	0.0	100.0 (5)	3.20	1.10
351~500만원	0.0	0.0	7.7	61.5	30.8	100.0 (13)	4.23	.60
501~600만원	0.0	0.0	0.0	60.0	40.0	100.0 (5)	4.40	.55
601~750만원	0.0	0.0	42.9	14.3	42.9	100.0 (7)	4.00	1.00
751만원 이상	0.0	25.0	0.0	50.0	25.0	100.0 (8)	3.75	1.16
$\chi^2(df) / F$			21.811(12)*					1.651

\*  $p < .05$

주: 5점 척도임.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만족도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만족도가 3.67점인데 반해,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점차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3.82점)의 만족도가 외벌이 가구(3.67점)보다 높았으며, 가구 소득에 따른 두드러진 만족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IV-1-22〉 초등돌봄 서비스(육아/마을공동체 돌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0	0.0	28.0	60.0	12.0	100.0 (25)	3.84	.6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0	0.0	44.4	44.4	11.1	100.0 (9)	3.67	.7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0	0.0	50.0	25.0	25.0	100.0 (4)	3.75	.96
중소도시	0.0	0.0	0.0	100.0	0.0	100.0 (7)	4.00	0.00
읍면지역	0.0	0.0	20.0	60.0	20.0	100.0 (5)	4.00	.71
$\chi^2(df) / F$			8.357(6)					.4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0.0	29.4	58.8	11.8	100.0 (17)	3.82	.64
외벌이	0.0	0.0	33.3	66.7	0.0	100.0 (6)	3.67	.52
$\chi^2(df) / t$			0.773(2)					.54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0.0	0.0	100.0	0.0	100.0 (2)	4.00	0.00
351~500만원	0.0	0.0	40.0	40.0	20.0	100.0 (5)	3.80	.84
501~600만원	0.0	0.0	25.0	75.0	0.0	100.0 (4)	3.75	.50
601~750만원	0.0	0.0	20.0	60.0	20.0	100.0 (5)	4.00	.71
751만원 이상	0.0	0.0	33.3	55.6	11.1	100.0 (9)	3.78	.67
$\chi^2(df) / F$			3.341(8)					.140

주: 5점 척도임.

늘봄학교 만족도의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0점을 넘는 만족도를 보였으며 맞벌이 가구(3.93점)보다는 외벌이 가구(4.2점)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IV-1-23〉 초등돌봄 서비스(늘봄학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0	0.0	25.0	50.0	25.0	100.0 (20)	4.00	.73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0	0.0	25.0	50.0	25.0	100.0 (8)	4.00	.76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0	0.0	0.0	100.0	0.0	100.0 (2)	4.00	0.00
중소도시	0.0	0.0	20.0	40.0	40.0	100.0 (5)	4.20	.84
읍면지역	0.0	0.0	40.0	40.0	20.0	100.0 (5)	3.80	.84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chi^2(df) / F$	3.200(6)						.2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0.0	28.6	50.0	21.4	100.0 (14)	3.93	.73
외벌이	0.0	0.0	20.0	40.0	40.0	100.0 (5)	4.20	.84
$\chi^2(df) / t$	0.663(2)							-.68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0.0	0.0	0.0	0.0	0.0 (0)	-	-
351~500만원	0.0	0.0	20.0	40.0	40.0	100.0 (5)	4.20	.84
501~600만원	0.0	0.0	0.0	0.0	0.0	0.0 (0)	-	-
601~750만원	0.0	0.0	50.0	33.3	16.7	100.0 (6)	3.67	.82
751만원 이상	0.0	0.0	11.1	66.7	22.2	100.0 (9)	4.11	.60
$\chi^2(df) / F$	3.822(4)						.921	

주: 5점 척도임.

6가지 초등돌봄 서비스 중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방과후과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과반이 넘는 61.5%의 부모가 낮은 서비스 질을 불만족 이유로 응답했다. 방과후과정도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28.6%로 가장 많았으나, 이외에 ‘이용자격이 까다로움’(21.4%), ‘비용 부담’(14.3%), ‘차량 미운행’(14.3%)등의 여러 가지 응답도 나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소수의 응답자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자격이 까다로운 점, 원할 때에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낮은 서비스 질, 차량 미운행, 긴 대기시간과 원할 때에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불만족 요인으로 응답했다.

〈표 IV-1-24〉 초등돌봄 서비스 불만족 이유(전체)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이용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급식을 제공하지 않음	차량을 운행하지 않음	기타	계(수)
1. 초등돌봄교실	61.5	15.4	7.7	0.0	0.0	0.0	0.0	0.0	7.7	7.7	100.0 (13)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28.6	7.1	21.4	0.0	14.3	7.1	7.1	0.0	14.3	0.0	100.0 (14)
3. 지역아동센터	0.0	0.0	20.0	20.0	0.0	0.0	20.0	0.0	0.0	40.0	100.0 (5)
4.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체 돌봄포함)	25.0	0.0	0.0	0.0	0.0	25.0	25.0	0.0	25.0	0.0	100.0 (4)

## 다.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시간지원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이용률을 조사하였다.

### 1) 현금 의료비 지원 제도

먼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의료비지원, 건강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지원금 등을 대표적으로 조사하였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대해서는 50%의 인지도를 보였다.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만0세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와 초등저학년 중 관련 최근 변화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경험은 현금 및 의료비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이용률이 96.5%로 가장 높았고, 영아수당 88.3%,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84.9%,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 84.3%, 가정양육수당 78.7%, 첫만남이용권 71.2%, 부모급여 57.4%, 건강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은 51.8% 이었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의 만족도 중 첫만남이용권 이용자의 만족도가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외는 3.5~3.6점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1-2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인지 여부		계(수)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수)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평균	표준 편차	
1. 아동수당	98.8	1.2	100.0 (2000)	96.5	3.5	100.0 (1939)	3.55	1.00	(1872)
2. 영아수당	91.9	8.1	100.0 (2000)	88.3	11.7	100.0 (1708)	3.55	1.01	(1509)
3. 가정양육수당	82.8	17.2	100.0 (2000)	78.7	21.3	100.0 (1482)	3.53	1.00	(1166)
4.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84.5	15.6	100.0 (2000)	84.9	15.1	100.0 (1574)	3.66	.96	(1336)

구분	인지 여부		계(수)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수)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평균	표준 편차	
진료비 지원)									
5.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77.5	22.5	100.0 (2000)	51.8	48.2	100.0 (1115)	3.63	.99	(578)
6. 첫만남이용권	53.6	46.5	100.0 (2000)	71.2	28.8	100.0 (824)	3.88	.99	(587)
7.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83.0	17.0	100.0 (2000)	84.3	15.7	100.0 (1518)	3.48	1.09	(1280)
8. 부모 급여	59.8	40.2	100.0 (2000)	57.4	42.6	100.0 (869)	3.68	1.04	(499)

주: 만족도는 5점 척도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외벌이보다 맞벌이 부부의 만족도가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비 지원은 지역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만족도 평균에 차이가 없었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만족도가 더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만족도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제도와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제도의 만족도는 맞벌이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만족도 평균이 더 높았고, 지역규모와 가구소득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외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는 지역규모, 맞벌이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만족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2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만족도1

단위: %(명), 점

구분	이동수당		영양수당		가정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5	1.00	100.0	(1872)	3.55	1.01	100.0	(1509)	3.53	1.00	100.0	(1166)	3.66	.96	100.0	(133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57	1.04	100.0	(349)	3.55	1.05	100.0	(300)	3.47	1.08	100.0	(217)	3.67	1.00	100.0	(26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3.45	1.02	100.0	(628)	3.44	1.01	100.0	(513)	3.45	.99	100.0	(401)	3.59	.94	100.0	(447)
중소도시	3.62	.97	100.0	(715)	3.61	.99	100.0	(555)	3.59	.97	100.0	(434)	3.71	.97	100.0	(497)
읍면지역	3.64	.97	100.0	(180)	3.72	.95	100.0	(141)	3.67	1.00	100.0	(114)	3.67	.89	100.0	(132)
<i>F</i>	3.508*				4.100**				2.274				1.337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2	1.02	100.0	(944)	3.62	1.01	100.0	(754)	3.59	1.01	100.0	(562)	3.72	.94	100.0	(703)
외벌이	3.47	.98	100.0	(886)	3.46	.99	100.0	(720)	3.46	.99	100.0	(582)	3.58	.96	100.0	(609)
<i>t</i>	3.189**				2.974**				2.205*				2.60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46	1.04	100.0	(351)	3.40	1.06	100.0	(282)	3.42	1.00	100.0	(228)	3.55	1.01	100.0	(255)
351~500만원	3.48	1.03	100.0	(509)	3.53	.98	100.0	(416)	3.48	1.01	100.0	(323)	3.61	.93	100.0	(351)
501~600만원	3.57	1.04	100.0	(329)	3.61	1.04	100.0	(269)	3.58	1.06	100.0	(211)	3.67	.99	100.0	(244)
601~750만원	3.60	1.00	100.0	(316)	3.59	1.05	100.0	(246)	3.56	1.03	100.0	(188)	3.70	.95	100.0	(220)
751만원 이상	3.69	.87	100.0	(367)	3.64	.92	100.0	(296)	3.63	.92	100.0	(216)	3.80	.91	100.0	(266)
<i>F</i>	3.217*				2.591*				1.581				2.639*			

\*  $p < .05$ , \*\*  $p < .01$ 

주: 5점 척도임.

〈표 IV-1-27〉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만족도2

단위: %(명), 점

구분	건강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부모급여		
	평균	표준편차	계 (수)	평균	표준편차	계 (수)	평균	표준편차	계 (수)	평균	표준편차	계 (수)
전체	3.63	.99	100.0 (578)	3.88	.99	100.0 (587)	3.48	1.09	100.0 (1280)	3.68	1.04	100.0 (49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59	1.08	100.0 (133)	3.82	1.04	100.0 (124)	3.50	1.10	100.0 (211)	3.65	1.03	100.0 (92)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3.59	1.03	100.0 (184)	3.82	1.02	100.0 (193)	3.38	1.10	100.0 (421)	3.56	1.13	100.0 (161)
중소도시	3.70	.90	100.0 (207)	3.96	.94	100.0 (212)	3.51	1.09	100.0 (499)	3.77	.93	100.0 (187)
읍면지역	3.65	.99	100.0 (54)	3.95	.98	100.0 (58)	3.62	1.04	100.0 (149)	3.80	1.08	100.0 (59)
<i>F</i>	.550			.868			2.240			1.47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2	.95	100.0 (303)	3.93	.98	100.0 (299)	3.54	1.08	100.0 (653)	3.72	1.00	100.0 (268)
외벌이	3.51	1.03	100.0 (264)	3.83	1.00	100.0 (278)	3.39	1.08	100.0 (603)	3.61	1.08	100.0 (222)
<i>t</i>	2.529*			1.156			2.467*			1.10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47	.98	100.0 (107)	3.72	1.14	100.0 (116)	3.35	1.13	100.0 (238)	3.49	1.11	100.0 (100)
351~500만원	3.56	1.04	100.0 (153)	3.94	.89	100.0 (163)	3.43	1.11	100.0 (356)	3.76	1.05	100.0 (131)
501~600만원	3.74	1.00	100.0 (103)	3.92	.98	100.0 (101)	3.59	1.10	100.0 (231)	3.74	1.08	100.0 (86)
601~750만원	3.64	.98	100.0 (92)	3.94	1.00	100.0 (97)	3.56	1.04	100.0 (206)	3.76	.96	100.0 (84)
751만원 이상	3.77	.93	100.0 (123)	3.90	.97	100.0 (110)	3.49	1.04	100.0 (249)	3.65	.95	100.0 (98)
<i>F</i>	1.841			1.080			1.845			1.286		

\*  $p < .05$

주: 5점 척도임.

현금지원 제도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수당에 불만족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충분치 않아서’가 8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대상 자녀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가 9.0%,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가 3.3%,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가 2.0%,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가 0.8%,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이 0.4% 순으로 나타났다.

첫만남 이용권 제도 이용자의 불만족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충분치 않아서’가 7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대상 자녀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가 12.5%,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가 5.4%,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가 3.6%,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와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 수혜자의 불만족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충분치 않아서’가 8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대상 자녀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가 6.1%,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가 1.7%,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와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가 1.3%,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이 0.9%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 수혜자의 불만족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충분치 않아서’가 8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대상 자녀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가 6.1%,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가 1.5%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8〉 현금지원 제도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원 금액이 충분치 않아서	지원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기타	계(수)
1. 아동수당	84.1	9.0	2.0	0.8	3.3	0.4	0.4	100.0 (245)
2. 영아수당	84.8	9.1	2.0	0.5	2.0	0.5	1.0	100.0 (197)
3. 가정양육수당	84.8	9.5	1.9	0.6	1.9	0.6	0.6	100.0 (158)
6. 첫만남이용권	73.2	12.5	3.6	1.8	5.4	1.8	1.8	100.0 (56)
7.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	85.7	6.1	1.7	1.3	1.3	0.9	3.0	100.0 (230)
8. 부모급여	84.8	6.1	1.5	0.0	6.1	0.0	1.5	100.0 (66)

의료비 및 건강 지원 이용자 중 불만이라고 응답한 경우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경우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가 76.5%, ‘지원 기간이 충분치 않아서’가 14.0%로 나타났다.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제도의 경우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가 77.3%, ‘지원 기간이 충분치 않아서’가 12.0%로 나타났다.

〈표 IV-1-29〉 현금지원 제도(의료비 및 건강 지원 제도)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지원 기간이 충분치 않아서	지원 받기까지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기타	계(수)
4. 의료비 지원	76.5	3.7	14.0	0.7	2.9	2.2	100.0 (136)
5. 건강 지원	77.3	8.0	12.0	1.3	0.0	1.3	100.0 (75)

## 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지원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유연근무제는 일반적인 시차출퇴근제 이외에 재택근로를 포함하

였다.

시간지원 제도 중 자녀돌봄 시간 지원은 응답자 중 모 출산휴가를 이용한 경험은 64.1%로 다른 시간지원 제도에 비해 이용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의 육아휴직이 54.5%, 부의 출산휴가가 49.9% 수준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 당시의 지원제도와 출산 초 엄마에 대한 지원제도의 이용이 다소 많았다. 이와 달리 임신기나, 출산후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가 33.3%, 부가 19.9%였으며,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이용률은 대체로 20% 수준을 밑돌았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만족도는 부의 유연근무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5점 중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모 출산휴가가 3.80점으로 나타났다. 모두 불만족보다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IV-1-3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인지 여부		계(수)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수)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평균	표준 편차	
1. 모 출산휴가	89.1	10.9	100.0 (2000)	64.1	35.9	100.0 (1383)	3.80	.99	(886)
2. 부 출산휴가	86.5	13.6	100.0 (2000)	49.9	50.1	100.0 (1536)	3.62	1.08	(766)
3. 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70.5	29.6	100.0 (2000)	33.3	66.7	100.0 (1095)	3.78	.97	(365)
4. 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55.0	45.0	100.0 (2000)	19.9	80.1	100.0 (937)	3.77	1.01	(186)
5. 모 육아휴직	93.4	6.7	100.0 (2000)	54.5	45.5	100.0 (1447)	3.73	1.07	(789)
6. 부 육아휴직	89.6	10.5	100.0 (2000)	20.8	79.2	100.0 (1544)	3.71	1.09	(321)
7.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51.4	48.7	100.0 (2000)	17.0	83.0	100.0 (759)	3.72	.98	(129)
8.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44.8	55.3	100.0 (2000)	12.6	87.4	100.0 (736)	3.77	.85	(93)
9.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53.6	46.5	100.0 (2000)	21.1	78.9	100.0 (828)	3.65	1.00	(175)
10.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46.8	53.2	100.0 (2000)	17.0	83.0	100.0 (789)	3.87	.90	(134)
11. 기타	4.2	95.8	100.0 (2000)	43.9	56.1	100.0 (57)	3.52	1.08	(25)

주: 만족도는 5점 척도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는 지역규모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만족도 차이가 없었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재택근로)의 경우, 모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만족도 평균이 더 높았고, 지역규모나 가구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의 경우는 육아휴직 만족도는 맞벌이가구 이외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의 경우, 부의 경우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외 지역규모나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표 IV-1-3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모			부			모			부			모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80	.99	(886)	3.62	1.08	(766)	3.78	.97	(365)	3.77	1.01	(186)	3.73	1.07	(78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87	.97	(204)	3.62	1.01	(154)	3.71	1.01	(80)	3.63	1.05	(40)	3.78	1.07	(178)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3.75	.99	(284)	3.57	1.16	(251)	3.80	.94	(115)	3.72	1.08	(57)	3.68	1.05	(253)
중소도시	3.78	1.02	(328)	3.65	1.06	(296)	3.80	.98	(143)	3.86	.92	(64)	3.73	1.08	(292)
읍면지역	3.93	.95	(70)	3.68	1.00	(65)	3.74	1.02	(27)	3.88	.97	(25)	3.85	1.04	(66)
<i>F</i>	1.040			.341			.170			.590			.59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3	1.00	(658)	3.69	1.09	(426)	3.83	.97	(284)	3.84	1.05	(120)	3.77	1.08	(589)
외벌이	3.67	.99	(212)	3.51	1.04	(327)	3.46	.95	(71)	3.57	.92	(61)	3.58	1.02	(185)
<i>t</i>	2.055*			2.349*			2.826**			1.695			2.03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53	1.04	(88)	3.52	1.08	(115)	3.54	.90	(37)	3.56	.85	(27)	3.67	1.00	(79)
351~500만원	3.87	.98	(158)	3.56	1.11	(188)	3.63	1.09	(60)	3.70	1.12	(47)	3.67	1.06	(146)
501~600만원	3.73	1.09	(166)	3.54	1.15	(146)	3.91	.94	(66)	3.55	1.09	(31)	3.63	1.20	(147)
601~750만원	3.88	.93	(198)	3.73	.99	(146)	3.83	.96	(80)	4.06	.96	(31)	3.77	.99	(177)
751만원 이상	3.83	.96	(276)	3.71	1.04	(171)	3.81	.96	(122)	3.90	.91	(50)	3.82	1.06	(240)
<i>F</i>	2.377			1.248			1.264			1.633			.971		

구분	육아휴직			유연근로제(재택근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부			모			부			모			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71	1.09	(321)	3.72	.98	(129)	3.77	.85	(93)	3.65	1.00	(175)	3.87	.90	(134)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77	1.07	(83)	3.75	.95	(32)	3.83	.89	(29)	3.79	.83	(43)	3.83	.99	(3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3.61	1.16	(95)	3.64	.93	(39)	3.75	.89	(28)	3.63	1.03	(59)	4.00	.86	(47)
중소도시	3.78	1.03	(114)	3.78	1.01	(46)	3.85	.67	(26)	3.64	1.05	(59)	3.89	.80	(45)
읍면지역	3.62	1.21	(29)	3.67	1.23	(12)	3.50	1.08	(10)	3.36	1.15	(14)	3.42	1.08	(12)
<i>F</i>	.567			.164			.448			.692			1.3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3	1.09	(206)	3.77	1.02	(94)	3.83	.96	(58)	3.65	1.01	(138)	3.87	.99	(85)
외벌이	3.44	1.06	(108)	3.39	.69	(28)	3.65	.61	(31)	3.50	.90	(30)	3.89	.68	(45)
<i>t</i>	2.958**			2.236*			1.095			.763			-.12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46	1.11	(46)	3.35	.93	(17)	3.43	.65	(14)	3.45	.94	(20)	3.70	.82	(23)
351~500만원	3.48	1.17	(82)	3.82	.82	(28)	3.65	.75	(20)	3.89	.88	(28)	3.88	.67	(25)
501~600만원	3.88	1.15	(56)	3.74	1.10	(19)	3.64	1.01	(14)	3.62	1.18	(34)	3.54	1.14	(26)
601~750만원	3.84	.94	(62)	3.59	1.09	(29)	3.95	.76	(20)	3.54	.97	(39)	4.15	.77	(27)
751만원 이상	3.91	1.03	(75)	3.92	.97	(36)	4.00	.96	(25)	3.70	.98	(54)	4.03	.92	(33)
<i>F</i>	2.751*			1.167			1.457			.779			2.087		

\*  $p < .05$ , \*\*  $p < .01$

주: 5점 척도임.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이용자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본 결과, 먼저 출산휴가의 경우 모는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가 38.5%,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어서(직장 눈치가 보여서)’가 36.3%,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워서’가 9.9%로 나타났다. 부의 경우,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어서(직장 눈치가 보여서)’가 43.1%,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가 23.9%,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가 11.0%로 약간 차이를 보였다.

모와 부의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로는 모두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어서(직장 눈치가 보여서)’가 각각 50.0%, 6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모의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가 23.7%, 부의 유아기 근로시

간 단축은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이 16.7%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 모와 부 육아휴직 모두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가 각각 43.4%, 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어서(직장 눈치가 보여서)’가 각각 28.3%, 28.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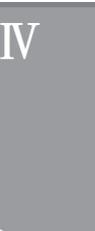
유연근무(재택근로)의 경우에는 모와 부 모두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어서(직장 눈치가 보여서)’가 각각 35.7%, 60.0%로 가장 많았고, 특히 부의 경우 불만족 사유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의 경우에는 모는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어서(직장 눈치가 보여서)’가 38.1%로 가장 많았고, 부는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이 37.5%로 가장 많았다.

〈표 IV-1-3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불만족 이유(전체)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어서(직장 눈치가 보여서)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기타	계(수)
1. 모 출산휴가	38.5	3.3	36.3	4.4	6.6	9.9	1.1	100.0 (91)
2. 부 출산휴가	23.9	1.8	43.1	11.0	8.3	7.3	4.6	100.0 (109)
3. 모 육아기근로 시간단축	23.7	10.5	50.0	2.6	2.6	10.5	-	100.0 (38)
4. 부 육아기근로 시간단축	5.6	-	66.7	16.7	0.0	11.1	-	100.0 (18)
5. 모 육아휴직	43.4	4.7	28.3	10.4	4.7	3.8	4.7	100.0 (106)
6. 부 육아휴직	40.0	2.2	28.9	15.6	2.2	4.4	6.7	100.0 (45)
7.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28.6	14.3	35.7	14.3	7.1	-	-	100.0 (14)
8.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20.0	60.0	20.0	-	-	-	100.0 (5)
9.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28.6	-	38.1	23.8	4.8	4.8	-	100.0 (21)
10.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25.0	-	12.5	37.5	12.5	12.5	-	100.0 (8)
11. 기타	-	-	100.0	-	-	-	-	100.0 (3)



## 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에 대한 부모면담 결과

### (1) 아버들의 자녀돌봄 시간정책 이용 활성화 유도 필요

일단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맞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버들의 제도 이용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저는 육아휴직도 썼고 유연근무제도 써봤거든요. 아주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더 다양한 회사들에서 보편화되고, 의무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 기업 문화 자체가, (아직) 남성들에게 특이나 더 제한되니까... 사실 아이 등하원 시간에 육아기 근로 단축만 조금만 해도 아이 등원시켜주고 하원시켜주는 거 엄마 아빠가 교대로 하면 아이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모님을 쓰고 사교육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A)

제 주변분들은 그래도 여자분들은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분들은 그래도 쓰시긴 하는데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더라고요. (부모 B)

일단 지금 다행인 거는 이제 육아휴직 제도를 이제 쓸 수 있어서 일단 그거랑 그리고 휴직 전에도 임신 단축 의무 이런 것도 조금 배려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통해서 일단 아직 이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이제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게 좀 유용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또 이제 일단 수당이나 부모급여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일단 저는 그래도 좀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서 그 점은 저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부모C)

일단은 지금 육아휴직에서 좀 아쉬운 점은 아빠도 이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 휴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는 육아휴직을 썼는데) 이제 아빠 휴직은 못 했어요. (부모C)

저희는 본부장님 승인만 받으면 원하는 기간만큼 다 됐었고...회사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저는 육아휴직도 그렇고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임신부 단축근로 그런 것도 풀로 다 썼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없었습니다. (부모 D)

### (2) 복직 후 돌봄비용 부담의 급격한 증가

육아휴직에서 복직 시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하원도우미 등에게 지출되는 상당한 비용지출 부담으로 오히려 복직을 꺼리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것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다. 영유아 가구에서 돌봄과 양육비용을 무작

정 늘릴 수만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추가적인 비용지원이나 도우미 등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취업 부모를 위해 기업에게 유연근로제의 적극적 도입과 근로자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거의 돌 그러니까 보통 돌쯤 돼서 다시 복직을 하잖아요. 조부모님이 와서 봐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조부모님이 주변에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도 다시 복직하면서 아이를 아침에 등원시켜주시는 등하원 도우미분들을 알아봤는데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거의 한 19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중략) 그 친구도 이제 선뜻 복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거의 자기 월급에 거의 대부분이 나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조부모님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한다고 하더라고요.(부모 B)

### (3) 육아휴직 등 제도 이용 문화 조성 부족

여전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적 구비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변의 눈치나 조직문화 상 시간정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어머님은 그러면 출산 이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나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 유연 근무라든가 임신기에 단축근로 이런 것들 제도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걸 이용 하셨나요?) 그냥 일했어요. (그럼 제도 자체가 다니던 곳은 없었던 건가요?). 쓰는 문화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일했습니다. (부모B)

### (4)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제도적 보완 필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sup>3)</sup> 발의된 개정안에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3) 의안정보시스템. [21242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4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3B0B9J0K6I0J9H3F3G000P2N3N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3B0B9J0K6I0J9H3F3G000P2N3N3) (2023. 9. 10. 인출)

지금 저는 솔직히 육아휴직이 연장되는 걸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6개월인가 더 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아빠 휴직도 같이 해야지 엄마도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붙어 있더라고요. 전 그 부분이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부모가 둘 다 지금 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엄마가 더 아이를 돌보겠다 해서 휴직을 연장하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달려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고 누구 위한 제도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모 C)

#### (5) 육아휴직 사용 시기 고려

요즘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영유아 시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돌봄부재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은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중 한쪽만 가능하던 것이 2019년 10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오랜기간 1년 이내로 되어 있고, 아빠 휴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에서의 제도 이용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모들은 육아휴직 기간의 증가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육아휴직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언제 쓸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들이 아껴두는 이유가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네 입학할 때 또 손이 많이 가고 애들 다 12시에 하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이들 사용한다고 아껴두라고 해서 그걸 또 제가 이용을 못하고 아껴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부모 D)

#### (6) 다양한 형태의 육아기 근로지원 제도 강화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무시간제, 탄력근무제 등 이외에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재택근무 등 다양한 육아지원 근로형태를 권장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애들이 좀 크면 사실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재택근무하는 데 방해가 되고 또 부모가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인 케어할 케어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만약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으면 재택근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푸시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중략)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다루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항상 정부 정책에 따라서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를 권고하면, 강제한 적이 있었는데는 모르겠는데, 권고한다 이러면 재택근무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험 수준에서 경고 수준을 좀 내려간다 하면 바로 출근 근무로 전환을 했던 터라...(중략) 재택근무를

전환하는 근거 자료는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하죠. 재택근무에 있어서 정부에서 좀 더 푸시가 되면 (좋을 거 같아요). (부모 D)

#### (7)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 홍보

2019년 8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가족돌봄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의하면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있다 하더라도 무급휴가로서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제일 부족한 거 하나가 이제 보육 휴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휴가가 1년에 한 25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25일 중에 여행을 가거나 저를 위해서 써본 휴가는 아무 것도 없고 다 애기들 아플 때... 이제 등원을 못하면 누군가는 급하게 봐야 되니까...이제 지금 10월인데 휴가가 한 3~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이제 등원이 불가하다는 진료의견서나 소견서가 있어 어린이집 등원을 못 하는 날에는 보육휴가를 넉넉히 줘서 그런 걸 좀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 D)

#### (8) 맞벌이와 외벌이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지원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가구는 그만큼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좋고 경제적으로도 좀더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외벌이 또는 경제적으로 좀더 열악한 가구인 경우와 형평성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격차를 줄여 형평성 우려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육아휴직을 쓰면 일시적으로 일터에서 내 시간의 유연성을 갖지만, 상한선이 있으니까 그만큼 현금적인 것도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부모급여가 지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시 복직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나중에 채워지는데... (중략) 근데 육아휴직을 한 사람과 직장이 없이 그냥 아이를 집에서 보는 사람에게 똑같은 70만원이 지급 이외에 조금 상한성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지급하지만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요. (부모 E)

(9) 초등돌봄 확대 요구

초등돌봄이 1,2학년 중심으로 이루어져, 취업모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 돌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고, 해당 자녀가 아닌 더 어린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저희 학교는 2학년까지만 돌봄교실이 있더라고요. 3학년부터는 돌봄을 이용을 못한다고 들어가시고 지금 세 자녀인 엄마 돌봄에 그래도 보내고 워킹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 이제 3학년이 또 고민이라 둘째 육아휴직을 3학년 때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 (부모 A)

라. 기타 육아관련 부모 인식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이라는 국정과제와 맞물려 부모대상으로 사교육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영유아시기에도 사교육 참여와 비용이 상당하며, 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초·중등 학생에 비해 높다는 발표들도 있다. 2023년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유치원) 월평균 학원비는 지난해 11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 증가하였고, 연간 약 1,427만원으로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675만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sup>4)</sup> 2016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000원, 연간 총액은 1조 3,809억으로, 2015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7,200원, 연간 총액 1조 2,051억에 비해 한층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이진화·박진아·박기원, 2015: 6;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 2016: 7).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교육부에서 유아 사교육비 조사 대상, 방법의 연구를 통해 2024년 통계청에서 유아 사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께 통계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매일경제, 2023. 9. 3).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1순위),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2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3. 10. 12.). 서울 유아대상영어학원 329개, 전년대비 무려 18곳 늘어나고, 고액비용문제 심각해...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5OjIjZl3b3JkX3R5cGUiO3M6MzoiYWxsJlt9&bmode=view&idx=16573059&t=board> (2023. 10. 18. 인출).

‘다른 아이들이 하니깐 뒤쳐질까봐’가 25.7%,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하원/하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23.1%,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가 9.7%,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하는 특별활동·특성화·방과후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가 7.2%, ‘자녀가 원해서’가 4.5%,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33〉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

단위: %(명), 점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이 하니깐 뒤쳐질까 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하는 특별활동·특성화·방과후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하원/하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수)
전체	4.5	9.7	26.5	25.7	2.8	7.2	23.1	0.7	100.0 (200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9	7.9	29.1	25.2	3.1	8.4	21.8	0.5	100.0 (38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6	9.6	26.8	24.5	2.4	6.6	23.8	0.8	100.0 (665)
중소도시	3.3	10.4	25.7	27.7	3.2	7.0	22.0	0.8	100.0 (759)
읍면지역	6.2	10.3	23.1	22.6	2.1	7.7	27.7	0.5	100.0 (195)
$\chi^2(df)$			17.203(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	10.2	23.7	24.3	2.6	6.7	28.6	0.6	100.0 (1004)
외벌이	5.7	9.4	28.8	27.6	3.0	7.5	17.2	0.8	100.0 (948)
$\chi^2(df)$			41.540(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0	7.9	28.6	26.0	2.9	7.9	20.2	1.6	100.0 (381)
351~500만원	5.7	8.3	28.6	24.5	2.6	7.7	22.0	0.6	100.0 (542)
501~600만원	3.0	10.8	26.2	26.0	2.8	6.6	24.3	0.3	100.0 (362)
601~750만원	4.3	10.7	22.9	26.6	2.8	7.0	25.4	0.3	100.0 (327)
751만원 이상	3.6	11.3	24.5	25.8	3.1	6.4	24.5	0.8	100.0 (388)
$\chi^2(df)$			23.024(28)						

\*\*\*  $p < .001$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취약계층 가구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7점 중 5.4점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4〉 취약계층 가구 및 아동 지원 확대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	2.2	4.4	17.7	16.4	20.8	35.3	100.0 (1959)	5.46	1.57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4	2.1	4.6	13.9	18.8	24.1	34.0	100.0 (373)	5.53	1.49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4.2	2.2	3.7	20.5	14.8	19.6	35.0	100.0 (648)	5.39	1.63
중소도시	2.8	2.7	5.2	16.0	16.8	21.1	35.4	100.0 (749)	5.46	1.57
읍면지역	1.6	1.1	3.7	22.2	15.9	17.5	38.1	100.0 (189)	5.54	1.46
$\chi^2(df) / F$				24.167(18)						.9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1	2.0	4.5	20.3	19.5	19.9	30.7	100.0 (985)	5.33	1.54
외벌이	3.1	2.6	4.2	15.4	13.8	22.1	38.8	100.0 (928)	5.56	1.59
$\chi^2(df) / t$				26.613(6)***						-3.11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0	1.9	4.0	16.8	10.4	19.0	43.9	100.0 (374)	5.60	1.65
351~500만원	1.7	1.5	3.8	16.9	16.5	20.1	39.5	100.0 (527)	5.63	1.45
501~600만원	3.4	2.2	5.1	17.1	19.1	20.8	32.3	100.0 (356)	5.38	1.57
601~750만원	4.0	3.1	5.0	19.8	18.0	19.2	31.0	100.0 (323)	5.26	1.64
751만원 이상	2.9	2.9	4.7	18.5	18.5	25.1	27.4	100.0 (379)	5.32	1.53
$\chi^2(df) / F$				46.400(24)**						4.723***

\*\*  $p < .01$ , \*\*\*  $p < .001$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취약계층이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7점 중 4.72점으로 부담의향이 있다(⑤~⑦)는 비율이 56.6%로 나타났고, 가구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35〉 취약계층 가구 및 아동 지원을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9.0	4.6	7.7	22.2	18.9	16.7	21.0	100.0 (1952)	4.72	1.8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9.2	3.5	9.2	19.2	18.7	17.3	22.8	100.0 (369)	4.78	1.84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10.0	4.6	6.3	23.8	18.9	17.6	18.7	100.0 (647)	4.64	1.82
중소도시	8.4	5.1	7.9	22.1	19.3	16.1	21.2	100.0 (747)	4.71	1.81
읍면지역	6.9	4.2	8.5	22.8	18.0	14.8	24.9	100.0 (189)	4.85	1.78
$\chi^2(df) / F$				13.160(18)						.801
맞벌이 여부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8.2	4.8	8.7	22.3	19.1	15.4	21.5	100.0 (983)	4.71	1.80
외벌이	9.9	4.4	6.5	22.1	19.1	17.9	20.1	100.0 (922)	4.70	1.83
$\chi^2(df) / t$	6.929(6)									.13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2	4.3	6.4	22.0	19.6	14.2	23.3	100.0 (373)	4.72	1.87
351~500만원	7.3	3.6	6.7	26.0	20.5	15.1	20.8	100.0 (523)	4.77	1.72
501~600만원	8.2	4.5	8.8	22.1	18.1	19.8	18.4	100.0 (353)	4.71	1.78
601~750만원	10.5	6.2	7.1	23.2	15.8	17.6	19.5	100.0 (323)	4.59	1.89
751만원 이상	9.5	4.7	9.7	16.3	19.5	17.6	22.6	100.0 (380)	4.75	1.88
$\chi^2(df) / F$	30.307(24)									.591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부모 대상 자녀양육 관련 현 수준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본인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항목에 대해 7점 중 5.55점,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7점 중 5.37점,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자녀가 아프거나, 혼자 있어야만 할 때 등)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7점 중 5.52점, ‘어린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정책이 적다고 생각한다’는 7점 중 5.92점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외벌이가 맞벌이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비율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돌봄시간과 관련하여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가가 이외 지역 거주지역 부모보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긴급돌봄과 관련하여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자녀가 아프거나 혼자 있어야 하는 등의 긴급돌봄 사유 발생시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였고, 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수준은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참조).

〈표 IV-1-36〉 자녀 양육 실태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1. 본인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5.55	1.37	(1992)
2.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5.37	1.64	(1983)
3.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돌봐 줄 사람이 없다	5.52	1.70	(1969)
4. 현재 어린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적다고 생각한다	5.92	1.38	(1930)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43.4%가 다른 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42.6%는 다른 가구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다른 가구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부모는 2.6%에 불과하였고,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표 IV-1-37〉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및 지원 수준 비교

단위: %(명)

구분	다른 가구보다 많이 받고 있다	다른 가구보다 적게 받고 있다	다른 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받고 있다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2.6	42.6	43.4	11.5	100.0 (200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7	47.5	40.7	8.1	100.0 (38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3.0	42.4	42.7	11.9	100.0 (665)
중소도시	1.4	40.2	45.8	12.5	100.0 (759)
읍면지역	3.6	42.6	41.0	12.8	100.0 (195)
$\chi^2(df)$		16.753(9)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	42.3	45.3	10.1	100.0 (1004)
외벌이	2.6	42.3	42.2	12.9	100.0 (948)
$\chi^2(df)$		4.694(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7	40.7	40.2	14.4	100.0 (381)
351~500만원	2.6	40.0	43.2	14.2	100.0 (542)
501~600만원	2.5	42.5	45.3	9.7	100.0 (362)
601~750만원	2.4	41.3	48.0	8.3	100.0 (327)
751만원 이상	0.8	49.0	41.0	9.3	100.0 (388)
$\chi^2(df)$		32.020(12)**			

\*\*  $p < .01$ ,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용은 81.7만원, 월평균 예금/적금/보험 등 지출비용은 36.6만원으로 약 118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적금/보험 등을 제외한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63%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 보면, 지역규모가 큰 서울특별시의 양육비용은 97.8만원으로 읍

면지역 75.0만원에 비해 27.8만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적금/보험 등 투자성 지출 비용 또한 양육비용과 동일한 가구특성을 보였다.

〈표 IV-1-38〉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양육비용	예금/적금/보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평균	(수)
전체	81.71	36.60	15.63	(142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97.84	43.06	15.75	(297)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78.69	34.44	15.72	(486)
중소도시	76.82	34.50	15.29	(531)
읍면지역	75.03	38.82	16.59	(108)
<i>F</i>	8.431***	3.364*	.373	
맞벌이 여부				
맞벌이	89.42	38.98	13.62	(727)
외벌이	74.08	34.15	17.67	(663)
<i>t</i>	4.560***	2.148*	-6.15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60.46	25.79	21.40	(280)
351~500만원	75.63	31.91	17.46	(379)
501~600만원	78.14	31.02	13.73	(252)
601~750만원	87.94	44.89	13.02	(231)
751만원 이상	109.28	51.92	11.26	(280)
<i>F</i>	24.436***	19.665***	33.368***	

\*  $p < .05$ , \*\*\*  $p < .00$   
 주: 영유아 자녀만 있는 경우임.

초등저학년 자녀만 있는 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용은 87.3만원, 월평균 예금/적금/보험 등 지출비용은 33.7원으로 약 121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적금/보험 등을 제외한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21%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 보면, 지역규모가 큰 서울특별시의 양육비용은 144.2만원으로 읍면지역 71.3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적금/보험 등 투자성 지출 비용 또한 양육비용과 동일한 가구특성을 보였다.



〈표 IV-1-39〉 초등학교 1-3학년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양육비용	예금/적금/보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평균	(수)
전체	87.33	33.68	17.21	(18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44.17	150.67	18.38	(6)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98.50	30.98	16.78	(48)
중소도시	87.89	30.15	17.86	(71)
읍면지역	71.25	28.02	16.66	(57)
<i>F</i>	3.777*	15.616***	.1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91.85	37.94	13.67	(97)
외벌이	80.86	28.54	19.40	(76)
<i>t</i>	1.181	1.273	-3.21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67.62	20.51	26.86	(39)
351~500만원	77.79	23.88	17.13	(43)
501~600만원	83.50	31.80	14.38	(30)
601~750만원	89.48	37.21	13.16	(33)
751만원 이상	120.38	57.30	13.06	(37)
<i>F</i>	4.353**	3.764**	7.233***	

\*\*  $p < .01$ , \*\*\*  $p < .00$

주: 초등(1-3학년) 자녀만 있는 경우임.

영유아와 초등저학년 자녀가 모두 있는 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용은 135.9만원, 월평균 예금/적금/보험 등 지출비용은 59.5만원으로 약 195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적금/보험 등을 제외한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0%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 보면, 지역규모가 큰 서울특별시의 양육비용은 169.1만원으로 읍면지역 94.8만원에 비해 74.3만원 정도 더 많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적금/보험 등 투자성 지출 비용은 지역규모나 맞벌이 여부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투자비용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지출비율은 외벌이 가구와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표 IV-1-40〉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양육비용	예금/적금/보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평균	(수)
전체	135.88	59.53	24.98	(39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69.06	74.55	24.59	(78)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124.87	57.59	24.77	(131)
중소도시	136.41	54.93	26.25	(157)
읍면지역	94.83	52.97	20.29	(30)
<i>F</i>	4.815**	1.660	1.0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4.53	63.50	21.20	(180)
외벌이	126.85	53.91	27.75	(209)
<i>t</i>	1.689	1.438	-3.88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2.11	41.13	31.43	(62)
351~500만원	119.88	53.82	27.03	(120)
501~600만원	133.38	52.70	23.67	(80)
601~750만원	156.06	81.98	22.74	(63)
751만원 이상	186.03	73.00	19.35	(71)
<i>F</i>	8.803***	4.124**	4.929***	

\*\*  $p < .01$ , \*\*\*  $p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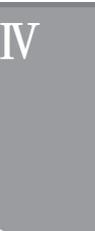
주: 영유아+초등(1-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

## 2.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우선순위

여기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부모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다른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국정과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2-1〉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국정과제	주요내용	주된 범주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 신설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부모급여 도입	• 서비스 지원
		•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검토	
		• 보육교사 처우개선	
		• 부모교육 확대	
•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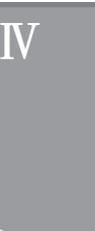
국정과제	주요내용	주된 범주	
	총총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li> <li>•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li> <li>•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li> <li>•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li> </ul>	• 서비스 지원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li> <li>•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li> <li>•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li> <li>•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li> <li>•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li> </ul>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보호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li> </ul>	• 서비스 지원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li> <li>•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li> <li>•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li> </ul>	• 서비스 지원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한부모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li> </ul>	•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문화 수용성 제고</li> </ul>	
	다양한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li> </ul>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고용직 등) 확대</li> <li>•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li> <li>• 난임 휴가기간 확대</li> </ul>	• 시간 지원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아동학대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li> </ul>	• 서비스 지원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아동 진료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li> <li>•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li> </ul>	• 서비스 지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식생활 건강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 국가관리 확대</li> </ul>	• 서비스 지원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li> </ul>	• 서비스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li> </ul>	
• 81. 100만 디지털	교원 SW·AI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SW·AI 역량 제고</li> </ul>	• 서비스 지원

국정과제	주요내용		주된 범주
탈인재 양성	제고 디지털 인재양성 인 프라 구축	•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 82. 모두를 인재 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사교육 경감 및 학습 격차 완화	• 사교육 경감 • 학습격차 완화	• 서비스 지원
• 84. 국가교육책임 제 강화로 교육격 차 해소	유보통합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유보통합 추진 •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 교육 사각지대 통합지원 -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 기학생 발굴·지원 등)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 서비스 지원

여기에서는 현정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부업무평가 포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에서 제시한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의 국정과제 추진현황 자료에 기초하여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2023년 상반기를 거쳐 대부분의 국정과제 이행 중에 있었으며, 최근의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검토나,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등은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IV-2-2〉 2022-2023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정과제	주요내용	실적		
		2022	2023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 성	부모급여 신설	• 부모급여 도입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	○
		•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검토	×	×
		• 보육교사 처우개선	×	△
		• 부모교육 확대	○	○
		•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	△
		•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	△
충충한 아동돌봄체	•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	△	○	



국정과제	주요내용		실적	
			2022	2023
	계 마련	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
		•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	○
		•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	○
		•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	×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	○
	아동·청소년보호책임 강화	•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
		•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	△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발달장애인 지원	•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
•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문화 수용성 제고	○	○
	다양한 가족지원	•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	○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고용직 등) 확대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
		• 난임 휴가기간 확대	×	△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아동학대 방지	•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	△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아동 진료체계 개선	•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	△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	△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식생활 건강권 강화	• 급식 국가관리 확대	○	○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교통안전	•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	○
	사회적 약자 보호	•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	○
• 81. 100만 디지털	교원 SW·AI 역량	• 교원 SW·AI 역량 제고	△	△

국정과제	주요내용		실적	
			2022	2023
탈인재 양성	제고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	△
•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 사교육 경감	×	△
		• 학습격차 완화	△	△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유보통합	• 유보통합 추진	△	△
		•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	×
		•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	△
	교육 사각지대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통합지원 -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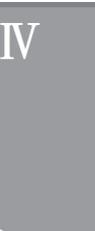
주: 1) 2022년 3분기 ~ 2023년 2분기까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 45, 47, 48, 50, 63, 67, 68, 69, 81, 82, 84)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함  
 2) ○: 법 시행, 제도·서비스 도입, (일부) 추가 지원 등, △: 법 입법·개정, 계획 발표, 시범사업, 간담회 개최, 연구 실시(실태조사 등) 등, ×: 정부업무평가 포털의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내용 없음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 120대 국정과제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62](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62) (2023. 10. 30 인출)

## 가. 국정과제 중요도 및 수행 정도

### 1) 국정과제 중요도

육아관련 국정과제가 현 정부 5년 동안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정책에 있어 국정과제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다. 부모와 전문가 모두 육아관련 국정과제의 중요도는 대체로 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8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은 육아정책 분야에서는 아직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 중요도가 7점 중 6점 이상으로 부모와 전문가 모두 안전한 양육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등 어린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단위: 점(명)

구분	부모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6.1	1.42	(1949)	6.6	0.90	(98)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5.6	1.51	(1941)	6.0	1.26	(98)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5.7	1.49	(1928)	6.0	1.26	(98)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6	1.54	(1919)	5.9	1.32	(98)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1	1.48	(1788)	6.3	1.03	(98)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5.8	1.42	(1893)	5.7	1.27	(98)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5.9	1.48	(1863)	5.7	1.25	(98)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6.0	1.47	(1840)	6.0	1.09	(98)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5.0	1.61	(1903)	4.9	1.35	(98)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4.9	1.66	(1908)	4.9	1.52	(98)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5.5	1.61	(1892)	5.7	1.35	(98)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7점: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이 있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세부내용들을 정책과제 형태로 제시하여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부모의 경우 국정과제 중요도는 ‘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통안전’과 ‘아동 진로체계 개선’ 5.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는 중요도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가 6.2점,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6.1점,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이 6.0점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육아 관련 국정과제 정책과제 중요도

단위: 점(명)

구분	부모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1. <b>(부모 급여 신설)</b>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5.3	1.77	(1952)	5.0	1.70	(98)
2. <b>(보육서비스 질 제고)</b> 어린이집 아동당교사 비율 조정,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보육교사 처우개선,	5.9	1.43	(1935)	6.4	.75	(98)

구분	부모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부모교육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3. <b>(총총한 아동돌봄체계 마련)</b>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미간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5.7	1.49	(1941)	6.0	1.05	(98)
4. <b>(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b> '임산·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5.7	1.45	(1937)	5.9	1.08	(98)
5. <b>(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b>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5.9	1.43	(1900)	6.2	.98	(98)
6. <b>(발달장애인 지원)</b>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5.7	1.46	(1928)	6.0	1.12	(98)
7. <b>(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b>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등	5.6	1.51	(1928)	6.0	1.12	(98)
8. <b>(양성평등 일자리 구현)</b>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대상(특수고용직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5.6	1.57	(1923)	6.1	1.02	(98)
9. <b>(아동 진료체계 개선)</b>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5.8	1.47	(1916)	5.6	1.19	(98)
10. <b>(식생활 건강권 강화)</b>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5.7	1.47	(1917)	5.3	1.27	(98)
11. <b>(교통안전)</b>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5.8	1.44	(1910)	5.6	1.26	(98)
12. <b>(교원 SW·AI 역량 제고)</b>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	5.2	1.54	(1921)	4.7	1.30	(98)
13. <b>(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b>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통합 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	5.2	1.57	(1944)	4.9	1.20	(98)
14. <b>(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b>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5.2	1.62	(1923)	5.0	1.41	(98)



구분	부모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15. <b>(유보통합 단계적 추진)</b>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5.4	1.64	(1937)	5.6	1.53	(98)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7점: 매우 중요하다)

## 2)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수행 정도

육아관련 국정과제가 현 정부 5년 동안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가 얼마나 잘 수행되었다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국정과제의 중요도는 대부분 5점 이상으로 응답한 반면, 수행정도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 대부분 3점대로 높지 않았다.

〈표 IV-2-5〉 지난 1년간 육아 관련 국정과제 수행 정도

단위: 점(명)

구분	부모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3.7	1.85	(1937)	4.3	1.43	(98)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3.5	1.76	(1910)	3.7	1.37	(98)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3.5	1.77	(1912)	3.7	1.42	(98)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3.4	1.79	(1926)	3.5	1.53	(98)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3	1.93	(1944)	3.8	1.36	(98)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3.7	1.81	(1938)	4.1	1.31	(98)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3.6	1.86	(1939)	3.9	1.45	(98)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3.5	1.90	(1942)	3.7	1.46	(98)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6	1.76	(1896)	3.9	1.47	(98)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5	1.76	(1900)	3.4	1.38	(98)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4	1.84	(1915)	3.7	1.61	(98)

주: 7점 척도임(1점: 매우 못하고 있다 ~ 7점: 매우 잘하고 있다)

현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수행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대체로 중요도에 비해 지난 1년간 수행정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6〉 육아 관련 국정과제 정책과제 수행도

단위: 점(명)

구분	부모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1. <b>(부모 급여 신설)</b>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4.5	1.88	(1897)	5.3	1.46	(98)
2. <b>(보육서비스 질 제고)</b> 어린이집 아동당교사 비율 조정, 어린이집 시설면적 향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4.1	1.82	(1917)	4.1	1.50	(98)
3. <b>(충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b>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미간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0	1.82	(1909)	4.1	1.44	(98)
4. <b>(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b> '임산·출산 모바일업'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4.1	1.79	(1907)	4.4	1.33	(98)
5. <b>(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b>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3.9	1.85	(1920)	4.1	1.56	(98)
6. <b>(발달장애인 지원)</b>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3.9	1.81	(1889)	3.9	1.47	(98)
7. <b>(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b>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등	3.9	1.80	(1888)	4.2	1.47	(98)
8. <b>(양성평등 일자리 구현)</b>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고용직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3.8	1.83	(1911)	3.9	1.63	(98)
9. <b>(아동 진료체계 개선)</b>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3.9	1.84	(1896)	3.7	1.38	(98)
10. <b>(식생활 건강권 강화)</b>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4.0	1.83	(1903)	4.2	1.52	(98)



구분	부모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11. <b>(교통안전)</b>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4.0	1.84	(1927)	4.4	1.46	(98)
12. <b>(교원 SW·AI 역량 제고)</b>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	3.9	1.76	(1859)	4.1	1.43	(98)
13. <b>(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b>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통합 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	3.9	1.75	(1872)	4.2	1.45	(98)
14. <b>(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b>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3.8	1.79	(1883)	3.8	1.45	(98)
15. <b>(유보통합 단계적 추진)</b>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3.8	1.85	(1891)	4.4	1.78	(98)

주: 7점 척도임(1점: 매우 못하고 있다 ~ 7점: 매우 잘하고 있다)

## 나. 국정과제 수요자 요구 반영정도

현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가 관련 사회적 이슈와 문제, 수요자의 요구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부모의 경우, 국정과제가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①~③)이 52.0%로 7점 중 3.44점으로 나타났고, 지역규모별로는 서울특별시가 3.72점, 광역/특별자치시가 3.44점, 읍면지역 3.41점, 중소도시 3.30점으로 차이를 보였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국정과제에 사회적 이슈나 수요자 요구 반영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였다.

〈표 IV-2-7〉 국정과제의 육아 관련 사회적 문제, 수요자 요구 등 반영 정도(부모)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7	14.2	15.1	18.0	10.8	13.1	6.0	100.0 (1967)	3.44	1.9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2.9	10.9	11.2	16.0	13.3	16.8	9.0	100.0 (376)	3.72	2.04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2.9	12.6	16.4	19.2	10.4	12.4	6.1	100.0 (652)	3.44	1.89
중소도시	23.3	16.5	15.7	17.8	9.9	12.3	4.6	100.0 (747)	3.30	1.85
읍면지역	19.3	17.2	16.7	19.3	10.9	11.5	5.2	100.0 (192)	3.41	1.81
$\chi^2(df) / F$				31.951(18)*						4.2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9	13.9	15.8	18.5	10.4	13.7	5.9	100.0 (989)	3.46	1.89
외벌이	23.5	14.6	14.2	17.3	11.6	12.6	6.2	100.0 (931)	3.41	1.92
$\chi^2(df) / t$				3.075(6)						.52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4.9	14.2	14.7	18.2	10.5	10.5	7.0	100.0 (373)	3.34	1.92
351~500만원	23.3	16.1	16.9	17.6	9.9	11.1	5.1	100.0 (533)	3.28	1.84
501~600만원	25.8	11.8	16.2	16.2	9.2	14.6	6.2	100.0 (357)	3.40	1.96
601~750만원	19.7	13.1	14.7	21.3	12.5	13.4	5.3	100.0 (320)	3.55	1.84
751만원 이상	19.3	14.6	12.5	17.4	12.5	16.9	6.8	100.0 (384)	3.67	1.94
$\chi^2(df) / F$				28.304(24)						2.910*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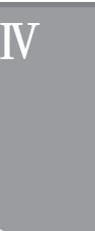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 7점: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의 경우, 국정과제가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①~③)(31.9%)보다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⑤~⑦)이 51.5%로 좀더 많고 7점 중 4.3점으로 나타났다. 실제적 수요자인 부모가 인식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이 약간 더 높았다.

〈표 IV-2-8〉 국정과제의 육아 관련 사회적 문제, 수요자 요구 등 반영 정도(전문가)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9.3	8.2	14.4	16.5	19.6	24.7	7.2	100.0 (97)	4.3	1.75
소속										
대학	6.9	6.9	12.5	16.7	20.8	29.2	6.9	100.0 (72)	4.5	1.67
연구기관	16.0	12.0	20.0	16.0	16.0	12.0	8.0	100.0 (25)	3.7	1.88
$\chi^2(df) / t$				5.404(6)						2.016*
전문분야										
아동(보육)	10.0	5.0	10.0	10.0	20.0	40.0	5.0	100.0 (20)	4.7	1.79
유아교육	12.5	0.0	6.3	31.3	18.8	25.0	6.3	100.0 (16)	4.4	1.71
사회복지	15.8	15.8	10.5	15.8	10.5	21.1	10.5	100.0 (19)	3.9	2.0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여성·가족 정책/행정	14.3	0.0	7.1	21.4	28.6	21.4	7.1	100.0 (14)	4.4	1.79
기타(교육, 경제 등)	0.0	12.5	37.5	6.3	18.8	25.0		100.0 (16)	4.1	1.48
$\chi^2(df) / F$	28.988(30)									0.402
해당분야 경력										
5년 미만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	4.0	-
5~10년 미만	28.6	0.0	28.6	14.3	14.3	0.0	14.3	100.0 (7)	3.4	2.15
10~15년 미만	0.0	16.7	16.7	16.7	20.8	16.7	12.5	100.0 (24)	4.4	1.67
15~20년 미만	13.3	6.7	6.7	13.3	6.7	53.3	0.0	100.0 (15)	4.5	1.92
20년 이상	10.0	6.0	14.0	16.0	24.0	24.0	6.0	100.0 (50)	4.3	1.72
$\chi^2(df) / F$	27.013(24)									0.526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 7점: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 다. 정책지원 우선순위

다음으로 향후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 지원 대상을 ① 부모 지원(가정양육/돌봄 역량, 일·가정양립, 임신·출산 지원 등), ② 서비스 공급자 지원(교육·보육·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유치원·어린이집 등 지원 등), ③ 아동 지원(건강한 성장·발달, 놀이/학습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등) 중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부모의 경우, 지원 대상 중 ‘부모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6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지원’이 21.4%, ‘서비스공급자 지원’이 13.2%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의견으로는 ‘과도한 사교육 문제 해결’, ‘부동산 가격 하락’, ‘우선순위 없는 균형있는 정책 지원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V-2-9〉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지원대상 우선순위(부모)

단위: %(명), 점

구분	부모 지원	서비스 공급자 지원	아동 지원	기타	계(수)
전체	64.8	13.2	21.4	0.7	100.0 (200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1.9	14.7	22.6	0.8	100.0 (38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68.0	11.6	19.5	0.9	100.0 (665)
중소도시	63.9	13.6	21.9	0.7	100.0 (759)
읍면지역	62.6	13.8	23.6	0.0	100.0 (195)

구분	부모 지원	서비스 공급자 지원	아동 지원	기타	계(수)	
$\chi^2(df)$	7.512(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5.2	14.5	19.7	0.5	100.0	(1004)
외벌이	64.7	11.6	22.8	0.9	100.0	(948)
$\chi^2(df)$	6.778(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61.7	9.2	28.1	1.0	100.0	(381)
351~500만원	65.9	13.1	20.3	0.7	100.0	(542)
501~600만원	65.7	15.2	18.5	0.6	100.0	(362)
601~750만원	67.0	15.0	17.4	0.6	100.0	(327)
751만원 이상	63.4	13.7	22.4	0.5	100.0	(388)
$\chi^2(df)$	20.978(12)					

전문가 또한 ‘부모 지원’이 36.7%로 가장 많았으나, ‘아동 지원’이 35.7%로 대  
 등하였고, ‘서비스 공급자 지원’은 22.4%로 나타났다.

〈표 IV-2-10〉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지원대상 우선순위(전문가)

단위: %(명), 점

구분	부모 지원	서비스 공급자 지원	아동 지원	기타	계(수)	
전체	36.7	22.4	35.7	5.1	100.0	(98)
소속						
대학	28.8	28.8	37.0	5.5	100.0	(73)
연구기관	60.0	4.0	32.0	4.0	100.0	(25)
$\chi^2(df)$	10.243* (3)					
전문분야						
아동(보육)	20.0	35.0	30.0	15.0	100.0	(20)
유아교육	17.6	35.3	47.1	0.0	100.0	(17)
사회복지	26.3	15.8	52.6	5.3	100.0	(19)
여성·가족	50.0	28.6	21.4	0.0	100.0	(14)
정책/행정	66.7	8.3	16.7	8.3	100.0	(12)
기타(교육, 경제 등)	56.3	6.3	37.5	0.0	100.0	(16)
$\chi^2(df)$	26.062* (15)					
해당분야 경력						
5년 미만	100.0	0.0	0.0	0.0	100.0	(1)
5~10년 미만	42.9	0.0	57.1	0.0	100.0	(7)
10~15년 미만	50.0	16.7	25.0	8.3	100.0	(24)
15~20년 미만	33.3	33.3	26.7	6.7	100.0	(15)



구분	부모 지원	서비스 공급자 지원	아동 지원	기타	계(수)
20년 이상	29.4	25.5	41.2	3.9	100.0 (51)
$\chi^2(df)$	10.166 (12)				

\*  $p < .05$ , \*\*  $p < .01$ , \*\*\*  $p < .00$

전문가들이 지원대상 우선순위로 각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선택한 사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부모지원을 선택한 경우는 실질적 자녀양육의 책임이 큰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비스 공급자 지원의 경우는 교육, 보육, 돌봄의 기관 이용의 증가와 함께, 국가 등 공적 책임 커져간다는 점에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아동 지원을 선택한 경우는 방향성 차원에서 핵심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두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했고, 아동이 최우선이 되게 하는 세부적인 수단이 부모와 서비스 지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표 IV-2-11〉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택 사유(전문가)

우선 순위	선택 이유
부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의 주체인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li> <li>• 육아와 교육에서 부모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임. 부모를 바꿀 수 있는 정책 방향 필요</li> <li>• 부모가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만족도가 높아짐</li> <li>• 가정의 역량에 따라 아이의 성장이 결정됨</li> <li>• 부모의 돌봄 및 양육환경이 아동의 웰빙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 양육자(부모)의 돌봄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봄</li> <li>• 부모가 행복해지면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보이고, 부모가 여유롭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더라도,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고충이 계속 따를 것임</li> <li>•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은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국가가 건강하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교육도 가정을 지원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제도임</li> <li>• 부모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족의 출생을 높이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li> </ul>
서비스 공급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부모나 아동 관점에서 육아정책이 수립되어 왔음.</li> <li>• 특정기간에 관련성, 당사자성이 높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휘둘리기 보다는 전문성과 현장관련성이 높은 이해관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전달체계를 개보수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임.</li> <li>• 교사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li> </ul>

우선 순위	선택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기는 가정양육 지원이 우선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환경이 좋아져야 일가정 양립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li> <li>• 자녀 교육, 보육, 돌봄에 있어 공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 이므로</li> <li>• 서비스 제공 주체의 질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li> <li>• 육아와 관련해 국가 책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생애 초기 교육에 대한 투자 즉 서비스 공급자 지원이 부모지원보다 우선되어야 함.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자 지원의 상세 내용인 교육·보육·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유치원·어린이집 등 지원보다 서비스 공급자의 질적 향상이 우선이며 이를 기반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봄.</li> <li>•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li> </ul>
아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동을 위한 것으로, 아동이 최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가 필요함.</li> <li>• 아동 중심성을 기준으로 놓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균등한 발달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것이 육아정책의 핵심 목표여야 함. 부모지원과 종사자지원은 그 핵심목표를 위한 필요한 수단임.</li> <li>• 부모와 서비스 공급자가 우선될 경우에 돌봄의 가치와 아동 성장권과 행복권에 대한 가치 실현이 간과될 수 있음.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아동에 두어야 협력적 실행을 도모할 수 있음</li> <li>• 아동 지원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부모지원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li> <li>•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제공되어야 함</li> <li>• 서비스공급자 지원 정책, 부모지원 정책 역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함.</li> </ul>

향후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육아정책 방향성을 ① 부모 현금지원 정책 강화, ②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 ③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 ④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국공립 확충, 공적 인프라, 비용지원체계 개선 등), ⑤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 중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부모의 경우, 정책방향 중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국공립 확충, 공적 인프라, 비용지원체계 개선 등)’이 26.6%,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가 19.7%,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가 12.9%,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가 4.2%로 나타났다.



〈표 IV-2-12〉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정책방향 우선순위(부모)

단위: %(명), 점

구분	부모 현금지원 정책 강화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	교육·보육· 돌봄 서비스 질 제고	교육·보육· 돌봄 공공성 확대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	기타	계(수)
전체	35.4	19.7	12.9	26.6	4.2	1.3	100.0 (200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3.6	20.2	15.0	27.8	3.1	0.3	100.0 (38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39.2	20.2	10.7	24.7	3.5	1.8	100.0 (665)
중소도시	31.6	20.7	14.1	27.4	4.6	1.6	100.0 (759)
읍면지역	40.0	13.3	11.8	27.2	7.2	0.5	100.0 (195)
$\chi^2(df)$			30.214(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9	23.6	14.5	24.5	3.3	1.2	100.0 (1004)
외벌이	38.1	15.7	11.6	28.4	4.9	1.4	100.0 (948)
$\chi^2(df)$			28.138(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8.6	17.1	11.8	26.2	5.0	1.3	100.0 (381)
351~500만원	42.6	12.9	11.1	26.9	5.0	1.5	100.0 (542)
501~600만원	33.1	19.9	13.8	28.2	3.6	1.4	100.0 (362)
601~750만원	31.2	22.6	14.1	26.0	4.3	1.8	100.0 (327)
751만원 이상	27.6	29.1	14.7	25.3	2.8	0.5	100.0 (388)
$\chi^2(df)$			60.978(20)***				

\*  $p < .05$ , \*\*\*  $p < .001$ .

전문가의 경우에는, 부모와 달리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가 34.7%로 정책방향 우선순위로 가장 많았고,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국공립 확충, 공적 인프라, 비용지원체계 개선 등)’이 32.7%,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가 25.5%,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5.1%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가 1.0%로 나타났다. 부모는 실질적 현금지원 정책 강화를 중요시하고, 전문가를 서비스의 질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관점이었고, 전문가는 특히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 강화’를 최우선순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부모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표 IV-2-13〉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정책방향 우선순위(전문가)

단위: %(명), 점

구분	부모 현금지원 정책 강화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	기타	계(수)
전체	5.1	25.5	34.7	32.7	1.0	1.0	100.0 (98)
소속							
대학	5.5	19.2	37.0	37.0	0.0	1.4	100.0 (73)
연구기관	4.0	44.0	28.0	20.0	4.0	0.0	100.0 (25)
$\chi^2(df)$			9.919 (5)				
전문분야							
아동(보육)	0.0	15.0	45.0	35.0	0.0	5.0	100.0 (20)
유아교육	0.0	5.9	41.2	52.9	0.0	0.0	100.0 (17)
사회복지	5.3	26.3	21.1	47.4	0.0	0.0	100.0 (19)
여성·가족	7.1	42.9	35.7	14.3	0.0	0.0	100.0 (14)
정책/행정	8.3	41.7	25.0	16.7	8.3	0.0	100.0 (12)
기타(교육, 경제 등)	12.5	31.3	37.5	18.8	0.0	0.0	100.0 (16)
$\chi^2(df)$			30.528 (25)				
해당분야 경력							
5년 미만	0.0	100.0	0.0	0.0	0.0	0.0	100.0 (1)
5~10년 미만	14.3	14.3	14.3	57.1	0.0	0.0	100.0 (7)
10~15년 미만	4.2	33.3	33.3	25.0	4.2	0.0	100.0 (24)
15~20년 미만	0.0	26.7	26.7	46.7	0.0	0.0	100.0 (15)
20년 이상	5.9	21.6	41.2	29.4	0.0	2.0	100.0 (51)
$\chi^2(df)$			14.701 (20)				

\*  $p < .05$

전문가들이 정책방향 우선순위를 선택한 사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우선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의 선택사유로는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안전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위해서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투자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국공립 확충, 공적 인프라, 비용지원체계 개선 등)’ 선택사유로는 여전히 민간서비스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사교육비 부담, 교육, 보육, 돌봄의 접근성 강화를 꼽았다.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 선택사유로는 무엇보다 부모의 육아시간이 확보되어야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 육아휴직의 실질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 장시간 근로의 개선과 근무형태 유연화 등을 제시하였다.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 강화’의 선택사유로는 단기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현금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점, 다양한 세제혜택, 주택구입 지원, 자녀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



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로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 선택 사유로는 소아청소년과 및 관련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한계와 의료인력 부족 심화를 제시하였다.

〈표 IV-2-14〉 향후 육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정책방향 우선순위 선택 사유(전문가)

우선 순위	선택 이유
<b>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를 안전하고 믿을 만한 기관에 맡기는 것이 필요함</li> <li>•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모두 개인설립의 영리시설이 많아, 질적 수준이 확보된 교육과 보육이 수행되기 어려운 점이 많음.</li> <li>• 질 좋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인적투자(인사) 및 처우, 그리고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의 만족도 제고</li> <li>•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질 제고가 달성되면 교육, 보육, 돌봄 공공성 확대에서 추구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짐. 국공립 수준의 비용지원, 국공립 수준의 교사, 국공립 수준의 교육 환경 및 부모 시간 지원도 보장되는 교육, 보육, 돌봄 서비스 질이라면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 및 교육, 보육, 돌봄 공공성 확대 정책에 투자해야 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여짐.</li> <li>• 부모 직접양육 지원(현금, 시간)과 돌봄서비스 품질과 안정적 공급(서비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서비스 공급과 질에 강조점을 두어야 함</li> </ul>
<b>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육과 공교육 정책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li> <li>• 현재 사교육비를 비롯해서 영유아기 부터 양육자가 자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질이 보장되지 않아서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li> <li>• 부모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돌봄, 교육이 가능해야 함.</li> <li>• 양질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제고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li> <li>• 현재 공공보다는 민간서비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의 노력이 더 필요함</li> <li>• 예산 집행도 투명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사회적 분위기 확산되어야 출산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li> </ul>
<b>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인원을 늘려야 함.</li> <li>• 부모의 육아시간이 있어야 육아와 돌봄이 가능하고 올바른 관계형성이 가능할 것임</li> <li>• 육아휴직, 유연근로 등을 통해 직접 자녀돌봄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수적임.</li> <li>• 현금 지원에는 형평성, 세금 등 문제가 있고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함.</li> <li>• 육아는 일차적으로 부모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함. 현 세대를 보면 국가, 사회가 육아를 책임져줄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국가와 사회가 부모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만, 부모는 하지 않고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접근은 저출생 등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li> <li>• 시간확보가 되기위해선 장시간근로 개선 및 근무형태 유연화 중요함</li> </ul>
<b>부모 현금지원 정책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한 양육비용 부담 경감</li> <li>• 저출산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금지원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함</li> <li>• 부모에게 현금을 바로 주는 것보다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세금면제(근로자라면 다양한 세금 공제 및 면제, 사업자라면 부가세 및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공공요금(차비,</li> </ul>

우선 순위	선택 이유
	가스비, 수도비, 전기세 등등) 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줄여주기, 자녀 의료비 전액 면제 등 다양한 금전적인 혜택들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이 있음을 일상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직접 느끼게 해주어야 함. •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직접, 간접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는 합리적 부모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임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	• 소아청소년과 및 관련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한계와 의료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

### 3. 유아교육·보육 정책관련 국정과제 주요성과

먼저 부모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육아정책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들은 7점 중 3.38점으로 아직은 성과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아직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남짓 된 상황에서 가시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에 거주하거나, 외벌이,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성과에 대한 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육아정책의 전반적인 성과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5	11.2	12.1	23.7	11.4	10.8	5.3	100.0 (1909)	3.38	1.87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3.9	10.4	11.8	17.9	12.1	15.9	8.0	100.0 (364)	3.63	2.0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5.8	11.5	11.3	25.6	11.5	9.3	5.0	100.0 (636)	3.33	1.84
중소도시	26.9	11.1	13.0	23.6	11.2	9.6	4.6	100.0 (732)	3.28	1.84
읍면지역	21.5	12.4	11.9	28.8	10.7	11.3	3.4	100.0 (177)	3.42	1.76
$\chi^2(df) / F$				29.914(18)*						3.05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4	11.7	11.5	23.9	12.0	11.5	5.2	100.0 (960)	3.43	1.87
외벌이	26.7	10.7	12.6	23.2	11.2	10.2	5.4	100.0 (905)	3.33	1.88
$\chi^2(df) / t$				3.007(6)						1.05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7.0	10.3	13.1	23.4	11.7	8.9	5.6	100.0 (359)	3.31	1.87
351~500만원	27.7	12.4	13.8	23.9	9.0	9.0	4.2	100.0 (523)	3.18	1.81
501~600만원	26.3	10.5	9.6	23.7	10.8	14.0	5.0	100.0 (342)	3.44	1.92
601~750만원	23.4	10.6	10.6	26.3	12.8	11.5	4.8	100.0 (312)	3.48	1.84
751만원 이상	21.7	11.5	12.3	21.4	13.9	11.8	7.2	100.0 (373)	3.59	1.91
$\chi^2(df) / F$				26.928(24)						3.124*

\*  $p < .05$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성과가 없다 ~ 7점: 매우 많은 성과가 있다).

다음은 육아관련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세부내용(정책과제)별로 계획-실행-수행 체계-산출 및 성과(정책효과, 수요자 만족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잘한 점과 미흡한 점, 향후 과제를 조사하였다.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부모면담 결과를 포함하였다.

## 가.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한 0~1세 영아에게 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현재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2024년부터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때 0~1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부모급여 신설을 통해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영아를 둔 부모들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 부모들의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 기존보다 0~1세 영아에 대한 현금지원 수준을 상향했다는 점 등을 주요 성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현금지원 방식의 확대가 적절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금지급으로 남·오용에 대한 우려, 부모급여와 자녀양육비 지출과의 연계성 부족, 사교육 조장 우려, 부모급여 수혜 대상자 범위 협소, 가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지원의 한계, 기존 육아지원정책과의 충돌, 홍보 부족 등을 미흡한 점으로 보았다.

향후 개선할 점으로는 전문가들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차등 추가 지원안 마련, 부모급여 지급연령 확대, 경제적 지원 이외 사회적 환경 구축 필요, 부모급여 지급과 부모교육의 연계, 부모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등을 제안하였다.

부모면담에서는 12개월까지는 현금지원이 많다고 느끼는데, 12개월 이후는 갑자기 지원이 끊기는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 영아보다 유아 등 커갈수록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 영아 때 조금 덜 받더라도 부모급여 연령을 연장해서 길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큰 금액의 현금성 지원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 부모급여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안하였다.

저희 때는 (첫째)아기는 70만원이고 그전에는 50만원,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 주니까 이게 점점 나긴 하는데 그게 거의 12개월까지만 많이 주고 그다음부터는 확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막상 진짜 제가 이제 둘째까지 키우고 일을 다시 나갔을 때는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 때가 정말 더 필요할 시기이긴 한데 근데 당장 아기를 낳아서 정말 딱 반짝 그 시기에만 돈을 많이 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끊기는 것 같아서 그거 자체는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당장 올해랑 내년도 (0세 부모급여) 3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둘째)가 만약에 내년 1월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부모C)

주변에 제 주변만 그러지 몰라도 주변에 보면 다들 그 원비가 안 들어가던 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제일 큰 부담으로 느껴져서 엄마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아이를 돌보아야 되니까... 이제 또 취업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부모 급여가 차라리 지금 0세 때 100만 원 받는 거를 조금 낮추더라도 기간을 좀 더 길게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부모D)

더더욱 여성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지는 타의적으로 경력이 단절될 여지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집에서 애 보면 월 100만 원씩 주는데 월급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럴 바에 집에서 나가 애를 보는 게 맞다...(중략)...남는 돈이 70~80만 원이면 그냥 차라리 내가 집에서 애를 보지라고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고 싶는데 결혼을 하다 보면 다 이제 이게 다 며느리 입장에서 타의적으로 친정 부모님이 됐건, 시댁 부모님이 됐건 아니면 남편이 됐건 간에, 꼭 가족들 아니어도 주변 시선에 따라서 약간 그 돈 받고 할 바에야 계속 그런 압력이 들어와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는데 더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A)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육아휴직을 쓰면 일시적으로 일터에서 내 시간의 유연성을 갖지만 그만큼 현금적인 것도 줄어들잖아요. 상한선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는 부모 급여는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시 복직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나중에 채워지는데 이 부모 급여가 한 70만 원 선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육아휴직을 한 사람과 직장이 없이 그냥 아이를 집에서 보는 사람에게 똑같은 이 70만 원이 부여가 되면 이게 그런 그러니까 일정 이상은 조금 상한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모두에게 지급하지만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요.(부모 B)

〈표 IV-3-2〉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부모급여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양육지원 체계 관심과 적극적 개입</li> <li>•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 유도 정책 방향 설정</li> <li>• 아동대상 현금급여 대폭 확대</li> <li>•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 방식 부모지원의 효과성 의문 및 남·오용 위험성</li> <li>• 부모 급여만 주고 아동 양육의 적절성 관련 평가 지표가 없는 점</li> </ul>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급여 신설 자체와 부모급여 수준 상향 조정</li> <li>•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과 양육 수당 지원을 합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li> <li>•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차등 지원이 아닌 대상 전체 지원</li> <li>• 부모가 직접 영아기 자녀를 양육할수 있도록 소득보전을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저소득, 미혼모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임</li> <li>• 저출생 대응에 일정 기여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지원방식에 대해 현 우리나라처럼 사교육화 되어 있고, 돌봄에 대해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방식은 적절하지 않음</li> <li>• 0세 아동에 대한 지원의 집중 등 대상자 범위 협소</li> <li>• 지급시기가 짧고 이후 급여수준(아동관련 급여) 수준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li> <li>•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제도와와의 정합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 수당지급정책 방식을 선택한 점</li> <li>•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률이 높은 현실을 생각하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일 수 있음.</li> <li>•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지는 않는다는 점</li> <li>• 경제적 부담 경감의 직접적 지원 이외에 빚 탕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미흡</li> <li>•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의 주 대상자는 중저소득층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음. 돌봄의 성별분업을 강화하는 정책임</li> <li>• 기존의 육아휴직제도나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등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기존제도와 부딪히는 곤란한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음. 이런 예산을 오히려 육아휴직급여 상향이나 공보육 서비스 강화 등 그동안 꾸준히 요구되어 왔던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거라고 생각함.</li> <li>• 정책 홍보, 설명 부족, 다른 수당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 설명 부족</li> <li>• 전체 재정투입규모 확대가 아닌 급여체계 조정으로 진행하는 점</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개별 영유아의 요구 등에 따라 차등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어야 함</li> <li>• 저출생 극복 및 출생률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측면을 고려한다면 대상 연령을 늘릴 필요가 있음</li> <li>• 11개월 이후 아동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줄게 되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영아 뿐 아니라 유아까지로의 부모급여 연령 및 급여수준 확대 필요</li> <li>•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 고려(0~11개월은 보편적 지원 유지, 그 이후 연령부터는 소득별로 순차적으로 지원)*</li> <li>• 경제적 지원만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불가능함.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타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li> <li>• 아동수당을 더 높은 연령 아동에게 주는 것이 적합할 수 있음</li> <li>• 부모 급여를 현금이 아닌 아동 육아 용품으로 바꾸쳐로 제시하는 방법 등도 고려 필요.</li> <li>• 급여 수급을 부모교육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li> <li>• 부모 대상(대국민 대상) 으로 부모급여제도에 대한 취지 홍보 등이 좀 더 충분히 이루어야 저야 함</li> <li>• 부모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나.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국정과제는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어린이집 시설 면적 상향,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 당 아동 비율은 서울시 등에서 0세반은 1:3에서 1:2로, 3세반은 1:15에서 1:10으로 조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시간제보육 운영모델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2022년 9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부모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부모들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시간제보육반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련 시간제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하던 방식에 추가로 기존 연령반에서 반별 정원 내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보육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의 축소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추진, 아직 성과는 미미하나 질 제고 의지가 보인다는 점,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한 모델수립과 시범사업을 했다는 점, 유보통합을 통한 격차 해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한 점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아직 실제로 교사대 아동비율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시설 기준이나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 변화가 부족하다는 점, 현장에서의 체감도고 낮고, 부모교육이 부족하거나, 보육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미흡한 점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수 조정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대 유아비율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인구소멸 지역은 여전히 교사와 어린이집 공급량이 부족하여 공급대책 마련과 함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부모급여나 보육료 지급 등과 연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다양한 부모들에 대한 유연한 보육서비스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핵심으로서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하며, 국가의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확대를 통한 질 제고 정책이 보다 강

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외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상충성과 상보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을 개선할 점으로 제안하였다.

〈표 IV-3-3〉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시범사업 등) 추진</li> <li>• 교사의 휴식시간 보장</li> <li>•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추진</li> <li>• 아직 성과는 미미하나 질 제고 의지나 추진과제는 긍정적인</li> <li>• 시간제 보육 활성화</li> <li>• 어린이집의 지원이나 처우개선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li> <li>• 유보통합을 통한 격차 해소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미흡</li> <li>• 공간면적 또한 질적 서비스 강화 요소로 중요한 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li>•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족</li> <li>• 보육의 질 제고 정책의 체감도가 낮음</li> <li>• 유보통합 이슈로 크게 진전된 바가 없음</li> <li>• 인프라 및 정량적 지표 중심의 질 제고의 효과성에 의문</li> <li>• 부모교육 부족</li> <li>• 시간제보육 운영의 공립. 사립 설립유형별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함.</li> <li>• 관련 예산 확보 미흡</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비율 조정은 합당하나, 인구소멸 지역은 여전히 교사와 어린이집 공급량이 부족함.</li> <li>•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필수임</li> <li>• 부모교육 확대는 부모참여율 증가로 이어졌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 및 보육료 수당 지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부모교육의 의무화 강화)</li> <li>• 다양한 근로시간을 하는 부모들에 대한 유연한 서비스 대책, 소멸지역에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대책이 필요함</li> <li>•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li> <li>• 과연 부모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얼마까지 지불의향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li> <li>•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질 제고 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li> <li>• 기본적으로 재정 확충 필요함</li> <li>• 보육 서비스 질 제고의 내용에 대한 실행 시점과 단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정책 실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li> <li>• 보육교사의 처우도 중요하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의 강화가 중요함</li> <li>•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li> <li>•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상충성, 상보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은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

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생 지원 대상이다. 사업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용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경우,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민간 시장의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향후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범죄경력, 건강 상태와 같은 결격사유 확인이 가능해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까지를 추진하고 있다.<sup>5)</sup>

유아교육 및 보육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추진 중인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과 구축, 민간 돌봄서비스 제도 관리가 부재하였는데,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 마을돌봄 확대를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 등을 잘한 점으로 뽑았다. 이에 반해, 돌봄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과, 민간돌봄서비스 자격관리제도나 등록제 도입으로 오히려 공공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현 정부의 늘봄학교와 마을돌봄간의 연계나 불분명성, 돌봄기관의 질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마을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질 관리 시스템 도입, 돌봄기관 별 격차 해소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유사 돌봄사업의 중복문제 검토 및 해결과 전달체계 재정비, 민간 육아도우미의 자격관리제도 도입,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보미 서비스간 실시간 연동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필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아이돌보미 등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였다.

5) 한겨레(2023. 7. 19.).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도입됐지만…발급 건수는 '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773.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773.html) (2023. 10. 17. 인출).

〈표 IV-3-4〉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과 구축</li> <li>•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제도 추진</li> <li>•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li> <li>• 마을돌봄 확대를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노력</li> <li>•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및 확대</li> <li>• 초등돌봄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초등교육기관 내 돌봄체계를 확대한 점, 지역사회 복지와 아동 돌봄을 연결시킨 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돌봄종사자 임금</li> <li>• 민간돌봄서비스 육성으로 공공의 책임성 약화</li> <li>• 늘봄학교와 마을돌봄 간 연계 방향성이 불명확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3각 돌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제시될 필요</li> <li>•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 아동센터가 이용자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센터에서 일하는 성인에 대한 질보장과 수급 문제가 시급함</li> <li>• 돌봄 기관 별 서비스 질 격차 및 돌봄 인력 격차 등 문제 지속, 통합적 초등돌봄 운영 체계 미구축으로 아동과 학부모 수요 미 충족 등</li> <li>•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이 유치원,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또 다시 양산할 수 있음. 따라서 잘한 점으로 평가하기 어려움.</li> <li>• 돌봄사업의 중복문제 심함</li> <li>•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심함(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등)</li> <li>• 현 정부와 이전 정부 돌봄정책의 혼선</li> <li>• 홍보 부족</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이 선행됨과 동시에 질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li> <li>• 마을돌봄 확대는 기관별, 지역별 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함</li> <li>• 마을돌봄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그 사례를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음.</li> <li>• 유사 돌봄사업의 중복문제 검토 및 해결과 전달체계 재정비 필요</li> <li>• 민간 육아도우미의 자격관리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무분별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li> <li>•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 서비스간 연동 및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필요</li> <li>•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현재 라형은 지원금이 없음)이 아닌 보편주의 관점에서 모두 지원대상이 되어야 함</li> <li>• 아이돌봄서비스질 제고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이 우선 필요하며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함</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라.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7. 27.<sup>6)</sup>). 발표에 따르면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

을 늘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2024년부터 폐지하여, 난임부부 시술비가 2024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이다.<sup>7)</sup>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도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술비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맞벌이 부부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임신·출산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용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우려,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 부족, 장애여성 등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산모 및 아동에 대한 서비스지원 부족,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실효성 등이 미흡하다고 보았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서울시 사업)의 경우도 출산후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사업을 위한 가정내 방문은 3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인력 가정 방문의 효과성이 높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23년 들어 제도 변화가 계속 있긴 하나, 전문가들은 최근의 변화 이외에도 산부인과 등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가 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산부인과나 소아과의 충분한 공급과 소아전문의 감소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비대면 및 야간 공휴일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산모 건강관리 중 산후우울증 관련 지원 확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임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7. 27.).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7) TV 조선(2023. 10. 16.). 난임부부, 내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시술비 지원받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6/2023101690035.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6/2023101690035.html) (2023.10.18. 인출)

신출산, 돌봄양육,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히 청소년부모, 한부모 등 가족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아동학대나 방임에 처한 영유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난민아동, 불법체류자녀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 IV-3-5〉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모바일 앱 활성화와 정신건강 지원 확대는 시의적절한 접근임, 전생애 검진기록 관리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국가 data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임</li> <li>•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검진기록 연계 추진</li> <li>• 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를 통한 임신출산진료비 보장 강화</li> <li>• 난임 부부 시술비 정신건강지원 확대</li> <li>• 대체적으로 현행 산모 아동관리 체계화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li> <li>• 전문인력이 방문형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추진</li> <li>•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확대를 통해 생애 첫 1,000일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li> <li>• 임신, 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비용지원 외 서비스 지원 미흡</li> <li>•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대한 지원 미비</li> <li>• 만혼화를 인하여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는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음</li> <li>• 산부인과 접근성 자체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한 대응방안</li> <li>•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인프라 부족</li> <li>• 산모, 아동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우선되어야 함. 저출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에 이와 관련된 재원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잘한점으로 평가하기 어려움.</li> <li>• 임신 출산 모바일앱의 효과성 의문</li> <li>• 장애여성 등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산모 및 아동에 대한 서비스지원 강화가 필요</li> <li>•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실효성의 의문</li> <li>• 출산 진료비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li> <li>• 홍보 부족</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부인과 등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개선</li> <li>• 고령 산모 지원, (공공)산부인과, 소아과 충분한 공급 및 전문의 감소 문제 해결</li> <li>•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li> <li>• 비대면 및 야간 공휴일 진료 확대 필요.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필요</li> <li>• 산모 건강관리 중 산후우울증 관련 지원 확대</li> <li>•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임신출산, 돌봄양육,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히 청소년부모, 한부모 등 가족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li> <li>•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학대나 방임 확인 등)</li> <li>• 난민아동, 불법체류자녀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마. 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국정과제 세부내용으로는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등이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일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7.18.)으로(법무부 보도자료, 2023. 6.30.),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어 1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023년 8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sup>8)</sup>

전문가들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예방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점과, 최근 미출생 등록 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잘한 점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아동학대 등 범죄에 대한 처벌 등 수단이 강화되었으나, 지원이나 시스템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지방단위 아동학대 원스톱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중앙단위에서의 현황 파악 및 점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아동학대 방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개선할 점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배치 통해 부모 노동환경, 경제환경 등 관찰 및 지원, 아동 뿐만 아니라 돌봄 주체인 방과후 및 돌봄 거점 학교, 어린이집 등 늦은 시간 여성교사 대상 범죄에 대한 대비 강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 아동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인식 개선, 아동학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교육과 확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8. 21.).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표 IV-3-6〉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예방체계 구축 추진</li> <li>• 미출생등록 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li> <li>•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등이 연계하여 학대 아동 발굴과 조사, 사례관리를 실시</li> <li>•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li> <li>• 아동 학대 관련 예방 및 방지 등의 인식을 개선</li> <li>• 전담공무원 등 공적체계로 편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권 침해 관련 사례에서 보듯이 아동 학대 예방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에 대한 대책 부족</li> <li>• 교사 대상 형식적인 아동학대교육</li> <li>• 범죄에 대해 처벌 등의 수단만 강화하고, 지원이나 시스템, 제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li> <li>•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지만 담당자들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li> <li>• 아동 학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해져야 함.</li> <li>• 아동학대 관리 인력 처우개선 부족 및 인력 확보 필요</li> <li>•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원스톱대응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지자체별 현황과 성과분석 그리고 개선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배치 통해 부모 노동환경, 경제환경 등 관찰 및 지원</li> <li>• 가해자의 인권 보호보다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보다 강화된 법률 수정, 제도 마련이 필요함</li> <li>• 방과후 및 돌봄 거점 학교 등 늦은 시간 여성교사 대상 범죄 대비가 필요</li> <li>• 부모교육의 의무화 필요.</li> <li>•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 아동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li> <li>•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현장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li>•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체제와 지원 인력 확보</li> <li>•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서비스지원이 필요함</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바.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국정과제 세부내용은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은 발달 장애인을 가진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국가의 협력적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는 점과 어린이집 재활병원 등 인프라 확충을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발달장애 아동 대상 교육과 돌봄 체계 미비, 발달·재활의료 인프라, 전문 인력의 부족, 장애 조기 발견 및 개입서비스 체계의 실효성 등이 미흡하다고 보았다.

개선할 점으로는 발달장애아동을 인프라와 지방 아동전문 재활병원 및 치료센터

가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와 성인 장애인 재활 및 자립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장애 조기 발견·개입과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 부담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인 사망 시의 재산 관리 등 제도 마련, 유아특수교사 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V-3-7〉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발달장애인 지원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은 발달 장애인을 가진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국가의 협력적 대응 전략으로 평가됨.</li> <li>•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 지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li> <li>• 어린이 재활의료 병원 설립도 지속 추진 중인 점은 긍정적인 부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재활서비스 접근성 부족 및 재활의료 인프라, 유아특수교사, 치료사 등 전문 인력 부족</li> <li>• 발달장애 아동 대상 교육과 돌봄 체계 미비</li> <li>• 기존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존 병원은 뒤로 하고 신설 인프라 구축만 신경써서는 안 됨</li> <li>•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미흡</li> <li>• 실제에서는 장애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체계 미흡</li> <li>•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홍보 부족</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지방에는 아동전문 재활병원과 치료센터가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함</li> <li>• 경계성지능 아동 지원 대책 마련</li> <li>• 공적인 장애조기발견 개입서비스 체계구축. 현재 부모의 의무로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받는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국가의 의무로써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li> <li>•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와 성인 장애인 재활 및 자립시스템과의 연계 강화</li> <li>• 국가 주도적인 장애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li> <li>• 발달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국가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li> <li>•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인 사망 시의 재산 관리 등 제도 마련 필요</li> <li>• 유아특수교사 수 확충</li> <li>• 출생시부터 장애유무 및 발달 지연 가능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함</li> <li>• 진단을 받아도 개입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개개인이 알아보고 치료는 대기가 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음</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바.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의 세부내용으로는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연속성있고 일관성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점과 올해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생계, 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 부모지원 강화 실질적 내용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과, 천편일률적 다문화가구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언어지원과 학습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다문화 지원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개선할 점으로는 청소년부모 지원 강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구축,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다문화 교사 확충 및 지원, 어린이집, 학교 확대 배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확장,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 및 학습지원 확대, 중도입국·난민·불법체류외국인 자녀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 마련,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전달체계 종사자 처우 개선, 다문화 수용성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V-3-8〉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연속성있고 일관성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점</li> <li>•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중요성 강조하고, 교사고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li> <li>• 올해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생계, 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한 것은 의의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청소년 부모지원 강화 실질적 내용 부족</li> <li>• 다문화 중복 혜택 점검 및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방지 대책</li> <li>• 다문화도 이제는 다양해서 소득과 부 기준으로 선별해서 지원해야 함</li> <li>•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지원, 학습지원이 더 필요함</li> <li>•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관련 예산이나 지원은 감소하고 있음.</li> <li>• 청소년 부모나 한부모가 자녀들과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의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함</li> <li>•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li> </ul>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이 어떻게 확대 추진되고 있는지 불분명</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부모 지원 강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구축,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li> <li>• 다문화 교사 확충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확대 배치</li> <li>•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다문화가족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한국태생 가족대상 사업까지 확장 필요</li> <li>•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지원, 학습지원이 더 필요함</li> <li>•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난민아동청소년,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등 다문화가족 자녀 내의 다양성이 존재함. 각 특성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li> <li>•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전달체계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li> <li>•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지원 금액 등의 사항 조정이 필요함</li> <li>• 우리나라의 다문화수용성은 아직도 많이 미흡한 편임.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도 이제 우리 사회의 청년층으로 자라났는데 그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국정과제 세부내용은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성별 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들이 공공기관이 대기업 등에서 잘 이행되고 있다는 점,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육아휴직 등 정책 확대와 수용적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 육아휴직 급여를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을 잘한 점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성별근로공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관련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다는 점, 고용보험 중심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아닌 소상공인, 영세사업장 근무자는 육아휴직, 난임휴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 종사자들이 주로 수혜받고,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낮다는 점 등이 미흡하다고 보았다.

개선한 점으로는 고용보험 기금 기반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고용보험 기반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스템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의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이 원천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 심화 속에서 고용보험 기반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충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수준의 인상 및 복귀 프로그램 필요, 이종노동시장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실행력 강화, 남성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지원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유연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 육아휴직 이외의 육아친화제도 강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채용 지원금 도입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강화,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양육지원체계의 정책목표 확립과 재구조화, 우수 기업 사례 발굴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표 IV-3-9〉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육아 지원 및 양성 평등 구현 확대</li> <li>•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정책 확대</li> <li>• 유럽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 구현</li> <li>• 아빠 육아휴직의 수용성 분위기 커짐</li> <li>• 여성경제활동 촉진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국한하지 않고 재직여성, 비경활여성으로 확대한 점</li> <li>•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 확대 추진</li> <li>• 육아휴직급여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확대(검토 중)가 실질적인 일가정양립지원에 기여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근로공시제 미도입</li> <li>• 양성평등일자리 기반 조성에 중요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2024년 예산 삭감</li> <li>• 계획은 있으나 실질적 제도 변화나 성과 미흡</li> <li>• 고용보험 중심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아닌 소상공인, 영세사업장 근무자는 육아휴직, 난임휴가 혜택 보기 어려움.</li> <li>• 대기업, 공공기관 이외 소규모 및 중소기업 등 민간이나 자영업 환경에서는 실질적 이용 어려움</li> <li>• 직종별, 정규직 이외 비정규직 실질적 이용 부족</li> <li>• 여전히 낮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li> <li>• 육아휴직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이들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은 매우 미흡함</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기금 기반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시스템 개선 필요.</li> <li>• 고용보험 기금 중에서도 실업급여로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오는 것은 실업급여의 취지로도 맞지 않음</li> <li>• 공무원, 대기업 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근무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휴가 등 사용 가능하도록 직장 지원 강화</li> <li>• 이종노동시장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실행력 강화</li> <li>• 일자리 자체의 불안정성과 형해화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규모 자체가 줄고 있어서, 노동정책 차원에서 전면적 재검토</li> <li>• 남성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지원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필요</li> <li>• 누구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수준 인상 및 복귀 프로그램 등 보완 필요</li> <li>• 유연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 육아휴직 이외의 육아친화제도 강화</li> <li>•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대체근무자 채용 지원금 도입</li> <li>• 육아휴직제도가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패널티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li> <li>•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등 양육지원체계의 정책목표 확립과 재구조화</li> <li>• 우수 기업 사례 발굴 및 홍보 확대</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아. 아동 진료체계 개선

아동 진료체계 개선의 세부내용으로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가칭)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소아진료병원 및 소아진료의 감소 현상 속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정책의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공공의료 축소, 아동 진료기관의 부족, 인구소멸지역·농어촌지역 접근성 낮음, 소아과 의료인력의 감소 상황에서 아동주치의 제도의 실효성 의문, 아동전문 상담가 부족 등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개선할 점으로는 아동진료체계에서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보다 소아청소년과 병원 진료비 수가 조정이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등 아동 관련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생애초기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유치원 상담교사 배치, 아동주치의보다 기관에 배치하는 학교주치의 제도 추진으로 방향 전환,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라인과 예산 등을 제시하여 실행률을 높이는 정책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3-10〉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아동 진료체계 개선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아진료병원 및 소아진료의 감소 현상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제안임</li> <li>•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li> <li>•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정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료 축소</li> <li>• 농어촌 지역의 아동 진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귀농 젊은 세대 가정의 양육에 어려움</li> <li>• 전국 어린이 병원 병동 부족, 어린이 응급실 부족으로 인구 소멸지역 거주 어린이와 양육자에게는 접근성이 크게 떨어짐.</li> <li>• 소아과가 문을 닫는 등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주치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임</li> <li>• 소아과 의료인력의 확충 미흡</li> <li>• 소아과 진료 수가 현실화 필요함</li> <li>• 아동전문 상담가의 부족</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진료체계의 시범 사업 도입보다는 아동 관련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아청소년과 병원 진료비 수가 조정 필요</li> <li>• 생애초기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유치원 상담교사 배치</li> <li>• 소아과 전공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동 주치의 제도는 한계가 있어 소아청소년과 의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확보하는 정책이 시급함</li> <li>• 아동주치의보다 학교주치의 제도 추진이 바람직함.</li> <li>•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라인과 예산 등을 제시하여 실행률을 높이는 정책 개선이 필요함</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자. 식생활 건강권 강화

식생활 건강권 강화의 세부내용으로는 매일 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 수준 평가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 평가를 위한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하고 있다는 점, 최근 뉴스 등을 통해 발표된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 발암물질 지적에 대한 대응 등을 잘한 점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기존 정책의 연장선 속에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 유기농 식자재 확대의 부족 등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였다.

개선할 점으로는 수산물 등에 대한 후쿠시마 및 오염지역 원산지 구분 표기, 영양사 처우 개선, 유기농 식자재 및 지역농산물 지원 확대, 식품 안전 관리 강화 및 교육, K급식, 맞춤형 메디푸드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 IV-3-11〉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식생활 건강권 강화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관리로 식생활 관심과 개선 노력한 점</li> <li>• 급식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 수준 평가 등을 위한 예산 편성</li> <li>• 어린이 영양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236개 운영하고, 전국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 평가를 위한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li> <li>•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 발암물질 지적에 대해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제대로 된 정보 제공</li> <li>•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시적인 구체적 성과 없음</li> <li>•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li> <li>• 식생활 건강관리 관련 디지털, 점자표시 등 부족</li> <li>• 생활 건강권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li> <li>•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가 필요한 지 의문</li> <li>• 위생 영양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li> <li>• 유기농 식자재 확대가 부족함</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등에 대한 후쿠시마 및 오염지역 원산지 구분 표기</li> <li>• 영양사 처우 개선방안 필요</li> <li>• 유기농 식자재 및 지역농산물 지원 확대 필요</li> <li>• 식품 안전 관리 강화 및 교육</li> <li>• K급식, 맞춤형 메디푸드 등 이에 대해 잘 알지못함</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차. 교통안전

교통안전 관련 국정과의 세부내용으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및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도심속도 하향 조정,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등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 도입, 횡단보도 우회전 등 보행자 보호 중심 교통 개선 등을 잘한 점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스쿨 존 제도 현실화를 위한 시간제 운영, 각종 제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지속적 발생,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관리 부족 등을 미흡한 점으로 보았다.

개선할 점으로는 어린이 안전지도교육 강화, 어린이지 보호구역 등에서 자동차가 서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 단속강화와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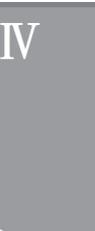
〈표 IV-3-12〉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교통안전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li> <li>•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및 위반 시 과태료 상향</li> <li>• 도심속도 하향 조정,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등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 도입</li> <li>• 횡단보도 우회전 등 보행자 보호 중심 교통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안전지도 교육 강화 필요</li> <li>• 학교 스쿨존 위반시 벌금이 아닌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li> <li>• 스쿨 존 제도 현실화를 위한 시간제 운영 필요</li> <li>• 어린이 안전사고 지속적 발생</li> <li>•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관리 미흡</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강화 및 어린이 안전지도교육 강화 필요</li> <li>• 물리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환경 조성</li> <li>• 교통 신호 무시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단속 강화</li> <li>•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쉽게 해야 함</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카.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의 세부내용으로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학습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나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노력,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잘한 점으로 보았고, AI·메타버스 활용 학습이 사교육 경감이나 학습결손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점, 실질적 사교육 경감의 실효성 등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개선할 점으로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의 모형과 시뮬레이션, 취약계층의 학습 결손 및 계층간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 근거기반 정책에 입각하여 사교육 경감 추진, 스마트학습시스템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 유아·초등·중등 등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사교육 경감 정책 추진, 농산어촌 및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격차 해소, 지역사회 돌봄 센터 등과 연계한 사각지대 학습지원 방안 등 세밀한 기획 등을 제안하였다.

〈표 IV-3-13〉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학습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는 적절함</li> <li>•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에 대한 지속적 강조</li> <li>•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li> <li>• AI 등을 이용한 교육이 맞춤형 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충족될 것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있음</li> <li>• AI, 메타버스 활용 학습이 사교육 경감, 학습결손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임</li> <li>• 실질적 사교육 경감 방안이 부족</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대면 교육 인력 지원도 확대해야 할 것임.</li> <li>•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이 사교육 경감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에 미칠 효과성에 대한 논리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필요</li> <li>• 취약계층의 학습 결손 및 계층간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 필요</li> <li>• 근거기반 정책에 입각하여 사교육 경감 추진 필요</li> <li>•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꼭 스마트학습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감염병 상황 등에 있어 원격 또는 재택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대안으로서 필요하나 사회적 관계,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학습시스템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li> <li>• 유아, 초등, 중등 등 학교급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 있음</li> <li>• 지역별로 교육수준의 격차는 심하다고 판단됨, 농산어촌 및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격차 해소에 주력할 필요</li> <li>• 지역사회 돌봄 센터 등과 연계한 사각지대 학습지원 방안 등 세밀한 기획 필요</li> </ul>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다.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으로는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는 점, 유보통합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다는 점,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잘한 점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2025년을 유보통합 달성으로 보아, 실질적 유보통합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는 점, 이해관련 집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이나 정보 공유 등이 부족하다는 점, 법제화가 없다는 점, 교사 처우 개선 등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 등을 미흡한 점으로 보았다.

개선할 점으로는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유보통합 방안이 단계적으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하였다. 전문가들은 교사 자격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유보통합 로드맵 제시 등 구체적 계획 수립,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 재정 확보 우선 해결,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표 IV-3-14〉 육아관련 국정과제 성과: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잘한 점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li> <li>• 유보통합 관리부처 일원화(교육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결정</li> <li>• 유보통합추진단 발족</li> <li>•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li> <li>•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추진</li> <li>• 유치원 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을 유보통합 달성으로 보아, 실질적 유보통합이 가능할지 우려됨</li> <li>• 각 이해관련 집단과의 지속적인 소통, 정보 제공 및 설득 작업 공개 자료등 부재 등 투명하지 못함</li> <li>• 교사 처우 개선 등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투입 필요</li> <li>• 법제화 없이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음</li> <li>•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미흡</li> <li>• 유보통합시 재정통합에 대한 방안 불분명</li> <li>• 유아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 없음</li> <li>•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홍보의 미흡</li> </ul>

### 개선할 점

- 교사 자격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적 방안 수립 필요와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유보통합은 5년 이상 장기기간 통합과정 필요하고, 로드맵 제시 등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통합과 재정 이슈를 먼저 해결한 후 다른 이슈 접근 필요
- 부처 간 예산통합 및 교사 처우 개선 등 질 개선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함
-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연계 강화
-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한 이해 당사자 논의를 통한 유보통합 관련 이해집단 간 사회적 합의 도출
- 아동중심의 유보통합보다는 관련기관과 종사자집단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유보통합 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유보통합 진행과정 및 구체적 변경내용 등 국민에게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이를 위한 관련부서의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유치원 교사 교권 침해 대응 철저 등 필요
- 중앙부처간 업무 통합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추진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 4. 소결

첫째, 부모와 전문가 모두 안전한 양육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등 어린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전문가 모두 국정과제 중요도는 7점 중 5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 중요도가 7점 중 6점 이상으로 나타나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수행정도는 7점 중 3점대 수준을 보였고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7점 중 3.38점을 보여 아직 성과도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아직 수행정도나 가시적 성과가 높지 않았으나, 국정과제가 5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과 성과 홍보를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인식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부모들은 국정과제가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52.0%인데 반해, 전문가들은 51.5%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책개발·평가 등에 관여도가 높은 전문가들에 비해, 일반 정책수요자점 수혜자인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더 낮아 국정과제에 대한 이슈와 추진현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로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 ‘부모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실질적 자녀양육의 책임이 큰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공급자 지원’은 교육, 보육, 돌봄의 기관 이용의 증가와 함께, 국가 등 공적 책임 커져간다는 점에서, ‘아동 지원’은 방향성 차원에서 핵심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두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

다섯째, 정책방향성으로는 부모는 부모 현금지원을, 전문가는 서비스 질 제고를 최우선으로 보았다. 부모는 ‘부모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가 26.6%,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가 19.7%,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가 12.9%, ‘보건의로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가 4.2% 순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전문가는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가 3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가 32.7%,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가 25.5%,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 강화’가 5.1%, ‘보건의로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가 1.0% 순으로 나타나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부모들은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였고, 전문가들은 부모급여의 상향지원과 가정양육 어린이집의 선택권 부여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현금지원 방식의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현금지급에 따른 남·오용이나, 부모급여와 자녀양육비 지출과의 연계성 부족, 사교육 조장 우려, 부모급여 수혜 연령이 0,1세로 제한, 가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지원의 한계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구경제상황을 고려한 차등 추가지원이나, 지급연령 확대, 부모교육과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의 축소 관련 시범사업 추진,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추진,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을 위한 모델수립과 시범사업, 유보통합을 통한 격차 해소 추진 등을 잘한 점으로 보았고, 이에 반해, 아직 실제 교사대 아동비율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시설 기준이나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 변화가 부족하다는 점,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고, 보육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미흡한 점을 제

시하면서, 어린이집 이외 유치원 교사대 유아비율의 조정, 부모교육 의무화, 보육 교사 자격요건 강화,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상충성과 상보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덟째, 아동돌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들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마을돌봄 확대 등을 잘한 점으로, 돌봄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 민간돌봄서비스 자격관리제도나 등록제 도입으로 오히려 공공의 책임성 약화 우려, 늘봄학교-마을돌봄 간 연계나 불분명성 존재, 돌봄기관의 질 격차 등이 미흡한 점으로 보았다.

아홉째, 산모·아동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양한 임신·출산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비용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우려,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 부족, 장애여성 등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산모 및 아동에 대한 서비스지원 부족,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실효성 등에 우려를 나타냈고, 특히 산부인과 등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소아전문 의 감소 문제의 해결, 비대면 및 야간 공휴일 진료 확대, 난민아동, 불법체류자녀 등 건강관리 사각지대 아동 지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열번째,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들은 최근 미출생 등록 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잘한 점으로 보았고, 중앙단위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미흡하다고 보았다. 개선할 점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배치 통해 부모 노동환경, 경제환경 등 관찰 및 지원, 아동학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교육과 확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 서비스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열한번째,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연속성있고 일관성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점과 2023년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종합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잘하였다고 보았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 부모지원 강화 실질적 내용 부족,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언어지원과 학습지원 부족, 다문화 지원 관련 예산 감소 등이 미흡하다고 보았다.

열두번째,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육아휴직 등 정책 확대와 수용적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 육아휴직 급여를 예

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 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확대 등을 잘한 점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성별근로공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관련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다는 점, 고용보험 중심으로 소상공인, 영세사업장 근무자는 육아휴직, 난임휴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 종사자들이 주로 수혜받고,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낮다는 점 등이 미흡하다고 보았다. 개선할 점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수준의 인상 및 복귀 프로그램 필요, 이중노동시장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실행력 강화, 남성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지원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유연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 육아휴직 이외의 육아친화제도 강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채용 지원금 도입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강화,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양육지원체계의 정책목표 확립과 재구조화, 우수 기업 사례 발굴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했다는 점, 유보통합 관리부처 교육부로 일원화,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등을 잘한 점으로 보았고, 2025년에 실질적 유보통합이 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해관련 집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이나 정보 공유 등 부족, 법제화가 없다는 점, 교사 처우 개선 등 가시적 성과 부족,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을 미흡한 점으로 보았다.



# V

## 정책 제언

- 01 현금지원 정책
- 02 서비스 지원 정책
- 03 시간지원 정책



## V. 정책 제언

### 1. 현금지원 정책

#### 가.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지원 정책 마련

부모들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아동수당, 의료비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정책에서 외벌이보다 맞벌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수준은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컸다.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불만족 이유는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많아, 외벌이나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맞벌이나 소득이 높은 가구는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인 지원(+ $\alpha$ )라는 인식이 더 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의 보편적 현금지원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은 외벌이 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나.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 수혜 연령 연장 및 추가 바우처 제공

전문가들은 부모급여 신설을 통해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영아를 둔 부모들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 부모들의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현금급여의 확대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혜택을 받는 부모는 아이가 커가면서 오히려 도서, 의복, 음식, 장난감 등에 대한 구매가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영아 때보다 자녀가 어릴 때보다 커가면서 더 많은 양육비용

이 필요할 수 있다 점에서 부모급여 수혜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급여 확대시 현금지급에 따른 남·오용이나, 부모급여와 자녀양육비 지출과의 연계성 부족, 사교육 조장 우려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양육비 부담 등 현실적 문제로 아이 낳기 꺼려하는 현실과 무상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유아가 커가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양육이나 돌봄비용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모급여 수혜연령을 늘리거나, 0,1세 부모급여 총액규모를 0-5세로 나누어 지원하거나, 부모급여는 현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늘리거나, 임신출산 초기 지원되는 각종 바우처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에 3세 이후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바우처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 2. 서비스 지원 정책

### 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제고

교사대 아동수, 교사 처우개선, 시간제보육 등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단계이며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질 제고가 함께 논의가 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구체적, 가시적 성과를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나 유보통합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나.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프로그램 제공 검토

자녀가 커 갈수록 자녀 사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현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등 사교육 시장에 도움을 받고 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급여액이 커지면 사교육 지출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유치원에서의 특성화프로그램 제한 등의 정책이 있기는 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회계투명성 등을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다.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진료비 수가 조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둥이 지원금 확대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갈수록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병원과 소아과 전문의 부족은 심화되고 있어, 소아과 진료비 수가 조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 저출산 장기화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대상인 아동 인구가 감소한 데다 수입원인 진료비마저 다른 전공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아청소년과의 인당 진료비는 2017년 11만291원에서 2021년 9만7,416원으로 감소하였고,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청과) 중 진료비가 가장 낮으면서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인당 진료비가 감소한 유일한 진료과목이기도 하다.<sup>9)</sup> 이에 소아과 등에 대한 진료비 수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 3. 시간지원 정책

### 가. 출산 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이용 촉진 유도

부모 조사에서 출산 전이나 출산 초기 지원제도(모 출산휴가, 모 육아휴직 등)에 대한 이용은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후에 돌봄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연근무제(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의 이용은 다소 떨어졌다. 부모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가 33.3%, 부가 19.9%였으며,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이용률은 대체로 20% 수준을 밑돌았다. 부모면담에서도 육아휴직 등에서 복귀 후 자녀 등하원 등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나 비용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 육아휴직에서 복귀하거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 유연근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적극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사결과에서도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만

9) 시사위크(2023. 8. 16.). [우리아이 단골집, 소아과가 사라지다②] 그 많던 소아과는 어디로 갔을까.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13> (2023. 10. 23. 인출)

족도가 5점 3.8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복직 후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제도를 직장내에서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 사용으로 인한 승진 차별 등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 나. 다양한 형태의 시간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 지원

부모면담에서도 나왔듯이 부모들은 실질적 육아와 돌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런 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이외에도 육아기 재택근무나 육아기 부모 대상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또한 자녀의 돌봄공백을 줄이면서도 업무공백 또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사업주 지원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육아기 부모들 대상으로 다양한 시간지원 정책들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sup>10)</sup>

## 다. 맞돌봄이 가능하도록 남성(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효과 분석

전문가들은 남성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부모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의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 중 맞벌이 가구(1,004명)의 모 육아휴직 경험은 58.6%, 부 육아휴직 경험은 20.5%였고, 외벌이(948명)는 모 육아휴직은 19.5%, 부 육아휴직은 11.4%를 보여, 맞벌이 가구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더 높았고, 육아휴직이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아빠의 자녀돌봄에 참여를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맞돌봄이 가능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하여 2022년부터 시행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

10)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발표에서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기로 하였다(연합뉴스, 2023. 3. 28.)

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sup>11)</sup>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까지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2023년 10월 6일자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자녀대상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급여대상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 10. 6.). 생후 12개월(또는 18개월) 등 영아기는 특히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으로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아빠휴직 참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라. 낮은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조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고,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하여(「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 제4항).<sup>12)</sup> 육아휴직 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80%이나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낮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일가정 양립에 있어 이중노동시장에 따른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 육아휴직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았고, 부모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중 불만족 이유로 육아휴직 등에 연동된

11)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2Info.do> (2023. 12. 1. 인출)

12)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방안이 추진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동아일보, 2023. 12. 1.)

급여수준이 낮아서가 40% 수준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부모면담에서도 경제력 수준에 따른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 하였다. 결국 기업 차원이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적극 이용을 권장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근로자들 또한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늘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이용 확대는 다소 의문이다.

이에 우선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필요가 있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대체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150만원 초과 185만원 이하는 90%, 185만원 초과는 현행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월급여액이 낮은 가구의 대한 일정부분 소득 보전을 추가해주는 방식도 필요해 보인다.

## 마.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홍보 강화

### 1)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나 최근의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 등 영유아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안내자료나 홍보 등이 필요하다.

### 2) 국정과제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홍보 필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정책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거나,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별 세부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수행도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 7점 중 3점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부모들은 국정과제가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52.0%인데 반해 전문가들은 51.5%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국정과제가 5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고, 정책개발-평가 등에 관여도가

높은 전문가들에 비해, 일반 정책수요자겸 수혜자인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더 낮아 국정과제에 대한 이슈와 추진현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 10. 6.).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6.~11.15.)
- 교육부 보도자료(2023. 1. 5.).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
- 교육부 보도자료(2023. 4. 10.).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
-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근진·박창현·김희수(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나영·최윤경·김희수(202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대한민국정부(2021). 2021년도 성과계획서(변경)(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22).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22. 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동아일보(2023. 12. 1.). 육아휴직급여, 휴직중 100% 준다... 급여상한 '최저임금 수준' 인상.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01/122432065/1> (2023. 12. 1. 인출)
- 매일경제(2023. 9. 3.). "2025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통계도 발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20973> (2023. 10. 13. 인출).
- 법무부 보도자료(2023. 6. 30.).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를 도입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2. 13.).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148> (2023. 6. 12.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 9.). 미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복지국가, 보건복지부가 국민과 동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7. 27.).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7481&tag=&nPage=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7481&tag=&nPage=1) (2023. 6. 12.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8. 21.).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7774&tag=&nPage=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7774&tag=&nPage=1) (2023. 6. 12. 인출).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3. 10. 12.). 서울 유아대상영어학원 329개, 전년대비 무려 18곳 늘어나고, 고액비용문제 심각해...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5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16573059&t=board> (2023. 10. 18. 인출).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시사위크(2023. 8. 16.). [우리아이 단골집, 소아과가 사라지다②] 그 많던 소아과는 어디로 갔을까.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13> (2023. 10. 23.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3. 1. 9.).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 2023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3. 2. 16.).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

- 연합뉴스(2023. 3. 28.). 2자녀도 다자녀...난임휴가 6일로 늘리고 초6까지 근로 시간 단축(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134151530> (2023. 12. 10. 인출)
-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윤수재(2017).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광희·윤수재(2012). 성과관리와 평가체계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캐나다와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1).
- 이운진·양미선·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09).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주요정책과제부분).
- 최윤경·김나영·이혜민(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 보도자료(2023. 2. 22.). 2022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잠정).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23833&act=view&mainXml=Y](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23833&act=view&mainXml=Y).
- 황혜신·이도석·윤태원·황덕연·김준현(2021). 2021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III: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한겨레(2023. 7. 19.).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도입됐지만...발급 건수는 '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773.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773.html) (2023. 10. 17. 인출).

TV 조선(2023. 10. 16.). 난임부부, 내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시술비 지원받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6/2023101690035.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6/2023101690035.html) (2023. 10. 18. 인출).

##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2Info.do>  
o (2023. 12. 1. 인출).

정부업무평가 포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120대 국정과제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62](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62)  
(2023. 10. 30.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1242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4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3B0B9J0K6I0J9H3F3G0O0P2N3N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3B0B9J0K6I0J9H3F3G0O0P2N3N3) (2023. 9. 10. 인출).

##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olicy Performance and Tasks of ECEC(I): Focusing on the Outcome Evaluation of the National plan of ECEC

Dong Hoon Kim, Yunjin Lee , Yoon Kyung Choi, Youngmin Kim

This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 of key area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in South Korea, focusing on national policy achievements.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in South Korea,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five-year national agenda. It assessed the desig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utcomes of these policies. This analysis helped identify significant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 policies, as well as areas where the plans fell short or were not implemented. The study also proposed future improvements.

The detailed research content includes: First, developing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level of government initiativ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are, and nurturing over a five-year period. Second,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se initiatives over the past year. Third, based on the analysis of policy outcomes,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 and proposing future enhancements.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balanced support polic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emphasizing the integration and elimination of redundancies between policies and services. It also recommends prioritizing policies that ensure the safety of young children as a fundamental direction.

The policy suggestions focus on enhancin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through various approaches:

The study proposes various policies: cash support policies tailored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extension of cash support age, and additional vouchers. Service support policies include enhancing childcare service quality, reviewing educational programs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mproving treatment for childcare workers, and adjusting suppor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services. Time support policies suggest promoting systems for work-life balance post-childbirth and increasing maternity leave benefits. Finally, it recommends strengthening the promo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publicizing safe food practices, and highlighting exemplary cases.

Keywor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utcome Evaluation

## 부록 1. 부모 조사 질문지

# 육아정책 성과 관련 부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국가수준의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 (I) 연구의 일환으로, 윤석열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자녀 양육 및 육아와 관련된 부모 여러분의 의견과 주관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평가와 응답은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향후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3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 육 아 정 책 연 구 소

## I. 기초사항

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 2. 귀하의 출생년도를 기입해 주세요. \_\_\_\_\_년

문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③ 중소도시(특별·광역·특별자치시 이외 시 소재)  
④ 군(읍·면 지역)

문 4. 귀하의 결혼상태를 선택해 주세요.

-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 (       )

문 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예    ☞ 5-1로 가시오    ② 아니오    ☞ 설문종료

문 5-1. 자녀는 몇 명입니까? (       )명

문 5-2.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장 어린 자녀부터 셋째까지 입력해 주십시오.**)

구분	출생연도	성별	이용기관 및 소속
자녀 1	(       )년	① 남자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자녀 2	(       )년	① 남자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자녀 3	(       )년	① 남자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형태의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문 5-3. (미취학 연령의 자녀가 영유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린 자녀부터 셋째까지 입력해 주십시오.**)

구분	출생연도	이용기관	
자녀 1	( )년	<input type="checkbox"/> ① 국공립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자녀 2	( )년	<input type="checkbox"/>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④ 민간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⑤ 가정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⑥ 직장어린이집
자녀 3	( )년	<input type="checkbox"/> ⑦ 협동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⑧ 국공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⑨ 사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⑩ 반일제 이상 학원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 II. 육아지원서비스 만족도

문 1. 귀하의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 공공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3. 어린이집	<del>X</del>	<del>X</del>							
4. 유치원	<del>X</del>	<del>X</del>							
5. 시간제보육									

문 1-1. (문 1에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육아지원 서비스의 불만족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서비스 질이 낮음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 (접근성이 떨어짐)	⑤ 비용이 부담됨	⑥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오래 대기해야 함)	⑦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⑧ 기타 ( )
1. 공공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 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구분	① 서비스 질이 낮음	②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 (접근성이 떨어짐)	⑤ 비용이 부담됨	⑥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오래 대기해야 함)	⑦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⑧ 기타 ( )
3. 어린이집								
4. 유치원								
5. 시간제보육								

문 2. 귀하는 2023년도에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의 기본보육 시간은 09:00~16:00(7시간)이고, 추가로 연장보육(16:00~19:3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하고 있습니다.

- ① 예 (☞ 문 2-1로 가시오)    ② 아니오 (☞ 문 3으로 가시오.)

문 2-1. 어린이집 보육시간 운영방식(기본보육 시간 + 연장보육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문 3. 귀하는 2023년도에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3-1로 가시오)    ② 아니오 (☞ 문 4로 가시오.)

문 3-1.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문 4. 귀하의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인지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 초등돌봄교실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3. 지역아동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 포함)									
5.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6. 늘봄학교									

문 4-1. (문 4에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초등돌봄 서비스의 불만족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서비스 질이 낮음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 (접근성이 떨어짐)	⑤ 비용이 부담됨	⑥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오래 대기해야 함)	⑦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⑧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⑨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이 불만족스러움	⑩ 기타 ( )
1. 초등돌봄교실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3. 지역아동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 포함)										
5.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6. 늘봄학교										

문 5. 귀하는 다음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경우에도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이용 경험 '있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신청했으나,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용 경험 '없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이용 자격요건은 되지만 이용하지 않음
- \* 비해당: 이용 자격요건이 되지 않음

구분		인지 여부		이용/수혜 경험*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비 해당
		①	②	①	②	⑨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2. 영아수당					
	3. 가정양육수당					
	4.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6.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7.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8. 부모급여					
자녀 돌봄 시간 지원	9. 모 출산휴가					
	10. 부 출산휴가					
	11. 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2. 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3. 모 육아휴직					
	14. 부 육아휴직					
	15.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6.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기타	17.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8.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기타	19. 기타 지원제도( )					

문 5-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우, 만족수준을 5점 척도로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1	2	3	4	5
	2. 영아수당	1	2	3	4	5
	3. 가정양육수당	1	2	3	4	5
	4.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2	3	4	5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5.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	2	3	4	5	
6.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1	2	3	4	5	
7.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1	2	3	4	5	
8. 부모급여	1	2	3	4	5	
자녀 돌봄 시간 지원	9. 모 출산휴가	1	2	3	4	5
	10. 부 출산휴가	1	2	3	4	5
	11. 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	2	3	4	5
	12. 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	2	3	4	5
	13. 모 육아휴직	1	2	3	4	5
	14. 부 육아휴직	1	2	3	4	5
	15.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	2	3	4	5
	16.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	2	3	4	5
	17.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	2	3	4	5
	18.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	2	3	4	5
기타	19. 기타 지원제도( )	1	2	3	4	5

문 5-2. (문 5에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의 불만족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5-2-1. 현금지원 제도

구분	①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② 지원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③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④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⑥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⑦ 기타 ( )
1. 아동수당							
2. 영아수당							
3. 가정양육수당							
6.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							

구분	①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② 지원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③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④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⑥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⑦ 기타 ( )
급)							
7. 출산지원금 등 자체 현금지원금							
8. 부모급여							

문 5-2-2. 의료비 및 건강 지원 제도

구분	①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해서	③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④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⑤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⑥ 기타 ( )
4.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문 5-2-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구분	①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② 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③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④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⑤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⑥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⑦ 기타 ( )
9. 모 출산휴가							
10. 부 출산휴가							

구분	①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② 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③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④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⑤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⑥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⑦ 기타 ( )
11. 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2. 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3. 모 육아휴직							
14. 부 육아휴직							
15.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6.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7.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8.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9. 기타 지원제도							

### Ⅲ. 윤석열정부 육아관련 국정과제 추진 성과

다음은 윤석열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응답 시 이를 참조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과제	주요내용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 신설	• 부모급여 도입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검토
		• 보육교사 처우개선
		• 부모교육 확대

국정과제	주요내용	
	총총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li> <li>•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li> <li>•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li> <li>•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li> <li>•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li> <li>•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li> </ul>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li> <li>•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li> <li>•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li> <li>•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li> <li>•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li> </ul>
	아동·청소년보호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li> </ul>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발달장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li> <li>•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li> <li>•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li> </ul>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한부모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li> </ul>
	다문화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문화 수용성 제고</li> </ul>
	다양한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li> </ul>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고용직 등) 확대</li> <li>•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li> <li>• 난임 휴가기간 확대</li> </ul>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아동학대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li> </ul>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아동 진료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li> <li>•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li> </ul>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식생활 건강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 국가관리 확대</li> </ul>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li> </ul>
	사회적 약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li> </ul>
•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원 SW·AI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SW·AI 역량 제고</li> </ul>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li> </ul>
•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경감</li> <li>• 학습격차 완화</li> </ul>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유보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 추진</li> <li>•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li> <li>•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li> <li>•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li> </ul>

국정과제	주요내용	
	교육 사각지대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통합지원 -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문 1. 다음은 윤석열정부의 육아정책 관련이 있는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중요도와 수행 정도 관련 조사질문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문 1-1. 귀하는 윤석열정부 육아관련 **국정과제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과제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 보통 → →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1)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3)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4)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7)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8)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9)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10)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11)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문 1-2. 육아관련 국정과제가 현 정부 5년 동안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가 얼마나 잘 수행되었다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	매우 못하고 있다	← ← 보통 → →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1)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매우 못하고 있다	← ← 보통 → →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4)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7)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8)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9)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10)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11)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문 2. 다음은 윤석열정부의 육아정책 관련이 있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세부내용들을 정책과제 형태로 제시한** 것입니다. 중요도와 수행정도 관련 조사 질문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문 2-1. 귀하는 윤석열정부 육아관련 **국정과제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보통 → →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b>(부모급여 신설)</b>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2) <b>(보육서비스 질 제고)</b>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3) <b>(종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b>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b>(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b>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국정과제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 보통 → →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겠 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5) <b>(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b>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b>(발달장애인 지원)</b>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b>(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b>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등									
8) <b>(양성평등 일자리 구현)</b>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고용직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9) <b>(아동 진료체계 개선)</b>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10) <b>(식생활 건강권 강화)</b>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 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11) <b>(교통안전)</b>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12) <b>(교원 SW·AI 역량 제고)</b>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									
13) <b>(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b>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국정과제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 보통 → →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겠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								
14) <b>(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b>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15) <b>(유보통합 단계적 추진)</b>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문 2-2. 육아관련 국정과제가 현 정부 5년 동안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 세부내용인 정책과제들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다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과제	매우 못하고 있다	← ← 보통 → →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겠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b>(부모급여 신설)</b>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2) <b>(보육서비스 질 제고)</b>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3) <b>(종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b>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b>(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b>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국정과제	매우 못하고 있다		← ← 보통 → →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5) <b>(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b>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b>(발달장애인 지원)</b>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b>(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b>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등									
8) <b>(양성평등 일자리 구현)</b>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9) <b>(아동 진료체계 개선)</b>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10) <b>(식생활 건강권 강화)</b>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11) <b>(교통안전)</b>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12) <b>(교원 SW·AI 역량 제고)</b>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									
13) <b>(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b> 학교 시설을									

국정과제	매우 못하고 있다		← ← 보통 → →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									
14)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15)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문 3. 윤석열정부 육아관련 국정과제(세부내용 포함)는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와 문제, 수요자의 요구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국정과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 ← 보통 → →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4. 귀하는 향후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4-1. 육아정책 대상 우선순위(1개 선택)

- ① 부모 지원
  - 가정양육/돌봄 역량, 일·가정양립, 임신·출산 지원 등
- ② 서비스 공급자 지원
  - 교육·보육·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유치원·어린이집 등 지원 등
- ③ 아동 지원
  - 건강한 성장·발달, 놀이/학습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등
- ④ 기타 ( )

문 4-2. 육아정책 방향성 우선순위(1개 선택)

- ① 부모 현금지원 정책 강화

- ②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
- ③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
- ④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국공립 확충, 공적 인프라, 비용지원체계 개선 등)
- ⑤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
- ⑥ 기타 ( )

문 5. 귀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왜 사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

- ① 자녀가 원해서
- ②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 ③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 ④ 다른 아이들이 하니깐 뒤쳐질까봐
- 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 ⑥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하는 특별활동/특성화/방과후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 ⑦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하원/하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⑧ 기타( )

문 6. 귀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과제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 →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취약계층 가구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취약계층이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문 7. 귀하는 자녀를 양육에 있어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과제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 →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본인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국정과제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 →					매우 그렇다	잘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3)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자녀가 아프거나, 혼자 있어야만 할 때 등) 돌봐 줄 사람이 없다.								
4) 현재 어린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적다고 생각한다.								

문 8. 귀하의 가구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가구와 비교했을 때, 귀하는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른 가구가 받는 혜택이나 지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 ② 다른 가구가 받는 혜택이나 지원보다 더 적게 받고 있다.
- ③ 다른 가구가 받는 혜택이나 지원 수준과 비슷하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9. 귀하는 윤석열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추진(수행)되고 있는 육아정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성과가 없다	← ← 보통 → →					매우 많이 성과가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 10. 향후 육아정책 방향이나 정책과제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IV. 응답자 배경

문 1. 본인(및 배우자)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퇴, 수료는 졸업이 아님)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⑦ 기타 (    )

본인	배우자

문 2. 귀하 가구는 근로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외벌이가구(본인 근로)    ② 외벌이가구(배우자 근로)    ③ 맞벌이가구

문 2-1. 본인(및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등)  
 ④ 휴직 중  
 ⑤ 무직(주부 포함)  
 ⑥ 기타 (    )

본인	배우자

문 3. 본인(및 배우자)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주  
 ② 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무직(무직, 군인, 학생, 주부 등)  
 ⑧ 기타(    )

본인	배우자

문 4. 귀하의 가구는 다음의 항목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 ①	비해당 ②	모르겠음 ③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			
3) 장애아가족			X
4) 한부모가족			X
5) 다문화가족			X

문 5.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소득은 세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기타소득에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10-1. 본인 근로소득 : ( )만원
- 10-2. 배우자 근로소득 : ( )만원
- 10-3. 기타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지원금, 연금 등) : ( )만원
- 10-4. 월 가구 총 소득 ( )만원

문 6.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자녀 양육비용은 얼마입니까?

※ 주거관리비(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공과금)를 제외하고 자녀에게 사용되는 양육비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6-1. 초등학교 취학 전

- 1) 자녀 양육비용(초등학교 취학 전, 예금/적금/보험 제외) : 월 평균 ( )만원
- 2) 자녀 예금/적금/보험 비용(초등학교 취학 전) : 월 평균 ( )만원

문 6-2. 초등학교 1~3학년

- 1) 자녀 양육비용(초등학교 1~3학년, 예금/적금/보험 제외) : 월 평균 ( )만원
- 2) 자녀 예금/적금/보험 비용(초등학교 1~3학년) : 월 평균 ( )만원

◆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2. 전문가 조사 질문지

## 육아정책 성과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국가수준의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 (I) 연구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 국정과제의 중요도와 파급력을 고려하여 전문가로서 판단하여 잘한 점과 부족한 점, 향후 방향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도와 목적을 감안하여 전문가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3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육 아 정 책 연 구 소

다음은 윤석열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응답시 이를 참조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과제	주요내용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 신설	• 부모급여 도입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검토
		• 보육교사 처우개선
• 부모교육 확대		
•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임신·출산 모바일 앱’ 고도화	
	•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아동·청소년보호책임 강화	•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발달장애인 지원	•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문화 수용성 제고
	다양한 가족지원	•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 고용직 등)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난임 휴가기간 확대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아동학대 방지	•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아동 진료체계 개선	•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 사업」 도입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 급식 국가관리 확대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식생활 건강권 강화	• 급식 국가관리 확대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교통안전	•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국정과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SW·AI 역량 제고</li> <li>•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SW·AI 역량 제고</li> <li>•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경감</li> <li>• 학습격차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li> <li>• 교육 사각지대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 추진</li> <li>•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li> <li>•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li> <li>•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li> <li>• 교육 사각지대 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li> </ul> </li> <li>•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li> </ul>

## 1. 윤석열정부 육아관련 국정과제 추진 성과

문 1. 다음은 윤석열정부의 육아정책 관련이 있는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중요도와 수행 정도 관련 조사질문에 대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국정과제별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국정과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1-1. 귀하는 윤석열정부 육아관련 **국정과제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과제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 보통 → →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3)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4)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7)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8)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9)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10)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11)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문 1-2. 육아관련 국정과제가 현 정부 5년 동안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가 얼마나 잘 수행되었다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	매우 못하고 있다	← ← 보통 → →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국정과제	매우 못하고 있다		← ← 보통 → →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4)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7)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8)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9)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10)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11)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문 2. 다음은 윤석열정부의 육아정책 관련이 있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세부내용들을 정책과제 형태로 제시**한 것입니다. 중요도와 수행정도 관련 조사질문에 대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문 2-1. 귀하는 윤석열정부 육아관련 **국정과제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보통 → →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b>(부모급여 신설)</b>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2) <b>(보육서비스 질 제고)</b>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3) <b>(총총한 아동돌봄체계 마련)</b>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b>(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b>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국정과제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 보통 → →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5) <b>(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b>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b>(발달장애인 지원)</b>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b>(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b>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등										
8) <b>(양성평등 일자리 구현)</b>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고용직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9) <b>(아동 진료체계 개선)</b>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10) <b>(식생활 건강권 강화)</b>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11) <b>(교통안전)</b>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12) <b>(교원 SW·AI 역량 제고)</b>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										
13) <b>(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b>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										
14) <b>(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b>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국정과제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 보통 → →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15) <b>(유보통합 단계적 추진)</b>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문 2-2. 육아관련 국정과제가 현 정부 5년 동안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 세부내용인 정책과제들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다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과제	매우 못하고 있다	← ← 보통 → →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1) <b>(부모급여 신설)</b>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2) <b>(보육서비스 질 제고)</b>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3) <b>(총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b>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b>(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b>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5) <b>(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b>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b>(발달장애인 지원)</b>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국정과제	← ← 보통 → →						매우 잘하고 있다	잘 모르 겠다		
	매우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b>(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b>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등										
8) <b>(양성평등 일자리 구현)</b>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9) <b>(아동 진료체계 개선)</b>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10) <b>(식생활 건강권 강화)</b>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11) <b>(교통안전)</b>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12) <b>(교원 SW·AI 역량 제고)</b>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										
13) <b>(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b>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										
14) <b>(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b>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15) <b>(유보통합 단계적 추진)</b>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문 3. **육아관련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세부내용(정책과제)별로** 귀하의 의견을 계획-실행-수행체계-산출 및 성과(정책효과, 수요자 만족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잘한 점과 미흡한 점, 향후 과제를 작성**해 주십시오.

문 3-1. 부모급여 신설

• **(부모급여 신설)**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2.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 ~ 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5. 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6.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등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8.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 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9. 아동 진료체계 개선

· **(아동 진료체계 개선)**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 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잘한 점	
------	--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10. 식생활 건강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식생활 건강권 강화)</b> 매일 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li> <li>-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li> </ul>
---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11.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통안전)</b>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li> </ul>
---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12. 교원 SW·AI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원 SW·AI 역량 제고)</b>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li> </ul>
--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13.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b>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li> </ul>
---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문 3-14.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시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3-15.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잘한 점	
미흡한 점	
향후 과제	

문 4. 윤석열정부 **육아관련 국정과제(세부내용 포함)**는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와 문제, 수요자의 요구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 ← 보통 → →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4-1.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는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육아정책 방향이나 정책과제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작성해 주십시오.

문 5. 귀하는 향후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1. 육아정책 대상 우선순위(1개 선택)

- ① 부모 지원
  - 가정양육/돌봄 역량, 일·가정양립, 임신·출산 지원 등
- ② 서비스 공급자 지원
  - 교육·보육·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유치원·어린이집 등 지원 등

- ③ 아동 지원
  - 건강한 성장·발달, 놀이/학습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등
- ④ 기타 ( )

5-1-1. 육아정책 대상 우선순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2. 육아정책 방향성 우선순위(1개 선택)

- ① 부모 현금지원 정책 강화
- ② 부모 시간지원 정책 확대
- ③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
- ④ 교육·보육·돌봄 공공성 확대(국공립 확충, 공적 인프라, 비용지원체계 개선 등)
- ⑤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
- ⑥ 기타 ( )

5-2-1. 육아정책 방향성 우선순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II. 응답자 사항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가장 주된 일을 중심으로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학 교수    ② 연구기관 연구원    ③ 공무원    ④ 기타( )

2. 귀하의 전문분야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동(보육)    ② 유아교육    ③ 사회복지    ④ 가족    ⑤ 여성
- ⑥ 교육    ⑦ 정책/행정    ⑧ 경제    ⑨ 기타( )

3. 귀하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3. 육아정책 관련 부모 면담지

#### □ 면담자 일반사항

구분	내용		
거주지역(시군구)	( )		
면담대상 자녀 출생연도 및 성별 <sup>1)</sup>	( )년	( )년	( )년
	<input type="checkbox"/> ① 여자 <input type="checkbox"/> ②남자	<input type="checkbox"/> ① 여자 <input type="checkbox"/> ②남자	<input type="checkbox"/> ① 여자 <input type="checkbox"/> ②남자
자녀 주된 양육유형 (중복 가능)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③ 가정보육		
	<input type="checkbox"/> ④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최대 3명까지 부탁드립니다.

#### □ 부모면담 주요 질의내용

대상	내용
영유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양육 형태(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등)에 따른 어려운 점 및 만족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li> <li>- 기관에 자녀를 보낼 때(또는 가정양육)의 장단점,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에 대한 의견</li> <li>• 자녀양육 형태(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등)에 따른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이용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등 -(유치원 이용시) 방과후 과정 운영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 등 정부지원정책</li> <li>•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용경험, 실효성 등)</li> <li>• 아이돌봄미/민간육아도우미/산후지원도우미 등 개별돌봄지원 서비스를 사용하셨습니다가? 사용하셨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자녀에게 학원 등 사교육은 어떤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li> <li>•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정책이 육아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li> <li>•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li> <li>•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li> <li>• 영유아의 육아와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li> <li>• 정부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정책/지원 수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li> </ul>
초등학교생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입학 전에 주된 자녀 양육형태는 무엇이었습니다가?(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등)</li> <li>•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또는 가정양육)와 비교하여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만족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li> <li>•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합니까? 이용한다면 자녀가 이용하는 방과후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및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li> <li>• 초등자녀 돌봄 시 어려운 점 및 만족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li> <li>• 다음의 돌봄정책을 알거나 귀하 자녀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부모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li> </ul>

	<p>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포함)</li> <li>-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 돌봄 포함)</li> <li>- 늘봄학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용경험, 실효성 등)</li> <li>• 자녀에게 학원 등 사교육은 어떤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li> <li>• 방학 중 초등자녀 돌봄은 어떻게 하십니까?</li> <li>• 초등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체감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li> <li>•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li> <li>• 초등 자녀의 돌봄을 위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ul>
--	---

※ 부모님께서 해당하시거나,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부록 4. 분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정과제

〈부록 표 3-1〉 분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정과제

규정목표 및 전략	규정과제	규정목표	주요내용
<p>• <b>규정목표 3. 따뜻한 국민</b> [약속]. 필요한 국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p>	<p>• <b>규정과제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b></p>	<p>• <b>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b> 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우 개선) 임근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li> </ul>
<p>• <b>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b></p>	<p>• <b>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급여 신설)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li> <li>*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li> <li>• (보육서비스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을 양육지원 강화</li> <li>-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li> <li>• (종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시가지대 보충</li> <li>-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li> <li>•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li> <li>- 전문인력이 기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 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li> </ul>	
		<p>• <b>아동·출산 지원, 영유아~ 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b></p>	
		<p>• <b>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보호책임강화) 보호아동 탈시설로드맵 마련, 가정보호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li> </ul>

규정목표 및 전략	규정과제	규정목표	주요내용
			<p>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첨장애인)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li> <li>•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li> <li>• (다문화가족 지원) 역량기 다문화 이등·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제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li> <li>•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li> <li>•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직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li> </ul> </li> <li>•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li> <li>•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li> <li>• (아동 진로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li> <li>•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금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금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 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 전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li> </ul> </li> </ul>
<p>[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p> <p>[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실현</li> <li>•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li> <li>•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li> <li>•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li> <li>•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li> <li>•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li> <li>•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li> <li>•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li> <li>•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li> <li>•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li> <li>•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li> <li>•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li> <li>•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 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li> </ul>	



〈부록 표 3-2〉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보육 관련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국정과제	내용	정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	개요
•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치우개선 • 부모급여 • 아동당 교사비율 조정 • 시설면적 상향 검토 • 보육교사 처우개선 • 부모교육 개선 • 시간제보육 개선 • 유보통합 •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 보육교사 처우개선 • 부모급여 도입 •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 유아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 • 어린이집 공간구성 개선 및 재구조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 •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 부모교육 확대 •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유보통합 추진 •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임신·출산 모바일업' 고도화 •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 가정에서의 아이 돌봄 지원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국정과제	내용	정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	개요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영유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아 대상 보육서비스 인프라 및 교사 역량 강화 •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고용직 등)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난임 휴가기간 확대	
•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유아 놀이형 미디어교육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 내 아동인권 존중 강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로체계 -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급식 국가관리 확대	•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 • 어린이집 안전 관리 강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교원 SW·AI 역량 제고	• 아동학대 예방관리 강화 •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국정과제	내용	정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	개요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li> <li>•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형 교육인프라 조성</li> <li>•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li> </ul>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 추진</li> <li>•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li> <li>• 시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li> <li>•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li> <li>• 교육 사각지대 통합지원 -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li> <li>•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 추진</li> <li>•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li> <li>• 시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li> <li>•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보초 연계 강화</li> <li>•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 강화</li> <li>•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li> <li>•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li> </ul>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주: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부록 5.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표

(부록 표 4-1) 초등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 불만족 이유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리가 까다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 에 이용이 어려움	급식을 제공하지 않음	차량을 운행하지 않음	기타	계(수)	단위: %(명)
												61.5
전체	61.5	15.4	7.7	0.0	0.0	0.0	0.0	0.0	0.0	7.7	100.0 (13)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66.7	33.3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	
중소도시	75.0	0.0	25.0	0.0	0.0	0.0	0.0	0.0	0.0	0.0	100.0 (4)	
읍면지역	60.0	0.0	0.0	0.0	0.0	0.0	0.0	0.0	20.0	20.0	100.0 (5)	
$\chi^2(df)$					12.865(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77.8	11.1	0.0	0.0	0.0	0.0	0.0	0.0	11.1	0.0	100.0 (9)	
외벌이	25.0	25.0	25.0	0.0	0.0	0.0	0.0	0.0	0.0	25.0	100.0 (4)	
$\chi^2(df)$					6.545(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	
351~500만원	66.7	33.3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	
501~600만원	33.3	0.0	0.0	0.0	0.0	0.0	0.0	0.0	33.3	33.3	100.0 (3)	
601~750만원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	
751만원 이상	66.7	33.3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	
$\chi^2(df)$					15.438(16)							

(부록 표 4-2) 초등돌봄 서비스(초등학교 방과후과정) 불만족 이유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 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 에 이용이 어려움	급식을 제공하지 않음	차량을 운행하지 않음	기타	계(수)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전체	28.6	7.1	21.4	0.0	14.3	7.1	7.1	0.0	14.3	0.0	100.0 (14)
지역구모											
서울특별시	5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100.0 (2)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0	0.0	0.0	0.0	25.0	0.0	25.0	0.0	0.0	0.0	100.0 (4)
중소도시	16.7	0.0	50.0	0.0	16.7	16.7	0.0	0.0	0.0	0.0	100.0 (6)
읍면지역	0.0	50.0	0.0	0.0	0.0	0.0	0.0	0.0	50.0	0.0	100.0 (2)
$\chi^2(df)$					21.583(1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0	0.0	20.0	0.0	0.0	0.0	20.0	0.0	40.0	0.0	100.0 (5)
외벌이	42.9	0.0	28.6	0.0	28.6	0.0	0.0	0.0	0.0	0.0	100.0 (7)
$\chi^2(df)$					6.171(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
351~500만원	20.0	20.0	20.0	0.0	40.0	0.0	0.0	0.0	0.0	0.0	100.0 (5)
501~600만원	5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100.0 (2)
601~750만원	33.3	0.0	33.3	0.0	0.0	33.3	0.0	0.0	0.0	0.0	100.0 (3)
751만원 이상	0.0	0.0	0.0	0.0	0.0	0.0	50.0	0.0	50.0	0.0	100.0 (2)
$\chi^2(df)$					23.256(24)						

〈부록 표 4-3〉 초등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불만족 이유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깨다로움	접근성 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움	급식을 제공하지 않음	치료를 운행하지 않음	기타	단위: %(명)	
											계(수)	(%)
전체	0.0	0.0	20.0	20.0	0.0	0.0	20.0	0.0	0.0	40.0	100.0	(5)
지역구교												
서울특별시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0	0.0	0.0	33.3	0.0	0.0	33.3	0.0	0.0	33.3	100.0	(3)
중소도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
읍면지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chi^2(df)$					6.667(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0.0	33.3	33.3	0.0	0.0	0.0	0.0	0.0	33.3	100.0	(3)
외벌이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
$\chi^2(df)$					4.000(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
351~500만원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
501~600만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
601~750만원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
751만원 이상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
$\chi^2(df)$					15.000(12)							

〈부록 표 4-4〉 초등돌봄 서비스(다함께돌봄센터) 불만족 이유

구분	서비스 질이 낮음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접근성 이 떨어진	비용이 부담됨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 에 이용이 어려움	급식을 제공하지 않음	차량을 운행하지 않음	기타	계(수)	단위: %(명)
												25.0
전체	25.0	0.0	0.0	0.0	0.0	25.0	25.0	0.0	25.0	0.0	100.0	(4)
지역구												
서울특별시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100.0	(2)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중소도시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
읍면지역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1)
$\chi^2(df)$					8.00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100.0	(2)
외벌이	0.0	0.0	0.0	0.0	0.0	0.0	50.0	0.0	50.0	0.0	100.0	(2)
$\chi^2(df)$					4.000(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	0.0	0.0	0.0	0.0	0.0	50.0	0.0	50.0	0.0	100.0	(2)
351~500만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501~600만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601~750만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751만원 이상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100.0	(2)
$\chi^2(df)$					4.000(3)							

〈부록 표 4-5〉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2순위)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뒤쳐질까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하는 특별활동·특성화·방과후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하원/방과 후에 돌보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수)	단위: %(명), 점
										계(수)
전체	8.1	18.5	44.7	46.4	16.7	20.1	44.7	0.9	200.0	(2000)
지역구분										
서울특별시	7.3	17.8	49.3	42.0	18.6	24.1	40.2	0.5	200.0	(38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9.3	18.5	44.2	48.4	15.6	18.0	44.7	1.2	200.0	(665)
중소도시	7.2	19.0	42.2	47.6	17.3	20.2	45.7	0.9	200.0	(759)
읍면지역	8.2	17.9	47.2	43.6	13.8	19.0	49.7	0.5	200.0	(195)
$\chi^2(df)$				27.418(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7.7	18.4	42.9	45.5	14.9	19.3	50.6	0.6	200.0	(1004)
외벌이	8.5	18.9	46.2	47.6	18.1	21.0	38.4	1.3	200.0	(948)
$\chi^2(df)$				12.411(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7.3	17.1	43.0	49.1	17.8	21.0	42.8	1.8	200.0	(381)
351~500만원	9.2	18.5	44.8	46.9	16.4	21.0	42.4	0.7	200.0	(542)
501~600만원	7.5	17.7	50.3	45.6	18.2	18.2	42.0	0.6	200.0	(362)
601~750만원	8.0	17.7	42.2	46.5	15.9	18.0	51.1	0.6	200.0	(327)
751만원 이상	7.7	21.4	43.0	43.8	14.9	21.4	46.9	0.8	200.0	(388)
$\chi^2(df)$				33.373(28)						

〈부록 표 4-6〉 다른 가구 대비 정부 혜택 및 지원(인식 수준: 자녀 본인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9	1.6	3.9	19.0	18.4	22.8	33.5	100.0 (1992)	5.55	1.37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5	1.6	2.1	17.5	20.2	23.9	34.2	100.0 (377)	5.64	1.3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0.6	1.2	5.0	17.8	17.9	22.5	35.0	100.0 (663)	5.59	1.37
중소도시	1.2	1.5	3.4	19.6	18.6	23.0	32.8	100.0 (757)	5.53	1.38
읍면지역	1.0	3.1	5.1	23.6	15.9	21.0	30.3	100.0 (195)	5.34	1.48
$\chi^2(df) / F$				18.097(18)						2.183
맞벌이 여부										
맞벌이	0.6	1.9	3.9	19.4	20.4	23.4	30.3	100.0 (999)	5.49	1.35
외벌이	1.2	1.3	3.8	18.0	16.7	22.6	36.4	100.0 (945)	5.61	1.39
$\chi^2(df) / t$				12.600(6)						-2.02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8	1.1	2.9	16.9	15.3	18.5	44.6	100.0 (379)	5.79	1.36
351~500만원	0.9	1.1	3.5	18.7	16.3	23.6	35.8	100.0 (539)	5.62	1.36
501~600만원	0.3	1.1	3.6	18.6	20.2	26.9	29.4	100.0 (361)	5.55	1.27
601~750만원	1.8	0.9	4.3	20.2	20.2	21.5	31.0	100.0 (326)	5.44	1.42
751만원 이상	0.5	3.6	5.2	20.7	21.2	23.3	25.6	100.0 (387)	5.30	1.41
$\chi^2(df) / F$				60.373(24)***						6.822***

\*  $p < .05$ , \*\*\*  $p < .001$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부록 표 4-7〉 다른 가구 대비 정부 혜택 및 지원(인식 수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	3.3	4.6	18.0	16.2	20.0	34.2	100.0 (1983)	5.37	1.64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1	4.2	4.0	15.9	16.4	20.7	36.6	100.0 (377)	5.49	1.57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3.3	3.6	4.2	17.1	16.4	19.8	35.5	100.0 (660)	5.41	1.63
중소도시	4.3	2.4	4.9	18.5	15.8	20.5	33.6	100.0 (752)	5.35	1.65
읍면지역	5.2	4.1	5.7	22.7	17.0	17.5	27.8	100.0 (194)	5.06	1.72
$\chi^2(df) / F$				17.111(18)						3.1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	2.2	2.6	15.6	16.7	22.2	38.8	100.0 (992)	5.65	1.45
외벌이	5.5	4.7	6.6	20.6	16.0	17.9	28.7	100.0 (943)	5.06	1.76
$\chi^2(df) / t$				68.944(6)***						8.07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5	2.1	5.6	21.7	14.8	19.0	32.3	100.0 (378)	5.26	1.66
351~500만원	3.4	3.5	5.8	19.0	16.0	18.3	34.0	100.0 (536)	5.32	1.65
501~600만원	3.6	4.2	4.7	19.0	14.2	18.4	35.8	100.0 (358)	5.34	1.69
601~750만원	4.6	2.8	2.2	15.7	17.0	24.4	33.3	100.0 (324)	5.44	1.62
751만원 이상	2.3	3.9	3.9	13.7	19.1	21.2	35.9	100.0 (387)	5.51	1.55
$\chi^2(df) / F$				31.434(24)						1.393

\*  $p < .05$ , \*\*\*  $p < .001$ .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부록 표 4-8〉 다른 가구 대비 정부 혜택 및 지원(인식 수준: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자녀가 아프거나, 혼자 있어야만 할 때 등) 돌봐 줄 사람이 없다.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	4.1	4.9	14.5	13.3	16.9	42.8	100.0 (1969)	5.52	1.7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7	5.6	5.9	13.1	13.9	19.0	39.8	100.0 (374)	5.46	1.7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3.5	3.8	4.1	15.7	13.8	17.0	42.0	100.0 (654)	5.52	1.68
중소도시	3.6	3.6	5.0	14.2	13.0	16.6	44.0	100.0 (747)	5.55	1.69
읍면지역	4.6	4.1	5.2	14.4	11.3	13.9	46.4	100.0 (194)	5.51	1.79
$\chi^2(df) / F$			11.485(18)						.239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	3.4	4.7	14.8	13.2	17.1	44.5	100.0 (985)	5.62	1.61
외벌이	4.3	4.9	5.0	14.6	13.8	17.2	40.2	100.0 (936)	5.41	1.76
$\chi^2(df) / t$			10.068(6)						2.72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5	4.8	4.8	15.8	14.7	13.9	42.4	100.0 (373)	5.45	1.73
351~500만원	2.6	3.4	3.7	15.3	13.2	15.1	46.7	100.0 (537)	5.65	1.62
501~600만원	3.9	3.6	4.5	11.5	16.8	17.6	42.2	100.0 (358)	5.55	1.68
601~750만원	3.1	4.7	4.0	16.2	9.0	20.2	42.7	100.0 (321)	5.55	1.69
751만원 이상	4.7	4.5	7.6	13.7	12.1	18.9	38.4	100.0 (380)	5.34	1.79
$\chi^2(df) / F$			35.178(24)						2.066	

\*  $p < .05$ , \*\*  $p < .01$ , \*\*\*  $p < .00$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부록 표 4-9> 다른 가구 대비 정부 혜택 및 지원(인식 수준: 현재 어린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적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	1.1	2.4	12.9	12.8	19.1	50.2	100.0 (1930)	5.92	1.38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9	1.6	1.6	12.4	12.9	19.1	50.5	100.0 (372)	5.92	1.4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1.4	0.6	2.2	10.8	12.2	19.7	53.1	100.0 (639)	6.03	1.32
중소도시	1.4	1.2	2.7	14.0	13.0	19.9	47.7	100.0 (728)	5.87	1.39
읍면지역	1.6	1.6	3.1	16.8	13.6	14.1	49.2	100.0 (191)	5.79	1.48
$\chi^2(df) / F$				15.287(18)						2.3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	0.9	3.0	14.7	12.7	19.5	47.8	100.0 (971)	5.86	1.40
외벌이	1.4	1.3	1.6	11.4	13.0	19.4	51.8	100.0 (912)	5.99	1.35
$\chi^2(df) / t$				9.767(6)						-2.02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1	0.8	1.6	7.6	13.0	16.5	59.5	100.0 (370)	6.18	1.24
351~500만원	1.2	0.8	0.8	13.4	10.9	18.8	54.1	100.0 (521)	6.05	1.29
501~600만원	0.3	0.3	2.3	11.2	14.0	21.5	50.4	100.0 (349)	6.05	1.19
601~750만원	2.3	1.3	5.5	14.5	12.5	19.6	44.4	100.0 (311)	5.70	1.53
751만원 이상	2.9	2.6	2.9	17.7	14.2	19.5	40.1	100.0 (379)	5.57	1.57
$\chi^2(df) / F$				79.638(24)***						13.586***

\*  $p < .05$ , \*\*  $p < .01$ , \*\*\*  $p < .00$

주: 7점 척도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